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2021.

충남자치경찰위원회

차 례

I. 비전수립 개요	1
1. 자치경찰 비전수립 배경 및 목적	2
2. 자치경찰 비전수립 성격과 범위	6
3. 비전설정 주요 내용	11
II. 충남의 치안실태와 여건	15
1. 자치경찰제도 추진 현황 및 치안환경	16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46
3. SWOT 분석	50
4. 설문조사 분석	52
5. 비전 가치 도출 조사 분석	89
III. 충남 자치경찰 비전과 목표	93
1. 충남 자치경찰 비전과 목표	94
2. 충남 자치경찰 비전 목표와 전략방향	97
IV.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148
1.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152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170
3.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190
4.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217
5.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240
V. 행·재정계획 및 제언	257
1. 행정계획	258
2. 예산계획	261
2. 평가계획	264

1. 자치경찰 비전수립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 경찰법 개정과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 2020년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로 30년간 논의된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본격화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시행으로 시범 실시된 2006년 이후 14년 기간에 걸친 논의의 축적 결과
 - 1948년 국립경찰의 출범 이래 “정치적 중립성 결여, 국민을 위한 민주성 부족, 관료적 권위주의,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자치성과 민생안정의 치안서비스 결여”라는 문제점 해소의 기회 부여
 - 자치경찰에 대한 시도지사의 권한범위가 협소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으로 인한 혼란우려가 지적되는 등 한계 노정
 - 조직체계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기능분리를 통한 신속한 제도 도입 및 시행과 예산 절감 효과라는 면에서 제도도입 자체만으로 의의
- 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경찰의 정치적 중립, 지방분권 실현, 민주적 통제(주민참여) 실현
 - 지방자치의 종합행정력 제고와 자치행정의 집행력(경찰력) 확보 및 주민 의사에 부합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
 - 제도 도입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전략적 방향 마련이 요구

■ 민생치안서비스 제공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주민 생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의무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본적인 토대로 가장 작은 단위에서 자치 사무를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근본 취지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보다

제1장 비전수립 개요

제1절 자치경찰 비전수립 배경 및 목적

제2절 자치경찰 비전수립 성격과 범위

제3절 비전설정 주요내용

효율적으로 수행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구분근거는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있으며,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찰로서 각 지방 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
 -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의 분권은 권력의 분권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존재하여 자치경찰은 행정적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제도로 인식, 수사권의 배분에 있어서 많은 쟁점과 갈등이 존재
 - 현행 제도가 어느 정도 긍정적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향후 자치경찰제의 확대 여부 및 그 속도가 결정
 - 이를 위해 주민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고와 범죄 등의 발생에 대비한 전방위 지역치안행정시스템 구축이 필요
 - 자치경찰제도의 정립과 실시는 자치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냐에 의해 자치경찰제의 성공여부 판단
 - 연계 방안의 마련은 진행될 자치경찰제의 본격 실시에 많은 함의를 제공하며 주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제도화 하는 방향의 진전이 요구

■ 치안 서비스 요구 기준 변화

- 현대사회는 경찰조직이 국민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적합한 조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
 - 과거 권위주의와 체제질서 수호를 위한 경찰의 작용에 대한 반감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나라 경찰개혁의 최대과제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민주적 통제 구현으로 정리
- 범죄의 본질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른 하이테크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등 신종범죄에 대한 불안감 증대
- 과거 사생활의 영역으로 치부한 주폭, 가정폭력, 학교 폭력, 아동학대 등도 점차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자살이나 마약, 테러 등 안전 위협요인 증가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방면의 방법활동 수요 증가와 치안서비스 요구 민감도 확대

- 각종 재난 및 사고 상황에서 질서유지의 소극적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안전관리를 위한 현장대응인력으로서 그 역할의 범위 확장이 요구
- 주민은 정부의 치안관리정책이 생활의 불안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사회 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 의무
 - 주민은 각 지역마다 특성을 가진 다양한 치안 수요의 해결에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할 것을 기대
 - 섬세하고 친근한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생활안전 보장 요구
- 치안서비스 제공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위험정보에 대해서는 상호공유를 통해 불안감의 해소 욕구 증가
 - 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유연하고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 필요

■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로의 전환 요구

- 민주화 시대 경찰활동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민접촉을 통한 접점 확대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 신뢰 구축이 필요
 - 2003년부터 지역경찰제 시행, 안전도시 프로그램, 안전지수 평가, 사회적 약자보호 등 국민 생활안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경찰활동에 도입
- 치안의 확보는 경찰만의 임무가 아니며, 안전 증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은 주민이 경찰과 동등한 입장에서 역할 수행 필요
 - 경찰과 지역사회가 범죄, 교통안전 및 지역사회 제반문제를 해결해가는 치안 공동생산체제로 변화
- 의식개선과 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통해 지역사회 치안안전이 구성원 모두의 책무로 귀결될 수 있는 제도의 운영기반 필요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 완료됨에 따라 자치경찰제 중장기 비전과 전략 수립 추진

■ 명실상부한 30년 지방분권의 완성

- 자치경찰의 본격시행으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주민 스스로 결정
 - 기존의 국가경찰로 해소하기 어려운 공동체의 민생현안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특색과 필요에 맞게 자치경찰 사무의 목표 수립

- 치안자치의 도입으로 행정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은 이른바 ‘지방자치의 완성’을 이룸
 - 공동체의 안전과 치안복지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

2) 계획의 목적

- 자치경찰 본연의 목적달성 토대 마련
 - 주민의사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
- 충청남도의 여건에 부합한 치안정책 마련
 - 자치경찰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충청남도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의 실현과 동시에 참여주체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마련
 - 충청남도의 자치경찰 체계를 통합적·유기적으로 관리하여 미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 설정
-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방향 제시
 - 본 연구에서 자치경찰제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표와 전략 및 지향점을 설정하고, 자치경찰 조직이 추진가능한 사업을 제안하는 안(案)을 구상

2. 자치경찰 비전수립 성격과 범위

1) 기본방향

- 민·관 협력을 통한 기본구상
 - 행정기관 주도의 일방적 계획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서로 협력하여 자치경찰제의 인식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
 - 비전 수립과정에서 도민과 관련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여 도민의 안전 민감성을 높이고, 도민이 체감 가능한 비전을 수립
 - 도민 안전을 위한 비전 수립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이후 정책 추진과정에 도민의 합의 유도
- 조화와 형평의 지역밀착형 치안정책 구현
 - 도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과 균형의 공감대 형성
 - 자치경찰과 관련한 생활환경과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있어 보다 효율적 치안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향 설정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상호협력과 역량 강화
 - 자치경찰위원회 및 충청남도 실국, 충남경찰청 관련 협력조직들과의 거버넌스를 통해 실효적인 사업을 구상
- 자치경찰 부문별 발전방향 제시
 - 변화된 제도와 환경을 반영하여 충남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부문별 발전방향을 제시
 - 국내의 제도적 변화를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강화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비전과 전략을 마련

2)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 자치경찰 최상위 계획

- 생활환경 및 여성·청소년, 교통 등의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 최상위 목표

■ 자치경찰 중장기 비전의 제시

- 발생 가능한 사건 및 사고에 대하여 종합적인 목표와 추진전략을 포함하는 중장기 비전

■ 구체적 하위계획의 총괄계획

- 충청남도 자치경찰 정책과 계획을 총괄하는 계획

■ 자치경찰과 도정의 연계계획

- 자치경찰위원회 뿐 아니라 자치경찰 영역과 도정의 관련 영역을 연계하는 계획

■ 자치경찰의 부문별 발전방향을 담은 계획

- 그 동안 경찰청 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충청남도 자치경찰 차원의 각 부문별 계획을 구상

(2) 계획의 역할

■ 자치경찰에 대한 미래상을 제시

- 충남도민에게 변화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희망을 고취

■ 충남도정 및 경찰청에 자치경찰 관련 부문별 정책방향 제시

- 자치경찰의 중장기적 발전방향과 정책과제 제시를 통해 충남도정 및 경찰청의 부문별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방향과 방침을 제시

3)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6년으로 설정
- 기준년도 : 2021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전역

■ 내용적 범위

- 변화하는 제도 및 환경여건에 따라 충청남도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자치경찰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를 강구
- 치안 및 안전사고 현황 및 충남도의 특성 분석
 - 사고 발생 특성 분석
 - 충청남도의 치안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 전문가 의식 수요 조사
- 자치경찰제 관련 제도 분석
 -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 변화 분석
 -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분야별 계획 분석
- 자치경찰비전 설정
 - 충남자치경찰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실행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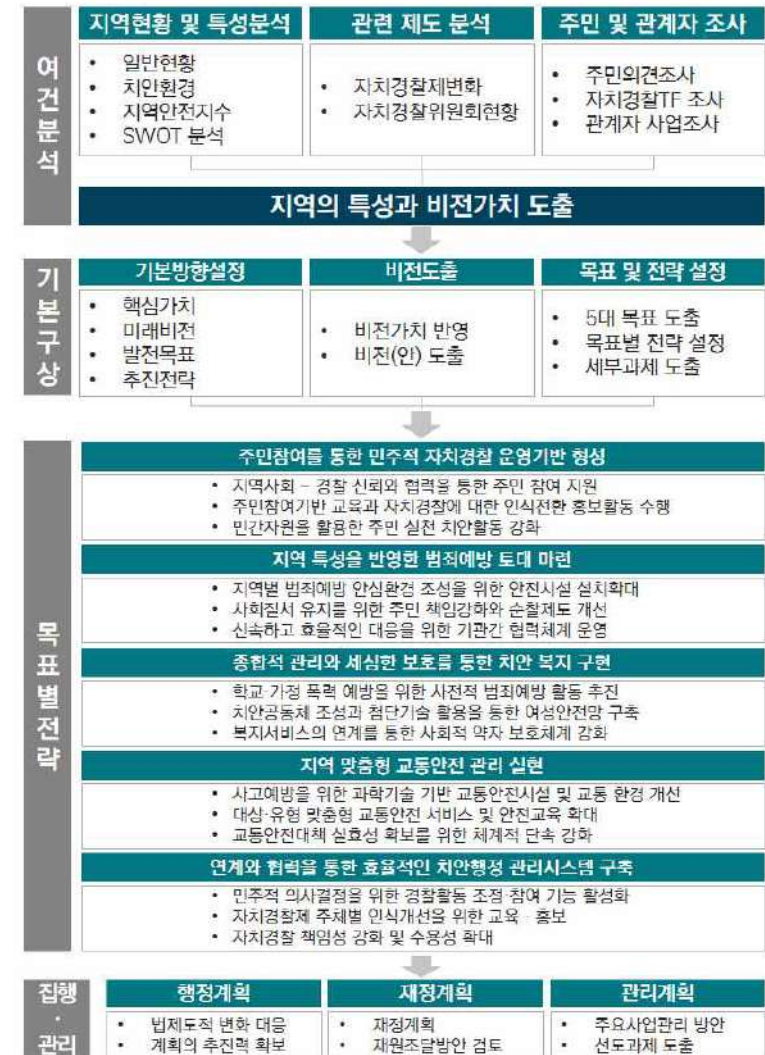
4) 계획수립의 절차

■ 계획수립 체계

- 자치경찰비전은 자치경찰위원회 및 경찰청과 충남도정 및 도민참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적인 계획수립과정을 통해 새로운 비전과 전략, 실행과제를 마련
- 최초의 자치경찰비전 수립수립으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해 T/F를 운영하여 실효적인 계획수립 추진
-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의 보고와 비전에 대한 결정 및 논의구조를 형성

■ 계획수립 경위

- 5/7 과업 일정 및 내용 협의
- 5/17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보고(위원장 공석)
- 5/25 자치경찰 비전TF 논의 및 연구내용 조정
- 6/3 자치경찰위원회 국·과장 인터뷰
- 6/25 자치경찰위원회 공동 정책 세미나
- 7/2 자치경찰 비전수립TF 1차 회의 진행 및 자치경찰위원장 보고
- 7/8~9 비전수립 및 추진전략 워크숍 진행 및 제주자치경찰단 방문
- 7/13 비전, 목표 및 전략 설정 관련 연구진 회의 진행
- 7/16 목표 및 전략에 따른 도출 사업 설문조사 관련 연구진 회의 진행
- 7/21 자치경찰 지구대, 파출소 현장조사
- 7/22 경찰청 설문조사 결과 활용계획 관련 연구진 회의 진행
- 7/29 특별사법경찰 업무조사
- 7/30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 7/30 자치경찰 비전수립TF 2차 회의(코로나로 인해 서면 발송)
- 8/4 내부 연구진 및 외부비상임연구위원 1차 집필진 회의 진행
- 8/15 치안네트워크 인터뷰 진행 (1차)
- 8/19 치안네트워크 인터뷰 진행 (2차)
- 8/26 비전수립TF 2차 회의 진행
- 8/30 1차 원고 취합
- 9/3 비전수립 TF 3차회의 및 외부비상임연구위원 2차 집필진 회의
- 9/10 비전수립 TF 4차회의
- 9/16 자치경찰위원회 정책토론회
- 9/25 자치경찰위원회 과제 진행상황 보고
- 10/7 ~ 8 충남경찰청 관계부서 의견조사
- 10/15 중간보고회 사전보고 진행
- 10/25 중간보고회
- 11/30 과제 진행상황 보고
- 12/1 ~ 12/10 과제별 추진체계 및 연차별 예산계획 의견수렴
- 12/13 자치경찰 비전TF 회의 최종 비전(안) 확정
- 12/27 자치경찰위원회 최종 보고



[그림 1] 계획수립 단계별 주요 내용

3. 비전설정 주요내용

1) 비전 설정 기본구조

- 최종 비전은 충남의 안전한 치안 환경을 구현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제안이 가능하도록 설정
- 목표는 실행관리 지표로써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목록을 작성
- 비전 수립 및 달성을 위한 기본가치를 중심으로 핵심키워드를 도출
- 비전달성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5개의 전략과제를 도출
- 전략과제별 추진과제를 설정

2) 비전 설정 방법

- 비전은 현황과 수요 분석, TF, 자치경찰위원회 워크숍 및 토의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설정
- 사전 의견조사의 대상은 자치경찰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 경찰청, 이해관계자에 대한 개인 또는 그룹 인터뷰를 실시
- 워크숍을 통하여 비전(안)을 도출하고, 이 가운데 2개 안을 자치경찰위원회 토론에 제안하여 재설정
- 비전도출을 위한 항목
 - 과거의 우리는 어떠했는가?
 - 우리가 지녀야할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역량)은 무엇인가?
 - 우리가 바라는 미래의 모습은 어떠한가?
 - 미래의 바라는 모습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 선정된 비전안에 대한 실행전략과 의미해석 제안

3) 비전과 목표

- 확정된 최종 비전 안을 바탕으로 목표와 전략을 설정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4)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는 중장기 계획의 추진전략과 성과관리의 핵심성공요소를 관리하는 구조로 구성
 - 자치경찰위원회 계획과 각 과의 사업에 대한 의견 반영
 - 충남도청 및 유관기관의 자치경찰 사업 연계
 - 도민 수요조사 및 치안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전략 과제 선정
- 최종 확정된 비전에 대하여 비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3~5개의 실행 전략과제를 설정
- 지역의 환경적·사회적 여건과 치안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구성
 - 전략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참여와 소통 등 민관 협력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구성

5) 전략 실행을 위한 추진과제

- 각 추진과제는 전략과제의 효율적 실행을 위하여 구현할 과제들을 설정
 - 법제도분야, 생활안전분야, 여성·청소년분야, 교통분야, 참여와 소통분야로 구분하여 대책을 마련
- 도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천 가능한 추진과제 발굴
 - 설문조사 현장방문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모아 과제에 반영
 - 자치경찰에 대한 제도적 기반 확충
- 제도 도입 초기단계로서 저비용과 실효성 중심의 대책에 우선을 두며, 도 및 경찰청 업무 및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

6) 민관협력체계 운영방안

- 워크숍 등에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를 유도하여 협력의 기초를 제공
- 도민과 전문가 위원의 참여를 통하여 실질적인 상호협력을 강화
 - 정보의 공유, 의사소통 및 협의장치 마련 등
- 향후 정기적 도민 모니터링 제도로 연결하여 도의 각종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는 단계를 공식화

7) 비전설정 추진체계

(1) 비전도출 과정

■ 제도의 변화와 발전방향 반영

- 자치경찰제도 및 치안 환경의 변화, 조직 변화, 행정 여건의 변화 및 도내 치안 및 안전사고 발생 현황, 국내의 사례를 바탕으로 발전방향을 반영

■ 도민의 자치경찰제 의식의 적극 반영

- 자치경찰제 및 치안 환경에 대한 도민 의식 조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적극적인 사업과 연계 추진
- 자치경찰제와 관련한 필요사업들에 대하여 자치경찰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TF의 검토를 통해 추진사업을 구상

■ 자치경찰 TF와의 적극적 연계 협력

- 구상된 비전과 전략들을 자치경찰TF와 공유하고 재구성하며 영역별로 세부추진과제를 모색

■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선정

- 도출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비전 수립 프로세스에 따라 비전을 확정
 - 공감, 참여, 합의를 통해 비전을 설정
- 제시된 비전 안을 자치경찰위원회의 선정과정을 거쳐 확정

(2) 참여주체 구성 및 역할

■ 비전T/F

- 연구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자치경찰위원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비전T/F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포함
- 분야별 비전 전략 실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과제 발굴 및 협의

■ 자문위원회

- 전문성이 확보된 전문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
-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 및 목표, 추진과제 제안 및 검토

■ 자치경찰위원회

- 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한 최종 선정 등

■ 충남연구원(연구진)

- 자치경찰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논리 개발
 - 자치경찰에 대한 선행 조사를 통해 1차 정보를 수집
 - 1차 정보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국내 관련 부처 및 시민단체 등에 대한 조사 및 면담을 통해 2차 정보를 수집
- 충남도내 치안 및 안전 현황과 도민의견조사
 - 기존 설문 및 자치경찰 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 공무원,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
- 자치경찰제 추진계획을 반영한 비전 실행전략 수립

■ 추진일정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현황 및 여건 분석	도민 의견 수렴	전략 과제 도출	비전 안 마련	목표 및 추진전략 확정	실행 과제 확정	추진체계 및 예산계획	최종 보고서 작성

1. 충남의 자치경찰제 추진현황 및 치안환경

1. 자치경찰제도 추진 현황

■ 전국최초 자치경찰조례 제정

- 충남도는 전국최초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 자치경찰사무의 범위, 감사, 위원회 구성과 운영, 예산 관련 사항 규정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활동에 관한 사무>

구분	사무의 범위 기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운영	지역주민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 설치·운영 지역주민안전을 위한 범죄예방진단 지역주민안전을 위한 순찰과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범죄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관리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지원 재해발생 시 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및 교통 관리 등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긴급구조지원 활동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학교·성폭력의 예방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노인·장애인에 대한 보호 활동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실종·예방·대응 활동 아동 대상 범죄예방 및 아동안전 보호활동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보호 활동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등 보호 활동 학교폭력의 근절·예방과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피해자 등 보호 활동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예방활동
일상생활 관련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경범죄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 공공질서 유지 공공질서에 반하는 풍속·성매매사범 및 사행행위 지도·단속 그 외 경찰의 사무로 규정된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단속 업무

제2장 충남의 치안실태와 여건

제1절 충남의 자치경찰제 추진현황 및 치안환경

제2절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제3절 SWOT 분석

제4절 설문조사 분석

제5절 비전 가치도출 조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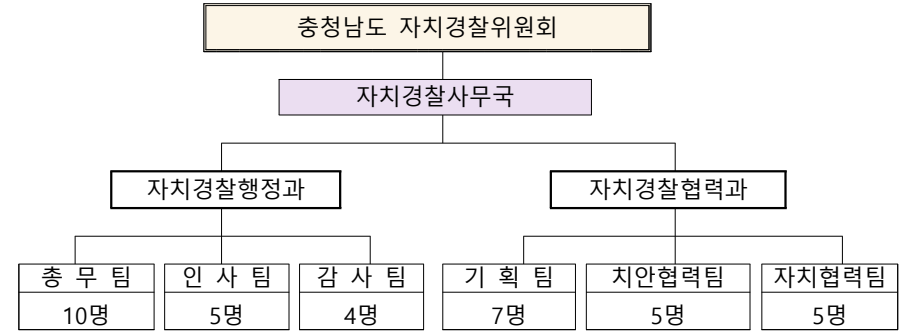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구분	사무의 범위 기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관리·운영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등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주민참여 지역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교통관련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차 통행허가 처리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기관 합동점검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신청 처리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법인 등 지정
그 밖에 지역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 처리 운전면허 관련 민원업무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정체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처리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구분	사무의 범위 기준
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지역 내 다중운집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지원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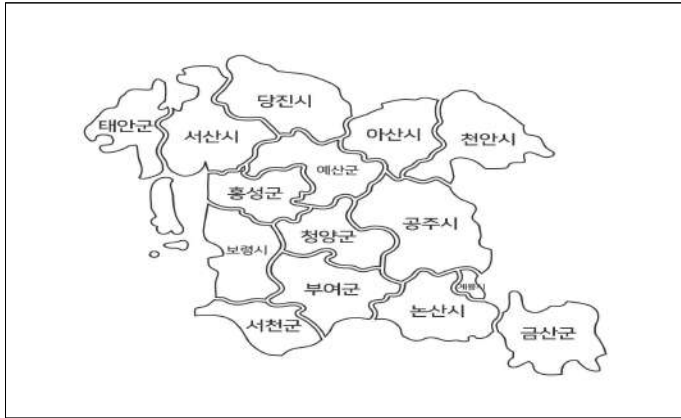
- 도는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명을 선임
- 경찰, 행정, 법학 관련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내 사무국 가구를 운영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기구 구성 및 운영

- 사무국은 2과, 6팀, 36명의 인원으로 구성(도 23명, 경찰 13명)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경찰) 정원						
			4급 (총경)	5급 (경정)	6급 (경감, 경위)	7급 (경사)	8급 (경장)	9급 -	공무직
계	36(23/13)	2	2(1/1)	6(3/3)	14(8/6)	4(2/2)	3(2/1)	4(4/-)	1(1/-)
자치경찰행정과	19(13/6)	2	1(1/-)	3(2/1)	8(4/4)	2(1/1)	1(1/-)	1(1/-)	1(1/-)
총무팀	10(9/1)	2	1/-	1/-	2/1(경위)	1/-	1/-		1/-
인사팀	5(2/3)			-/1	1/2(경감 1, 경위 1)			1/-	
감사팀	4(2/2)			1/-	1/1(경감)	-/1			
자치경찰협력과	17(10/7)		1(-/1)	3(1/2)	6(4/2)	2(1/1)	2(1/1)	3(3/-)	
기획팀	7(4/3)		-/1	-/1	2/1(경감)			2/-	
치안협력팀	5(3/2)			-/1	1/-	1/-	-/1	1/-	
자치협력팀	5(3/2)			1/-	1/1(경위)	-/1	1/-		

2. 일반환경



■ 지리적 특성

- 충남은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남과 호남으로 통하는 삼남의 관문으로 북쪽은 경기도, 동쪽은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남쪽은 전라북도, 서쪽은 서해와 연결
 - 경부·호남선의 철도와 경부·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통과하고 있는 교통 요충지로 도로연장이 길고 통행량이 많음
- 면적은 총 8,245.5km²이며, 전국의 8.2%를 차지하며, 271개 도서를 포함하는 해안선 연장 1,062.2km의 연안 보유
 - 충남 내 시군 중 공주시가 864.2km²로 가장 넓고, 계룡시가 60.7km²로 가장 좁음
- 금강 남북을 지나는 산줄기를 통해 금남-금북 정맥의 생활권 중심 문화적 기반을 토대로 구분 가능
 -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지역은 내륙의 특성을 지니며 천안시, 아산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서천군은 북으로는 경기지역과 가깝고 서쪽으로 바다를 접해 내륙과 해안의 문화를 동시에 지님

■ 인구

[표 1] 최근 5년간 충남의 인구변화

(단위 : 세대, 명)

	세대 수	총 인구	남성	여성
2015	885,968	2,134,232	1,089,219	1,045,013
2016	902,294	2,157,080	1,101,735	1,055,345
2017	923,499	2,180,925	1,115,496	1,065,429
2018	943,611	2,194,516	1,123,634	1,070,882
2019	959,255	2,194,384	1,124,743	1,069,641

출처: 충남통계연보(2020)

- 충청남도의 총 인구는 주민등록인구 기준 2020년 2,194,384명으로 최근 5년간 총 인구증가와 함께 세대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8년 대비 2019년 총 인구가 미미하게 감소
- 성별로는 남성이 1,124천 명, 여성이 1,069천 명 으로 성비는 2019년 기준 남성이 51.3%, 여성이 48.7%로 차이는 근소

[표 2] 충남 시군별 인구현황(2019년)

(단위 : 명)

시군	세대 수	총 인구	남성	여성
천안시	281,333	672,556	344,170	328,386
공주시	50,519	108,629	54,463	54,166
보령시	48,324	104,162	53,495	50,667
아산시	135,159	333,074	174,133	158,941
서산시	76,748	179,151	92,800	86,351
논산시	57,196	122,981	61,663	61,318
계룡시	15,967	43,188	21,448	21,740
당진시	76,162	173,024	92,172	80,852
금산군	25,521	54,596	27,543	27,053
부여군	33,341	67,984	33,718	34,266
서천군	26,410	54,205	27,148	27,057
청양군	16,296	32,359	16,332	16,027
홍성군	45,920	102,872	51,576	51,296
예산군	38,290	81,488	41,379	40,109
태안군	32,069	64,115	32,703	31,412

출처: 충남통계연보(2020)

- 시군별 인구는 천안시가 약 67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아산시가 약 33만명, 서산시가 약 17만명 순이며, 청양군이 3.2만 명 으로 가장 적음
- 세대 수 역시 천안시가 약 28만 세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산시가 약 13만 세대, 서산시 7만 세대 순
- 계룡시와 부여군을 제외한 전체 시군에서 남성인구가 많음
-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대하여 자치경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모색 필요

II. 충남의 치안실태와 여건

- 천안과 아산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으나 인구밀도의 차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모색 필요

[표 3] 충남의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 : 명)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2015	합 계	인구	197,236	229,214	244,233	296,909	333,108	318,857	152,094	341,214
		구성비	9.5	11.0	11.8	14.3	16.1	15.4	7.2	22.0
	남 성	인구	101,794	119,378	131,431	158,611	177,468	165,711	76,676	142,107
		구성비	9.6	11.3	12.5	15.1	16.8	15.7	7.1	18.9
	여 성	인구	95,442	109,836	112,802	138,298	155,640	153,146	75,419	199,107
		구성비	9.3	10.7	11.0	13.5	15.2	15.0	7.2	25.2
2016	합 계	인구	197,206	222,359	246,298	294,535	335,721	324,122	225,825	350,108
		구성비	9.4	10.6	11.8	14.1	16.0	15.5	10.8	22.7
	남 성	인구	101,398	115,688	133,020	157,531	178,418	169,227	111,384	146,606
		구성비	9.53	10.87	12.5	14.8	16.8	15.9	10.5	19.7
	여 성	인구	95,808	106,671	113,278	137,004	157,303	154,895	114,441	203,502
		구성비	9.3	10.3	11.0	13.3	15.3	15.0	11.1	25.9
2017	합 계	인구	193,878	218,457	248,359	292,363	336,528	330,207	237,184	362,946
		구성비	9.5	10.7	12.1	14.3	16.4	16.1	11.6	24.3
	남 성	인구	99,537	113,825	134,845	156,432	179,060	172,342	117,604	152,925
		구성비	9.9	11.3	13.3	15.5	17.7	17.1	11.6	21.8
	여 성	인구	94,341	104,632	113,514	135,931	157,468	157,865	119,580	210,021
		구성비	9.0	10.0	10.9	13.0	15.1	15.1	11.4	26.5
2018	합 계	인구	189,024	213,551	248,443	288,943	331,657	338,050	248,096	372,515
		구성비	9.2	10.4	12.0	14.0	16.1	16.4	12.0	25.1
	남 성	인구	96,905	110,941	135,709	154,254	177,042	176,872	123,276	157,797
		구성비	9.3	10.6	13.0	14.7	16.9	16.9	11.8	22.0
	여 성	인구	92,119	102,610	112,734	134,689	154,615	161,178	124,820	214,718
		구성비	9.1	10.1	11.1	13.3	15.2	15.9	12.3	28.2
2019	합 계	인구	181,907	208,186	245,737	279,253	328,355	341,504	261,164	386,674
		구성비	8.6	9.8	11.6	13.1	15.5	16.1	12.3	25.4
	남 성	인구	93,227	108,069	134,935	149,425	175,174	179,502	129,894	164,931
		구성비	8.6	10.0	12.5	13.8	16.2	16.6	12.0	22.3
	여 성	인구	88,680	100,117	110,802	129,828	153,181	162,002	131,270	221,743
		구성비	8.5	9.6	10.6	12.5	14.7	15.6	12.6	28.5

출처: 충남통계연보(2020)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 충남의 최근 5년간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면, 0~9세의 경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경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인구고령화가 뚜렷하여 안전 취약계층으로서 관리 필요
- 경제활동인구 중 가장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30~39세와 40~49세의 경우 큰 폭의 변화율을 나타내지는 않아 인구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

[표 4] 최근 5년간 충남의 외국인 인구변화

(단위 : 명)

	총 인구	남성	여성
2015	56,583	34,780	21,803
2016	60,353	36,970	23,383
2017	64,155	39,226	24,929
2018	68,234	41,625	26,609
2019	70,675	42,805	27,870

출처: 충남통계연보(2020)

- 충남의 외국인 인구수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 성별인구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으며, 연도별 증가 폭도 남성이 우위
 - 이는 결혼이민 등 기존 이주여성 중심의 증가보다 취업 등 노동인구 증가가 가속화 됨을 의미
- 2015년 대비 2019년 외국인 인구수는 약 24.9% 증가
 - 집계되지 않는 외국인을 고려하면 실제 거주 인구는 전체 도내 인구의 5~8% 수준으로 예측

■ 충남도 경찰인력 현황

[표 5] 충남 경찰관 정원

(단위: 명)

2021년 11월	합계	경찰관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일반직
총계	5,040	1	3	29	115	406	551	1,022	1,226	1,525	162
도경찰청	1,045	1	3	14	46	34	137	256	186	304	64
경찰서	3,995	0	0	15	69	372	414	766	1,040	1,221	98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자료

- 2021년 11월 기준 충남의 총 경찰인원은 5,040명으로 치안감 1명, 경무관 3명, 총경 29명으로 구성
- 충남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역할로서 자치경찰부를 신설하고, 국가-자치경찰사무를 통합 수행해 온 경비교통과는 경비과와 교통과로 각각 분리

[표 6] 치안수요 비교

구분	인피교통사고 1인당 담당 건수	5대범죄		총범죄	
		건수	1인당 담당 건수	건수	1인당 담당 건수
인천청	1.4	31,363	4.9	90,639	14.1
서울청	1.0	103,717	4.0	309,383	11.0
경기 남부청	2.4	92,893	5.3	297,550	16.9
경기 북부청	2.0	28,314	4.3	96,726	14.9
충남청	2.0	19,379	4.2	62,666	13.5
전북청	1.7	15,292	3.1	48,266	9.7
경남청	1.6	29,707	4.3	96,234	13.8
제주청	2.3	8,770	4.7	26,094	14.0

자료 : 인천연구원, "인천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2021)"

- 관할구역 내 인피교통사고 1인당 담당건수는 2.0건으로 경찰청 단위에서는 경기 남부가 2.4건, 북부가 2.0건, 제주청이 2.3 건이며, 서울은 1.0건
- 경찰관 1인당 담당 건수는 13.5 건으로 경기, 경남청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총 범죄 발생 건수를 고려할 때 경찰관 수 부족이 현저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자료 : 경찰통계연보 2019

[그림 2] 시도별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 1인당 담당하는 주민 수는 459명으로 전국 평균 422명 보다 37명 많으며, 경기도와 경남도 제외 광역 도 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수준

[표 7] 충남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 변화

(단위: 명)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인당 담당인구	535	536	543	536	526	509	514	515	507	501	459	451

08.1.1 ~ 19.12.31까지의 현황

자료 :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그 수준이 미미하며, 그동안의 인구변화와 치안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

[표 8] 경찰서별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현황

계	지역경찰관서			치안센터		
	소계	지구대	파출소	소계	운영	미운영
198	115	35	80	83	67	16

II. 충남의 치안실태와 여건

구분	지구대	파출소	치안센터
합계	37	78	83
천안	6	13	4
서산	2	5	5
아산	3	9	4
논산	4	3	8
공주	2	6	6
보령	2	6	12
당진	3	5	6
홍성	3	4	5
예산	3	3	8
부여	1	8	7
서천	2	5	6
금산	2	3	5
청양	1	5	5
태안	1	5	2

자료 :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표 9] 112 순찰차 현황

구분	순찰차(대)	구분	순찰차(대)
합계	205	홍성	11
천안	43	예산	10
서산	15	부여	11
아산	19	서천	11
논산	15	금산	9
공주	14	청양	8
보령	15	태안	9
당진	15		

21.11.30까지의 현황

자료 :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 충남지역별 지구대는 37개, 파출소는 78개소이며, 치안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83곳
 - 계룡시는 경찰서가 없으며, 인근 논산시 관할로 관리
- 충남 지역별 지구대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 서북구와 논산시, 공주시이며, 다음으로 아산시, 보령시, 당진시, 홍성군 등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 충남 지역별 파출소가 가장 많은 곳은 천안 동남구와 아산시이며, 다음으로 부여군, 보령시 등
- 순찰차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은 천안시 서북구이며, 다음으로 아산시, 천안시 동남구, 서산시, 논산시 등의 순

3. 치안환경

1) 범죄

■ 충남의 총범죄 및 5대범죄 추이

(단위: 건)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충남 5대 범죄는 18,175건으로 전국 대비 3.9% 수준
- 2018년부터 총 범죄 건수와 5대 범죄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총 범죄 건수는 3년 평균 1.4% 감소하였고, 5대범죄 건수는 3년 평균 4.8% 감소

■ 범죄 관리여건

[표 10] 최근 5년간 충남도내 연도별 범죄발생건수 및 관리여건 변화

(단위: 건, 명)

연도	인구 만명당 1인가구수	인구 만명당 경찰사업체수	인구 만명당 범죄예방 CCTV대수	CCTV 관제인력수
2016	5,203,440	1.120	123,961대	-
2017	5,397,615	1.080	162,470대	4,141명
2018	5,618,677	1.073	203,752대	4,337명
2019	5,848,594	1.057	300,665대	4,724명
2020	6,147,516	1.057	325,529대	4,744명

자료: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5대 강력범죄를 기준으로 도내 발생건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3년간은 감소가 둔화된 것으로 풀이되며, 범죄안전관리를 위한 여건 변화는 두드러지지 못함
 - 1인가구의 확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과 치안 수요 증가는 늘어나는 반면, 경찰관서수, CCTV 관제인력 수 등 관리역량은 취약

[표 11] 최근 5년간 전국 범죄 발생건수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1,834,836	1,819,014	1,636,131	1,542,267	1,568,968
서울	356,575	343,104	320,193	308,997	309,269
부산	140,700	129,211	116,449	110,628	113,138
대구	98,897	86,150	75,016	72,341	75,797
인천	99,915	100,387	91,385	86,391	90,608
광주	61,234	54,271	48,213	43,569	44,274
대전	49,593	49,038	46,988	45,527	45,167
울산	44,569	39,799	34,912	32,764	32,780
세종	-	-	-	-	6,111
경기	430,790	476,348	417,066	388,938	394,276
강원	56,928	58,814	53,171	45,233	46,096
충북	53,703	56,179	50,387	48,315	48,085
충남	73,409	72,072	67,276	68,577	62,666
전북	57,342	53,375	48,979	47,944	48,252
전남	66,643	62,794	53,892	50,993	52,698
경북	91,876	88,059	80,061	74,356	77,449
경남	118,843	114,410	100,775	90,267	96,212
제주	33,819	35,003	31,368	27,427	26,090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 최근 5년간 전국 범죄 발생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충남의 경우도 지속 감소하는 추세
- 2019년 기준 충남은 범죄발생건수가 약 6만 2천 건으로 전국 10위 수준이며, 전국 범죄발생 건수의 3.9%를 차지

II. 충남의 치안실태와 여건

[표 12] 최근 5년간 전국 인구 천명당 범죄 발생건수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전국	35.6	35.2	31.6	29.8	30.3
서울	35.6	34.6	32.5	31.6	31.8
부산	40.0	36.9	33.6	32.1	33.1
대구	39.8	34.7	30.3	29.4	31.1
인천	34.1	34.1	31.0	29.2	30.6
광주	41.6	36.9	32.9	29.9	30.4
대전	32.7	32.4	31.3	30.6	30.6
울산	38.0	33.9	30.0	28.4	28.6
세종	-	-	-	-	17.9
경기	34.4	37.5	32.4	29.7	29.8
강원	36.7	37.9	34.3	29.3	29.9
충북	33.9	35.3	31.6	30.2	30.1
충남	32.1	30.8	28.1	28.1	29.5
전북	30.7	28.6	26.4	26.1	26.5
전남	34.9	33.0	28.4	27.1	28.2
경북	34.0	32.6	29.7	27.8	29.1
경남	35.3	33.9	29.8	26.8	28.6
제주	54.2	54.6	47.7	41.1	38.9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 인구수준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2019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범죄발생 건수 29.5건으로 전국 평균 30.3건보다 다소 낮은 수준
-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발생건수 감소 폭이 뚜렷한 것과 비교하면 감소 수준이 크지 않으며, 2018년 까지 통계에 포함되었던 세종지역의 분리 이후 1인당 발생 건이 증가한 양상을 기록

[표 13] 충남 시군별 5대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시군	5대 범죄 발생 현황	시군	5대 범죄 발생 현황
천안시	5,632	금산군	323
공주시	793	부여군	450
보령시	609	서천군	314
아산시	2,368	청양군	314
서산시	1,170	홍성군	693
논산시(2019)	1,198	예산군	619
당진시	993	태안군(2019)	1,198

주: 전체 시군은 2020년 자료 청양군, 서천군은 2017년, 홍성군은 2018년 자료 기준
출처: 각 서별 홈페이지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 범죄 발생 건수는 대체로 인구 수에 비례하여 분포하게 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천안시, 아산시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논산시와 태안군의 경우는 유사한 규모의 시군과 비교하여 발생 건수가 많음

[표 14] 최근 5년간 충남 범죄유형별 발생건수

(단위: 건)

	2015	2016	2017	2018	2019
강력범죄	1,005	1,057	1,063	1,098	969
절도범죄	11,224	9,366	8,644	8,573	8,212
폭력범죄	10,044	11,125	11,448	11,882	10,284
지능범죄	12,656	12,416	12,546	14,968	14,473
풍속범죄	838	962	755	748	749
특별경제범죄	2,275	2,122	1,687	1,610	1,634
마약범죄	191	375	366	288	319
보건범죄	338	375	386	309	337
환경범죄	135	116	142	170	183
교통범죄	25,391	24,517	20,866	19,526	16,529
노동범죄	21	57	47	19	11
안보범죄	13	5	2	2	1
선거범죄	78	48	16	84	49
병역범죄	929	1,171	753	793	528
기타범죄	8,271	8,360	8,555	8,507	8,388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 충남의 경우 2015년 교통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지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가 많이 비중을 차지
- 대부분의 범죄는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능범죄, 마약범죄, 보건, 환경, 등은 증가
 - 범죄 예방관리의 방향이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 요구

2) 교통사고

[표 15] 최근 5년간 충남도내 연도별 교통사고 사망자수 및 관리여건 변화

(단위 : 명, 대, %)

연도	인구 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수 (고속도로 제외)		인구 만명당 안전약자수 ¹⁾		인구 만명당 자동차등록대수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	
	경기	충남	경기	충남	경기	충남	경기	충남	경기	충남
2016	0.64	1.70	1,740.22	2,267.04	3,813.98	4,541.03	84.3	71.9	2.97	1.08
2017	0.55	1.67	1,755.81	2,288.77	3,942.43	4,706.10	88.7	77.4	4.09	2.82
2018	0.55	1.49	1,807.61	2,329.98	4,063.23	4,848.93	90.3	76	4.79	3.35
2019	0.46	1.50	1,849.33	2,372.54	4,165.61	4,983.25	92.4	76.6	5.25	3.67
2020	0.42	1.30	1,902.64	2,441.55	4,222.72	5,095.36	93.7	82.6	6.67	4.11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 자료

- 최근 5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인 감소세가 전년대비 10% 수준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그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은 아님
- 인구 1만명당 안전약자 수가 2,441.55명으로 높은편이며 유아동 및 노인 교통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인구 1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5.095대로 교통사고 사망자 관리가 비교적 우수하게 이루어지는 경기도와 비교할 때 다소 많음
- 운전시 안전벨트 착용률은 82.6%로 전국 평균 90.1%보다 현저히 낮음
- 도로 면적당 교통단속 CCTV 대수는 경기도가 6.67대, 충남이 4.11대로 부족한 실정
 - 이는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예산액과 연동되어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필요

1) 만 14세 미만인구, 만65세 이상 인구수 합

[표 16] 시도별 인구 1만명당 교통사고 발생(신고) 건수

(단위 : 건)

구분	교통사고 발생	교통사고 관련 검거	교통관련 범죄
서울	40.95	101.57	15.87
부산	38.98	37.53	20.88
대구	59.44	57.37	26.78
인천	34.84	32.64	25.12
광주	59.97	57.17	27.57
대전	58.73	57.26	21.98
울산	40.84	38.65	43.67
경기	46.40	44.39	28.61
강원	52.51	50.66	31.06
충북	58.25	56.68	31.20
충남	48.36	44.91	29.47
전북	44.00	44.00	25.39
전남	58.90	56.60	33.47
경북	53.40	51.90	32.01
경남	38.59	37.18	33.63
제주	37.02	64.08	37.75

출처: 인천연구원, “인천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2021)”

- 교통사고 발생의 경우 충남은 전국 8위를 기록
 -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광주(59.97), 대구(59.44), 전남(58.9) 등의 순
- 교통사고 관련 검거는 충남이 전국 10위를 기록
 -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101.57)이 월등히 높으며, 제주(64.08), 대구(57.47)등의 순
- 교통 관련 범죄는 전국 8위를 기록
 -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울산(43.67), 제주(37.75), 경남(33.63)등의 순

[표 17] 충남 교통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사고	사망	부상
2016	8,673	360	12,691
2017	8,959	325	13,326
2018	8,572	329	12,993
2019	9,122	285	13,434
2020	8,985	267	13,446

출처: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분석(2016~2020)

- 최근 5년간 충남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일부 감소 추세이며, 사망자 수는 감소하나 부상자는 최근 3년간 지속 증가
 -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의 경우 2016년 대비 34.8% 감소



출처 : 교통사고분석시스템(<http://taas.koroad.or.kr>)

[그림 3] 충청남도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역(2014~2018)

- 최근 5년간 충청남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연평균 366.4명으로 2.75%의 감소율을 보이며, 교통약자의 사망사고 발생율도 감소추세
 - 고령자(65세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추세이기는 하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군별로 교통약자 분포가 고령 또 도로연장 및 도로차선수 증가 등 교통여건 개선에 따라 안전부주의 및 과속에 따른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증가
 - 일반국도, 교차로 및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위한 대책 필요
-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인 추세와 중앙 부처 중심의 정책적 노력의 결과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며, 도내 감소량은 전국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점은 추가적 대안이 필요

[표 18] 충남 음주운전 사고 사상자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사고	사망	부상
2016	1,203	76	1,946
2017	1,369	56	2,220
2018	1,308	40	2,132
2019	1,019	33	1,587
2020	1,108	22	1,832

출처: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분석(2016~2020)

- 2020년 충남의 음주운전사고는 1,108건으로 2019년보다 89건 증가하였고,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도 감소하여 대형사고 발생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
 - 2020년 음주운전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대비 약 3배 이상 감소

[표 19] 충남 교통단속현황

(단위 : 건)

구분	사 고 요 인 행 위 (건)							
	계	음주면허		무면허	중 침	신 호 (무인포함)	과 속 (무인포함)	난 폭
		정지	취소					
2017년	932,109	3,064	5,659	2,933	1,932	120,830	793,952	3,739
2018년	1,129,909	3,219	5,795	3,198	2,646	139,083	972,459	3,509
2019년	1,032,190	1,860	4,748	2,675	2,141	125,938	891,577	3,251
2020년	1,096,635	1,502	5,413	2,203	2,086	121,273	961,107	3,051
2021. 11.	1,369,736	1,152	4,422	1,873	1,527	234,854	1,123,554	2,354

출처: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 교통단속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과속이 가장 많으며, 음주운전과 난폭 운전 순
- 전체 단속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난폭운전 등은 감소

[표 20] 충남 보행자 사상자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보행사고	일반		스쿨존	
		사망	부상	사망	부상
2016	1,810	120	1,779	3	596
2017	1,749	101	1,724	6	600
2018	1,642	118	1,618	5	517
2019	1,754	99	1,743	4	627
2020	1,450	90	1,440	4	473

출처:TAS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분석(2016~2020)

- 2020년 보행자 교통사고는 1,450건이며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역시 꾸준히 감소
- 스쿨존 보행사고는 부상은 감소하였으나 사망 사고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3) 경비

[표 21] 시도별 인구 1만명당 집회시위 개최건수

(단위 : 건)

구분	집회시위 개최	구분	집회시위 개최
서울	16.59	경기	8.20
부산	14.93	강원	16.08
대구	8.36	충북	7.93
인천	10.37	충남	17.27
광주	30.25	전북	15.34
대전	9.14	전남	19.37
울산	11.86	경북	12.58
		경남	17.76
		제주	11.18

출처: 인천연구원, “인천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기초조사(2021)”

- 전국 시도별 인구 1만명당 집회시위 개최건수를 살펴보면, 광주(30.15), 전남(19.37), 경남(17.76)의 다음으로 충남은 17.27건으로 전국 4위 수준

[표 22] 최근 5년 간 충남 집회 및 시위 개최 건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횟수	1,223	741	2,447	2,784
	인원	102,450	70,988	95,480	117,249
사회	횟수	253	180	1,065	605
	인원	12,990	27,741	23,094	21,781
경제	횟수	869	509	1,279	2,031
	인원	78,888	43,774	67,413	90,006
공공	횟수	101	52	103	148
	인원	10,572	2,473	4,973	5,462

출처: 충남경찰청 홈페이지

- 충남 집회 및 시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2천8백여 건이 개최되었으며, 개최인원은 약 5만 9천명
- 2019년 보다 개최횟수는 증가하였으나, 개최인원은 코로나 19의 확산 등에 따른 이유로 감소한 것으로 유추
-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분야 집회 및 시위가 횟수와 인원이 가장 많음

4) 취약계층

[표 23] 충남 성폭력 발생 및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2018	1,193	1,180	1,267	98	1,169
2019	1,040	1,032	1,163	96	1,067
2020	1,020	1,006	1,141	91	1,050
2021. 11.	1,037	975	1,085	-	-

※ 성폭력 통계는 강간·강제추행, 통신메세지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 자료

- 성폭력의 경우, 최근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법촬영이나 유포 등의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수치
- 최근 3년 간 발생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검거인원 대부분을 구속 조치보다는 불구속 조치가 많은 것으로 기록

[표 24] 충남 가정폭력 검거 및 조치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조치		
			구속	불구속	구속률(%)
2018	1,700	1,768	20	1,748	1.1
2019	1,710	1,974	24	1,950	1.2
2020	1,484	1,666	18	1,648	1.1
2021. 11.	1,534	1,636	9	1,627	0.6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 자료

- 가정폭력의 경우, 2019년 대비 2020년 검거건수가 2019년 대비 2019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
- 2018년부터 구속률의 변화는 미미하며, 검거인원은 대부분 불구속 조치를 취함
- 최근 5년간 가정폭력 발생건수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충남 뿐 아니라 전국의 가정폭력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
 - 가정폭력이 과거와는 달리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영역으로 변화하였고, 발생 자체의 증가가 현저하다기 보다는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II. 충남의 치안실태와 여건

[표 25] 충남 학교폭력 검거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계(명)	폭행·상해	금품갈취	성폭력	기타
2018년	703	462	58	114	69
구성비	100	65.7%	8.3%	16.2%	9.8%
2019년	504	290	19	136	59
구성비	100	57.5%	3.8%	27.0%	11.7%
2020년	460	272	44	97	47
구성비	100	59.1%	9.6%	21.1%	10.2%
2021. 11월	516	264	33	103	116
구성비	100	51.2%	6.4%	19.9%	22.5%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 자료

- 충남의 학교폭력 발생은 460건으로 전년대비 8.7% 감소
 - 2020년 기준 충남의 경우, 전국 학교폭력의 4.1% 차지
-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 등 비대면 학사일정으로 2020년 학교폭력 관련 주요 지표는 2019년 대비 8.7% 감소
- 전통적 의미 학교폭력 유형인 폭행·상해가 여전히 50% 이상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
 -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관리가 강화되면서 점차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
- 2021년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코로나 19 이전인 2019년 수치와 유사함

[표 26] 충남 아동학대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신고건수				검거현황							
	계	112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타	송치건수			송치인원				
					계	형사	보호	계	기소	불기소	보호	
2018	1,066	906	41	119	191	90	101	204	69	31	104	
2019	801	714	36	51	202	123	79	229	113	37	79	
2020	1096	978	28	90	277	147	130	310	143	26	141	
2021. 11.	1,551	1,458	8	85	563	209	354	631	187	64	380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 자료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표 27] 충남 아동학대 112신고 응급·임시조치 현황

<기간 : 1.1 ~ 11. 30>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응급조치	4,818	952	122	101	201	68	176	66	14	1,982	236	46	102	110	108	174	96	190	74
임시조치	5,081	742	232	172	447	126	173	113	28	1,167	284	100	146	176	334	238	170	316	117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 자료

- 아동학대의 경우 2019년보다 2020년 신고건수가 상승하였으며, 대부분이 112로 신고 접수
- 송치인원은 최근 3년간 증가하였으며, 기소의견이 불기소보다 많음
- 2019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충남은 피해아동 발견율이 4.19%로 전국에서 6위로 높은 편이며,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건수는 3건으로 비율로는 7.1%로 전국 4위 수준
- 성, 가정, 학교폭력의 경우,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 사적 영역으로 드러나지 않는 폭력의 문제가 사회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신고건수가 늘어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치안 수요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 수준도 높아짐
- 아동학대 신고건수도 지속증가하고 있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복지체계와 연계한 종합행정 서비스의 필요성 증대
- 아동학대 신고 응급·임시조치의 경우 응급조치가 110건, 임시조치가 176건으로 인근 전국 8위에 그침

[표 28] 충남 소년범죄자 현황

(단위 : %, 명)

구분	계		소년범죄자 비율			
	범죄소년 검거인원	소년범죄자비율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특별법범
2017	73,202	4.1	11.0	18.4	6.7	24.4
2018	73,779	4.2	8.2	19.6	6.8	28.4
2019	67,785	4.0	8.7	22.2	6.2	20.5

자료 : 충남 사회조사(2020)

- 최근 3년간 전체 범죄자 중 소년 범죄자 비율은 4%대이며, 검거 인원은 2017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

II. 충남의 치안실태와 여건

- 소년범죄는 강력법, 폭력법, 특별법법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절도의 경우 2017년 18.4%에서 2019년 22.2%로 증가

[표 29] 전화금융사기 발생 현황(충남 및 전국)

(단위 : 건, 억)

구 분	충남 통계			전국 통계		
	발생(건)	피해액(억)	검거인원	발생(건)	피해액(억)	검거인원
2018년	1,649	176	928	34,132	4,040	29,952
2019년	1,281	162	1,720	37,667	6,396	48,713
2020년	1,267	243	1,581	31,681	7,000	39,324
2021년 11월	1,251	281	731	28,646	7,171	24,730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 자료

- 2020년 충남의 전화금융사기는 1,267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은 243억원에 달하고, 그 중 검거인원은 1,581명
- 2019년 대비 발생건수는 약 1.1% 감소하였으나, 피해액은 50% 상승하였으며, 전국의 약 3.5%를 차지

[표 30] 최근 5년간 전국 65세이상 인구 수

(단위 : 천 명)

	2017	2018	2019	2020	2021.11
전국	5,009	7,650	8,027	8,496	8,821
서울	1,360	1,410	1,479	1,561	1,594
부산	566	590	620	658	679
대구	347	363	379	400	416
인천	345	363	385	411	434
광주	181	187	195	206	212
대전	181	189	199	211	220
울산	117	124	133	143	152
세종	27	29	32	35	37
경기	1,468	1,552	1,651	1,775	1,874
강원	280	289	303	320	332
충북	252	262	273	288	300
충남	363	373	387	405	419
전북	351	358	371	386	397
전남	408	413	423	436	444
경북	513	529	549	574	594
경남	504	523	548	580	606
제주	93	96	100	106	110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1년 11월 기준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약 41만9천명으로 전국의 4.7%를 차지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 2017년부터 충남의 65세 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
- 전국의 65세 이상 인구도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

[표 31] 최근 5년간 전국 등록 장애인 수

(단위 : 천 명)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2,511	2,546	2,586	2,619	2,633
서울	391	392	393	395	394
부산	169	171	174	175	176
대구	117	120	123	125	126
인천	136	138	142	145	146
광주	69	69	70	70	70
대전	71	72	73	73	73
울산	50	50	51	51	51
세종	10	11	11	12	12
경기	522	533	547	560	570
강원	99	100	101	101	102
충북	95	96	97	98	98
충남	126	129	132	134	134
전북	130	131	132	132	132
전남	142	142	142	142	141
경북	170	173	177	181	181
경남	181	184	186	188	189
제주	34	35	36	36	37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 2020년 충남의 등록장애인 수는 약 13만 4천여 명으로, 전국의 5.1%를 차지
- 충남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등록장애인 수가 소폭으로 상승
- 전국의 등록장애인 수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에 대한 세밀한 치안정책이 요구되는 시점

5) 안전도

■ 체감 안전도 현황

[표 32] 충남도 체감안전도 현황

구분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전체	
충남청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74.2	5	72.5	9	74.5	5	75.3	6	78.2	7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 충남의 최근 3년간 체감안전도를 살펴보면, 점수는 상승하고 있으나 전국에서 순위는 하락하는 경향
- 2020년 기준 전국 7위를 차지하며, 18개 지청 가운데 중간정도의 순위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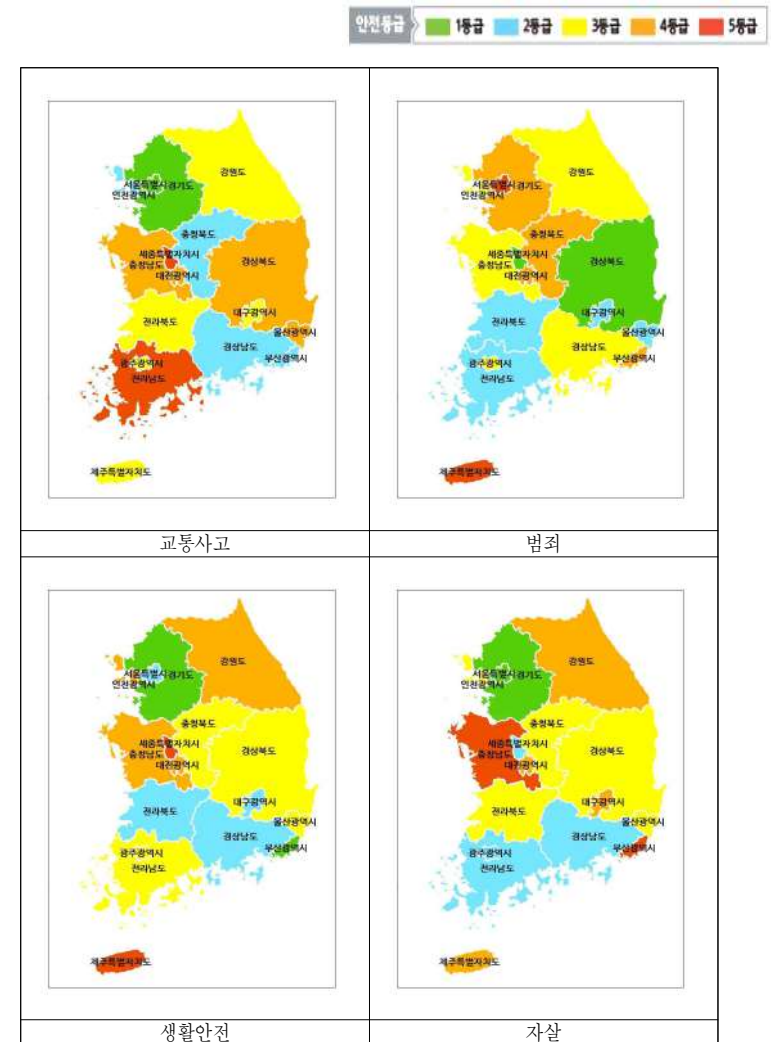
[표 33] 충남 시군별 체감안전도 현황

2018년 상반기			2018년 하반기			2019 상반기			2019 하반기			2020 전체		
순위	관서	점수	순위	관서	점수	순위	관서	점수	순위	관서	점수	순위	관서	점수
1	청양	78.9	1	서천	77.2	1	부여	79	1	청양	78.5	1	청양	83.3
2	서천	77.8	2	청양	76.7	2	논산	77.8	2	부여	78.4	2	태안	80.5
3	홍성	77.6	3	금산	75.3	3	청양	77.7	3	예산	78.2	3	예산	80.3
4	부여	77.4	4	공주	74.7	4	예산	76.6	4	금산	77.8		홍성	
5	공주	76.8	5	예산	74.5	5	세종	76.5	5	서천	77.6	4	서천	79.8
6	태안	76.3	6	세종	73.1	6	금산	75.5	6	보령	76.9		금산	
7	예산	76.1	7	서북	72.9		홍성	75	7	태안	76.8	7	부여	79.5
8	논산	75.8	8	논산	72.6	7	서천	75	8	논산	76.7	8	보령	78.7
9	금산	75.4	9	홍성	72.4	9	공주	74.9	9	홍성	75.2	9	공주	78.4
10	세종	72.8	10	부여	72.2	10	보령	74	10	공주	74.9	10	논산	77.5
11	보령	71.1	11	서산	71.3	11	서산	73.8	11	아산	72.9	11	당진	75.7
12	서산	70.9	12	동남	71.2	12	태안	73.2	12	서산	72.6	12	아산	75.4
13	아산	70.3	13	태안	70.9	13	아산	73	13	동남	72.1	13	서산	75
14	동남	70.1	14	보령	69.9	14	동남	70.5	14	당진	71.7	14	서북	74.7
15	서북	70	15	아산	68.7	15	서북	69.7	15	서북	68.9	15	동남	74
16	당진	69.1	16	당진	67	16	당진	69.4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 시군별 체감안전도를 살펴보면, 2018년과 2019년 상반기까지는 당진시가 체감 안전도가 가장 낮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천안시가 가장 낮은 수준
- 2018년 상반기와 2020년 1위를 차지한 청양의 경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여 체감안전도가 높은 지역으로 분류

[표 34] 2019 지역안전지수 지도



- 충남의 경우 2019년 교통사고는 4등급이며, 타 지자체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많으며, 발생건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감소율에서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풀이

- 범죄분야의 경우는 3등급이며, 자살은 5등급으로 등급자체 뿐만아니라 인구대비 자살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근 5년간 뚜렷한 개선을 보이지 못함
-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모두 3등급 이하이며, 최근 5년간 등급도 큰 변화가 없음

[표 35] 최근 5년간 충남도내 자살 사망자 수 및 관리여건 변화

연도	자살사망자수	독거노인수	고위험 읍주율	기초수급자수	자살예방전담 공무원수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자수	사회복지보전 결산액 비율
2015	13,836명	1,320,630명	19.17%	1,318,367명	-	-	26.2%
2016	13,513명	1,223,169명	19.21%	1,425,379명	-	-	27.0%
2017	13,092명	1,294,453명	19.16%	1,397,946명	-	-	27.1%
2018	12,463명	1,370,962명	18.86%	1,387,199명	175명	261,698명	27.3%
2019	13,670명	1,444,588명	18.81%	1,390,012명	217명	559,848명	33.9%
2020	13,799명	1,532,847명	18.15%	1,392,579명	240명	613,329명	35.2%
2019 비 증감율	↑ 0.9%	↑ 6.1%	↓ 3.5%	↑ 0.2%	↑ 10.6%	↑ 9.6%	↑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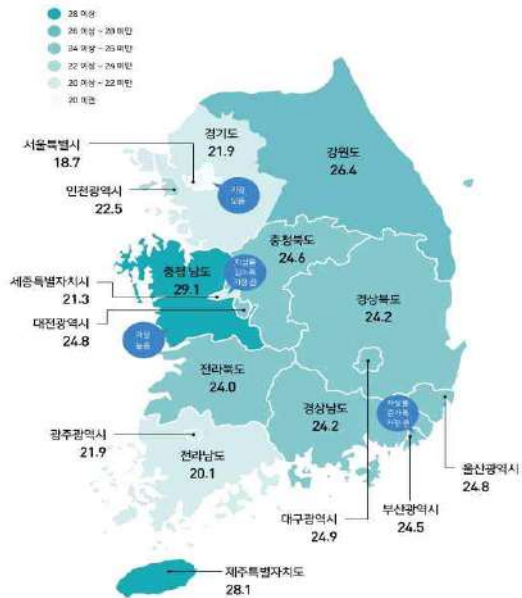
[표 36] 최근 5년간 충남도내 연도별 범죄발생건수 및 관리여건 변화 (단위 : 건, 명)

연도	인구 만명당 자살 사망자수	인구 만명당 독거노인수	고위험 읍주율	인구 만명당 기초수급자수	사회복지 결산액 비율
2016	3.38	306.74	20.3	265.59	24.08
2017	3.08	319.41	20.1	252.25	23.21
2018	3.04	332.42	20.7	243.65	24.45
2019	3.41	344.94	18.9	240.33	28.52
2020	3.39	360.75	19.5	238.69	28.10

자료 : 행정안전부 내부자료

- 충남지역의 인구 1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는 2020년 기준 3.39명으로 최근 5년 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음
- 인구 1만명당 독거노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위험 읍주율도 전국 평균 18.15%인데 비해 다소 높은 수치

- 인구 1만 명당 기초수급자 수는 238.69명으로 전국수준에서는 다소 높은 편임에도 사회복지보전 관련 예산 결산액 비율은 28.10%로 전국 35.2% 대비 낮은 수준



출처: 「2021 자살예방백서」, 보건복지부(2021)

[그림 4] 2019년 지역별 연령표준화 자살률

- 특히 2019년 자살률의 경우, 지역별 연령표준화 자살률²⁾은 충남이 29.1명으로 가장 높음
- 연령표준화 자살률(인구 10만명당 명)을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남자의 경우 충남이 41.5명으로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 16.3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 수준
- 2019년 기준 전국대비 자살률은 1.3배가 높고 201년부터 전국 1위로 매년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

2) 연령표준화 자살률: 각 지역별 인구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자살률로 인구구조가 서로 다른 지역별 비교에 적절

-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실직, 상실 등의 이유로 심각한 우울이나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대하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 필요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과제

1.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변화와 기대효과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의 구분

- 경찰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로 구분하고,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
-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 업무차이는 있으나, 조직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원화되는 것은 아니며, 자치경찰 소속 경찰관 신분도 국가 경찰청에 유지

■ 치안행정의 주민참여

- 시·도 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주요 치안정책 심의, 의결, 집행관리 기능 수행
- 선거를 통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기 때문에 직·간접적 주민참여 활성화

■ 주민친화적 치안활동 수행

- 일제 지도단속 등 중앙 경찰청 중심의 획일적 치안활동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주민친화적, 탄력적 치안활동 활성화
- 생활안전, 범죄예방 관련 정보를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이 공유하며, CCTV 및 가로등 설치, 위치 조정 등 범죄예방 시설·환경 개선의 다차원적 추진

■ 지방정부와의 공동업무추진 가능

- 성, 가정,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 학교, 지방정부와 경찰이 공동으로 문제해결 활동 수행

- 교통행정에 있어 단속업무는 경찰, 교통안전관리시설 설치와 관리는 지방정부에서 담당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를 해소하고 양 기관 간 유기적 협조를 통한 통합적 추진 가능
 - 교통행정에 있어 주민의견 반영 활성화
 - 상습 정체,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구역과 사고 다발지역의 교통시설 개선
 - 지역 축제 등 행사로 인한 혼잡발생 시 원활한 업무 협조 가능
- 제도변화에 따른 기대효과
- 지역특성과 주민요구에 맞춘 치안활동이 가능하며, 지역주민과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 가능
 - 관광지, 유흥가, 항만, 농어촌, 외국인 밀집지역 등 지역 내 상황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 가능
 -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예방 기능이 강화되며, 지역사회 안전활동 수행에 따른 참여촉진
 -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결합을 통해 기존보다 더욱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
 - 협의, 심의 단계가 단축되어 신속한 업무처리 기대
 - 경찰행정과 복지서비스의 동시진행이 가능
 -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위험자, 주취자 등에 대한 사건 처리는 물론 복지서비스를 동시 지원
 - 교통사고 발생요인의 분석을 통해 실제 현장과 합치하는 지방예산의 사용을 통해 사고감소 기대

2. 자치경찰제에 따른 지방정부 패러다임 전환과 미래과제

(1) 생활치안과 지방정부 책임성 패러다임 전환

■ 사회안전을 위한 치안정책 수립

- 범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지출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대응은 체계적 치안정책의 수립을 통해 가능
- 사회안전을 위한 치안정책이 강조되고 지방정부는 이를 위한 투자와 노력을 경주
 - 단순한 소득수준의 성장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보호해줄 수 있는 치안정책의 필요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
- 지방정부의 치안행정에 대한 투자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로 인식되어야 하며, 주민 행복을 위한 실질적 치안정책을 도출

■ 주민 밀착형 생활치안서비스 제공

- 대부분의 경찰업무는 질서유지와 서비스 제공활동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삶의 질, 질서유지, 범죄에 대한 두려움, 서비스 제공으로 확장
 - 지역의 경찰활동은 지역사회 공동체의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양한 치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전반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 수행으로 귀결
-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사적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사후대처, 교통사고 유발요인 제거 노력 등 구조적·비구조적 대안 제시
- 정보의 공유를 통하여 주민 스스로의 주체적 예방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 사건, 무질서 등 다양한 행위에 대한 범주를 구성하고 각각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등 문제지향적 경찰활동³⁾을 수행

3) 문제의 특정적 확인, 문제 및 특성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 가능한 해결방안의 확인, 해결방안의 수행과 그 해결방안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통한 문제해결

- 예방적 차원의 경찰과 주민의 협력활동을 통하여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지원의 다각화, 안전사고 방지 및 민원 청취 실시

2)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미래과제

■ 중립적, 민주적, 지방적, 자치적 치안행정 관리

- 국가경찰 조직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중립성 결여, 국민을 위한 민주성 부족과 관료적 권위주의,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자치성과 민생안정의 치안서비스 결여 등의 문제점을 극복
- 지방정부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재산을 수호하는 지방정부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한 권한과 의무를 실천하는데 기여

■ 장래변화에 맞춘 전문성 강화

- 경찰활동은 국가의 지속적 인구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경찰기관도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우수자원을 확보
- 신종범죄 증가에 대한 지역사회 예방활동을 위하여 적합한 경찰활동을 발굴하고 일선 업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역량강화방안의 제도적 연계 필요

■ 자치경찰제를 위한 실행전략 마련

-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체계와 실행전략이 필요
- 지역의 치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본적 원칙과 기준에 충실한 지역치안정책 마련 필요
- 미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자치경찰 역량 확보 필요

3. SWOT 분석

■ 충남의 자치경찰제 강점(Strength)

-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을 조기에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도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행정적 준비들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기에 출발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마련
- 충남의 주민자치회는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많은 지역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자치경찰과 주민자치활동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 충남의 자치경찰제 약점(Weakness)

- 자치경찰제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의 한계로 위원회 구성의 제약이 존재
- 충남경찰청과의 관계 속에서 단독업무 처리의 한계와 업무의 중복·조정 등에 따른 비효율 발생 가능성
- 자치경찰제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경찰청 및 충남도청 등 내부고객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업무 추진의 한계 우려
- 자치경찰제 운영과 관련된 업무성격 및 규정 등이 모호함 존재

■ 충남의 자치경찰제 기회(Opportunity)

- 정부의 강력한 분권추진 의지와 추진계획으로 인해 충남도 및 자치경찰 업무영역의 확장 가능성 증대
- 기존 일률적 치안업무의 수행에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한 자주적 치안 업무 수행의 가능성 증대
- 업무영역의 확장과 자주적 치안업무의 수행가능성이 증대되면서 주민들의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충남도와의 협력 가능

■ 충남의 자치경찰제 위협(Threat)

- 자치경찰제의 일원화된 운영으로 조직 및 인사운영상의 한계 우려
- 지방정부의 경제력에 따른 치안지원의 불균형 우려
- 주민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대감이 감소
- 업무의 명확한 규정과 획일화되지 않은 업무로 인해 자치경찰의 불안함 상존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 도정과 치안행정의 협력체계 구축 •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행정적 준비 완료 • 충남의 주민자치활동 연계 강화 기반 마련	• 위원회 구성의 한계(종립성, 전문성 등) • 경찰청과의 관계속에서 단독업무 처리 한계 우려 • 내외부고객의 이해부족 • 도정의 재정지원 한계 • 명확한 업무성격 및 규정 모호
Opportunity(기회)	SO전략	WO전략
• 지방정부 및 분권화로 인한 업무영역의 확장 • 치안업무의 자주적 수행가능성 • 지역의 수요 반영 가능 • 주민참여 기획 확대 •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가능	• 도정 및 치안행정 협력체계 활성화 방안 마련 • 새로운 업무영역의 발굴과 조정 •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치안 및 안전활동 강화 • 주민참여를 통한 치안수요 발굴체계 강화	•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구체화 • 내외부 고객의 자치경찰제 이해 및 교육, 홍보 전략 마련 • 자치경찰의 명확한 목표 및 업무 추진 방식 구체화 • 충남의 여건에 부합한 신규업무 발굴
Threat(위협)	ST전략	WT전략
• 일원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한계 • 지방정부 경제력에 따른 치안 불균형 우려 •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 부족 • 획일화 되지 않은 업무로 인한 불안감	• 도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치안불균형 해소를 위한 재정 확보방안 마련 • 대주민 홍보 및 교육체계 마련	•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성과 관리체계 마련 • 대상별 맞춤형 홍보 및 교육체계 마련 • 지속적 재정확보 및 운영방안 모색 • 조직관리방안 모색

4. 설문조사 분석

1) 주민의식조사의 개요

■ 조사목적

- 충남도민들이 생각하는 거주지역 안전도 및 경찰활동 만족도, 불안요인 및 해결방안을 묻고, 이를 통해 각 분야에서 도민이 바라는 시사점을 도출

■ 조사설계

[표 37] 설문조사설계 내용

구 분	내 용
조사내용	범죄예방, 교통안전, 사회적약자보호에 대한 만족도 및 필요도
조사지역	충남도 15개 시군
조사대상	충남도민 1,956명(유효표본 1,859)
조사기간	2021.03. 02 ~ 03. 26
자료수집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

PART I. 기초조사

■ 응답자 특성

-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63.2%, 여자 36.4%이었고, 성별로는 10대 1.3%, 20대 12.7%, 30대 19.4%, 40대 24.0%, 50대 31.0%, 60대 11.4% 등으로 분포



- 응답자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천안시 서북구가 238명으로 12.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산군 207명(10.9%), 서산시 190명(10.0%) 순
- 응답자의 현재 거주지역에 거주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이 1,319명으로 69.6%를 차지, 5년미만 294명(15.5%), 10년미만 184명(9.7%) 순
-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자영업과 회사원이 421명으로 22.2%를 차지하고, 공무원 402명(21.2%), 기타 287명(15.1%), 주부 184명(9.7%)의 순

구분		빈도(%)		구분		빈도(%)	
거주 지역	공주시	69	3.6	거주 기간	응답없음	14	0.7
	금산군	207	10.9		10년 미만	184	9.7
	논산시	117	6.2		10년 이상	1319	69.6
	당진시	92	4.8		1년 미만	84	4.4
	보령시	160	8.4		5년 미만	294	15.5
	부여군	150	7.9	직업	응답없음	11	0.6
	서산시	190	10.0		공무원	402	21.2
	서천군	70	3.7		기타	287	15.1
	아산시	98	5.2		무직	44	2.3
	예산군	77	4.1		자영업	421	22.2
	천안동남	73	3.8		주부	184	9.7
	천안서북	238	12.6		학생	125	6.6
	청양군	153	8.1		회사원	421	22.2
	태안군	111	5.8				
	홍성군	90	4.7				
합계		1,895	100.0	합계		1,895	100.0

■ 경찰과의 접촉경험 유무

- 응답자 중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1,528명이 경찰과 접촉경험이 있다고 응답

접촉경험	빈도	퍼센트(%)
있다	1,528	80.6
없다	356	18.8
응답없음	11	0.6
합계	1,895	100.0



■ 경찰과의 접촉경험이 있다면 접촉형식

- 경찰과의 접촉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515명(27.2%)이 협력 단체 활동으로 경찰과 접촉했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개인적 친분 등 기타가 471명(24.9%), 신고 234명(12.3%)의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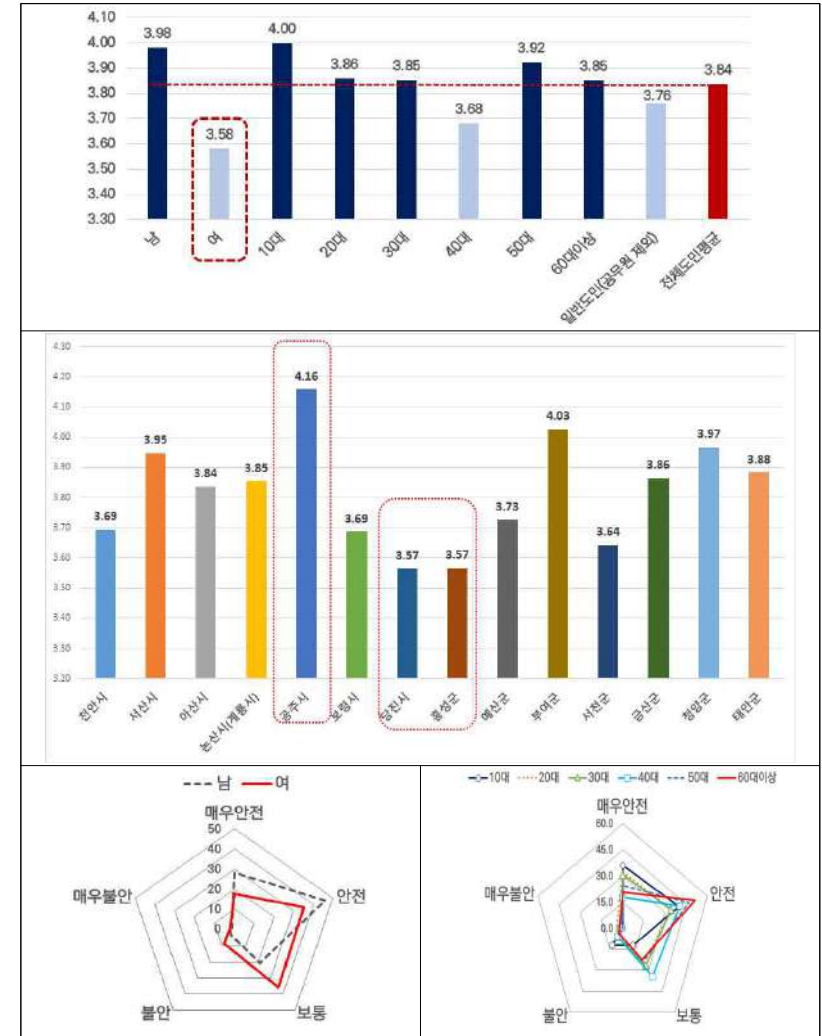
- 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588명(31.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 454명(24.0%), 30대 368명(19.4%), 20대 241명(12.7%)의 순

접촉방식	빈도	퍼센트(%)
협력단체 활동	515	33.7
신고	234	15.3
수사과정	45	2.9
교통사고(교통단속)	218	14.3
고소(고발)	45	2.9
개인적 친분 등 기타	471	30.8
합계	1,528	100.0



PART II. 범죄 예방분야

■ 거주지 범죄 안전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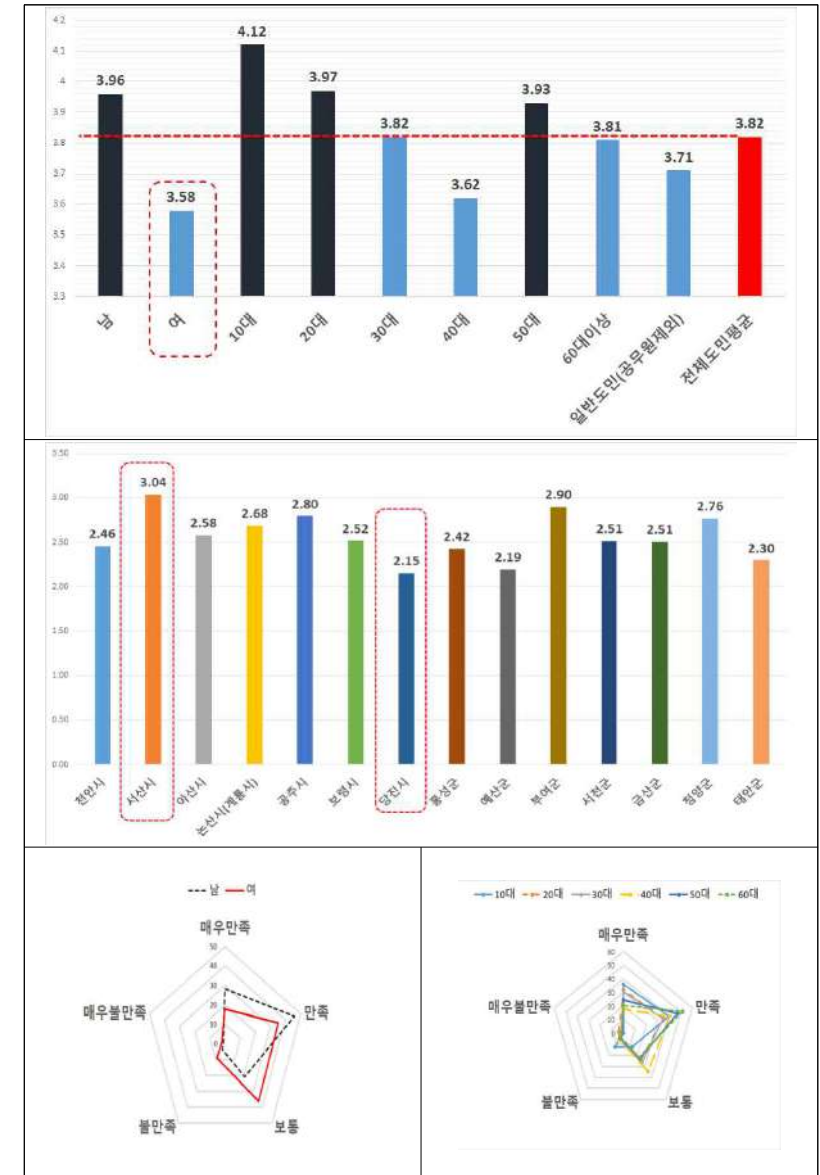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문항에 남성은 “안전하다”가 550명(45.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안전하다”가 340명(28.4%), “보통”이 249명(20.8%)의 순
- 반면 여성의 경우 “보통”이라는 답변이 249명(36.1%)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다”가 244명(35.4%), “매우 안전하다” 123명(17.8%)의 순
-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아, 여성이 상대적으로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더 빈번하거나 혹은 여성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것을 유추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340 (28.4)	550 (45.9)	249 (20.8)	37 (3.1)	13 (1.1)	8 (0.7)	1,197 (100)	3.98
	여	123 (17.8)	244 (35.4)	249 (36.1)	59 (8.6)	15 (2.2)	0 (0)	690 (100)	3.58
연령	10대	9 (36.0)	10 (40.0)	3 (12.0)	3 (12.0)	0 (0)	0 (0)	25 (100)	4.00
	20대	77 (32.0)	84 (34.9)	59 (24.5)	11 (4.6)	10 (4.1)	0 (0.0)	241 (100)	3.86
	30대	112 (30.4)	126 (34.2)	98 (26.6)	22 (6.0)	8 (2.2)	2 (0.5)	368 (100)	3.85
	40대	81 (17.8)	184 (40.5)	156 (34.4)	27 (5.9)	5 (1.1)	1 (0.2)	454 (100)	3.68
	50대	144 (24.5)	278 (47.3)	136 (23.1)	25 (4.3)	1 (0.2)	4 (0.7)	588 (100)	3.92
	60대 이상	44 (20.4)	111 (51.4)	48 (22.2)	8 (3.7)	4 (1.9)	1 (0.5)	216 (100)	3.85
직업	일반도민	320 (21.4)	630 (42.3)	421 (28.2)	87 (5.8)	26 (1.7)	9 (0.6)	1,493 (100)	3.76
	전체도민	468 (24.6)	794 (41.9)	500 (26.4)	96 (5.1)	28 (1.5)	9 (0.5)	1,895 (100)	3.84
지역	천안시	66 (21.2)	121 (38.9)	95 (30.5)	22 (7.1)	6 (1.9)	1 (0.3)	311 (100)	3.69
	서산시	72 (37.9)	58 (30.5)	47 (24.7)	6 (3.2)	5 (2.6)	2 (1.1)	190 (100)	3.95
	아산시	23 (23.5)	43 (43.9)	28 (28.6)	2 (2.0)	1 (1.0)	1 (1.0)	98 (100)	3.84
	논산시 (계룡시)	25 (21.4)	56 (47.9)	30 (25.6)	6 (5.1)	0 (0.0)	0 (0.0)	117 (100)	3.85
	공주시	27 (39.1)	29 (42.0)	11 (15.9)	1 (1.4)	1 (1.4)	0 (0.0)	69 (100)	4.16
	보령시	33 (20.6)	63 (39.4)	48 (30.0)	13 (8.1)	3 (1.9)	0 (0.0)	160 (100)	3.69
	당진시	14 (15.2)	37 (40.2)	31 (33.7)	7 (7.6)	3 (3.3)	0 (0.0)	92 (100)	3.57
	홍성군	15 (16.7)	36 (40.0)	28 (31.1)	8 (8.9)	2 (2.2)	1 (1.1)	90 (100)	3.57
	예산군	12 (15.6)	37 (48.1)	25 (32.5)	2 (2.6)	0 (0.0)	1 (1.3)	77 (100)	3.73
	부여군	52 (34.7)	60 (40.0)	31 (20.7)	5 (3.3)	1 (0.7)	1 (0.7)	150 (100)	4.03
	서천군	16 (22.9)	28 (40.0)	15 (21.4)	8 (11.4)	2 (2.9)	1 (1.4)	70 (100)	3.64
	금산군	44 (21.3)	102 (49.3)	53 (25.6)	6 (2.9)	1 (0.5)	1 (0.5)	207 (100)	3.86
	청양군	48 (31.4)	66 (43.1)	28 (18.3)	8 (5.2)	3 (2.0)	0 (0.0)	153 (100)	3.97
	태안군	21 (18.9)	58 (52.3)	30 (27.0)	2 (1.8)	0 (0.0)	0 (0.0)	111 (100)	3.88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문항에 10대는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가 각각 40%, 36%를 차지하며, 대체적으로 거주지가 안전하다고 응답
- 20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다”와 “매우 안전하다”가 각각 34.9%, 32.0%를 차지하며, 30대의 경우에도 “안전하다”가 126명(34.2%), “매우 안전하다”가 112명(30.4%)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40대의 경우 “안전하다”가 40.5%(184명)를 차지하며, “보통”이 34.4%(156명)등의 순이며, 50대와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안전하다”가 각각 47.3%와 51.4%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준
- 모든 연령대 중 60대 이상에서 “안전하다”는 의견이 51.4%로 가장 많은 수치
- 연령대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거주지의 범죄로부터 안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낌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범죄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문항에 대하여 일반 도민은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3%이며 전체 도민의 경우 41.9%로 비슷한 수치
-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도민들은 “보통”이 28.2%, “매우 안전하다” 21.4% 등의 순이며,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도민을 살펴 보았을 때도 “보통” 26.4%, “매우 안전하다” 24.6% 등의 순으로 직업별로 비슷
- 지역별로 살펴보면, 공주시에서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9.1%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천군에서 2.9%로 가장 높은 수치
-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지역별로 공주시가 평균 4.16으로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였고, 당진시와 홍성군이 3.57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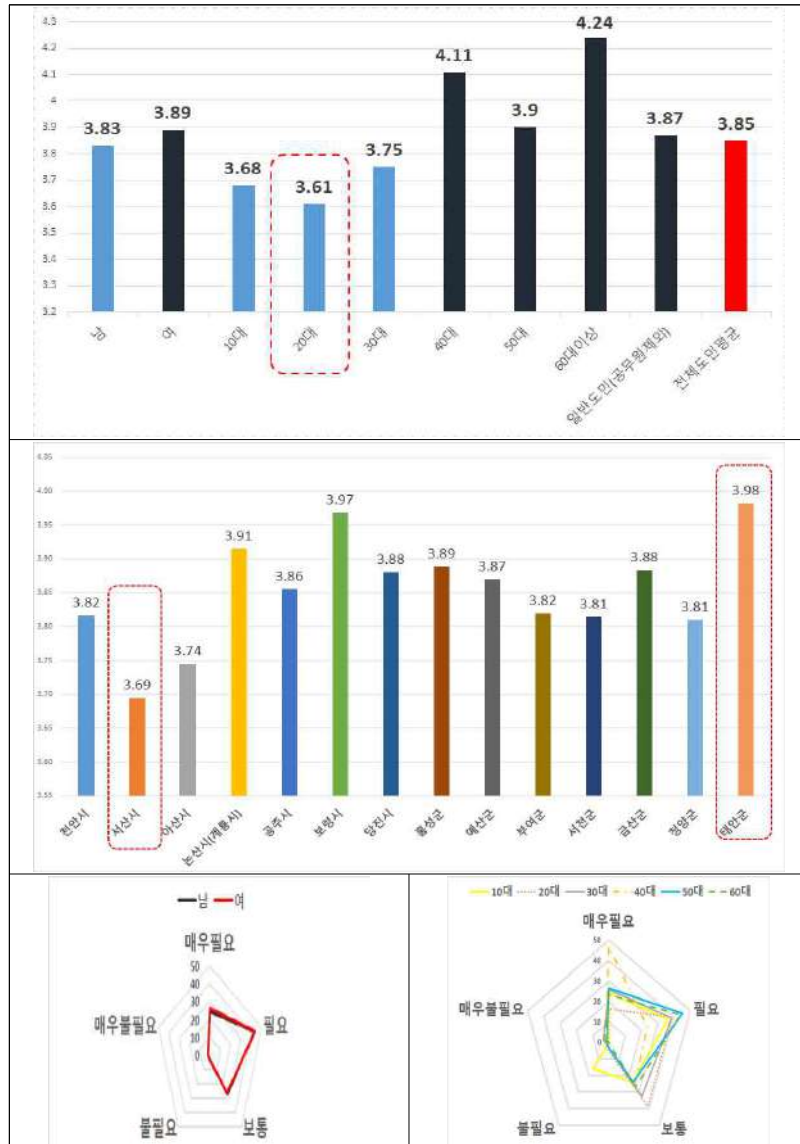
■ 거주지 범죄예방활동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391 (32.8)	479 (40.0)	262 (21.9)	33 (1.8)	22 (1.8)	10 (0.8)	1,197 (100)	3.96
	여	143 (20.7)	207 (30.0)	270 (39.1)	51 (7.4)	17 (2.5)	2 (0.3)	690 (100)	3.58
연령	10대	10 (40.0)	10 (40.0)	3 (12.0)	2 (8.0)	0 (0)	0 (0)	25 (100)	4.12
	20대	94 (39.0)	75 (31.1)	52 (21.6)	12 (5.0)	7 (2.9)	1 (0.4)	241 (100)	3.97
	30대	127 (34.5)	103 (28.0)	103 (28.0)	21 (5.7)	9 (2.4)	5 (1.4)	368 (100)	3.82
	40대	88 (19.4)	160 (35.2)	168 (37.0)	24 (5.3)	11 (2.4)	3 (0.7)	454 (100)	3.62
	50대	169 (28.7)	243 (41.3)	150 (25.5)	18 (3.1)	5 (0.9)	3 (0.5)	588 (100)	3.93
	60대 이상	50 (23.1)	95 (44.0)	58 (26.9)	6 (2.8)	7 (3.2)	0 (0)	216 (100)	3.81
직업	일반도민	352 (23.6)	552 (37.0)	465 (31.1)	75 (5.0)	36 (2.4)	13 (0.9)	1,493 (100)	3.71
	전체도민	538 (28.4)	687 (36.3)	534 (28.2)	84 (4.4)	39 (2.1)	13 (0.7)	1,895 (100)	3.82
지역	천안시	76 (24.4)	16 (5.1)	5 (1.6)	95 (30.5)	116 (37.3)	3 (1.0)	311 (100)	2.46
	서산시	81 (42.6)	6 (3.2)	5 (2.6)	36 (18.9)	61 (32.1)	1 (0.5)	190 (100)	3.04
	아산시	29 (29.6)	2 (2.0)	1 (1.0)	32 (32.7)	33 (33.7)	1 (1.0)	98 (100)	2.58
	논산시 (계룡시)	37 (31.6)	3 (2.6)	3 (2.6)	34 (29.1)	40 (34.2)	0 (0.0)	117 (100)	2.68
	공주시	26 (37.7)	2 (2.9)	1 (1.4)	12 (17.4)	28 (40.6)	0 (0.0)	69 (100)	2.80
	보령시	38 (23.8)	12 (7.5)	4 (2.5)	47 (29.4)	59 (36.9)	0 (0.0)	160 (100)	2.52
	당진시	14 (15.2)	3 (3.3)	3 (3.3)	35 (38.0)	37 (40.2)	0 (0.0)	92 (100)	2.15
	홍성군	16 (17.8)	9 (10.0)	2 (2.2)	34 (37.8)	28 (31.1)	1 (1.1)	90 (100)	2.42
	예산군	14 (18.2)	2 (2.6)	1 (1.3)	30 (39.0)	28 (36.4)	2 (2.6)	77 (100)	2.19
	부여군	58 (38.7)	7 (4.7)	1 (0.7)	30 (20.0)	54 (36.0)	0 (0.0)	150 (100)	2.90
	서천군	17 (24.3)	7 (10.0)	2 (2.9)	16 (22.9)	25 (35.7)	3 (4.3)	70 (100)	2.51
	금산군	53 (25.6)	8 (3.9)	5 (2.4)	66 (31.9)	75 (36.2)	0 (0.0)	207 (100)	2.51
	청양군	53 (34.6)	4 (2.6)	6 (3.9)	36 (23.5)	52 (34.0)	2 (1.3)	153 (100)	2.76
	태안군	26 (23.4)	3 (2.7)	0 (0.0)	31 (27.9)	51 (45.9)	0 (0.0)	111 (100)	2.30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남성의 경우 “만족한다” 40.0%, “매우 만족한다” 32.8%, “보통” 21.9% 등의 순으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
- 여성의 경우 “보통” 39.1%, “만족한다” 30.0%, “매우 만족한다” 20.7%의 순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남성보다 적은 것을 확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10대는 “매우 만족한다” 와 “만족한다” 가 각각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20~30대의 경우 “매우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9.0%, 34.5%로 각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
- 40대의 경우 “보통”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0%로 모든 연령대 중 “보통”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으며, “매우 만족한다” 는 19.4%로 모든 연령대 중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낮음
- 60대 이상의 경우 “만족한다” 는 의견이 44.0%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하여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도민의 경우 “만족한다” 는 응답이 37.0%를 차지하였고, “보통” 31.1%, “매우 만족한다” 23.6% 등의 순
-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도민의 경우 “만족한다” 가 3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만족한다” 28.4%, “보통” 28.2%로 “매우 만족한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보통” 이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간 높은 것을 확인
-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산에서 “매우 만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이 42.6%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만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태안군에서 45.9%로 가장 높은 수준
-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지역별로 서산시가 평균 3.04으로 가장 높은 점수대를 보였고, 당진시가 2.15로 가장 낮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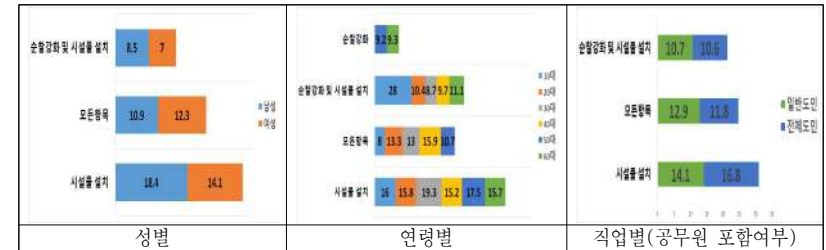
■ 거주지 경찰 범죄예방 필요도



구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290 (24.3)	514 (42.9)	334 (27.9)	23 (1.9)	25 (2.1)	11 (0.9)	1,197 (100)	3.83
	여	179 (25.9)	300 (43.5)	183 (26.5)	11 (1.6)	15 (2.2)	2 (0.3)	690 (100)	3.89
연령	10대	6 (24.0)	9 (36.0)	6 (24.0)	4 (16.0)	0 (0)	0 (0)	25 (100)	3.68
	20대	39 (16.2)	94 (39.0)	93 (38.6)	7 (2.9)	7 (2.9)	1 (0.4)	241 (100)	3.61
	30대	95 (25.8)	129 (38.6)	121 (32.9)	6 (1.6)	13 (3.5)	4 (1.1)	368 (100)	3.75
	40대	214 (47.1)	107 (23.6)	115 (25.4)	7 (1.5)	9 (2.0)	2 (0.4)	454 (100)	4.11
	50대	155 (26.4)	267 (45.4)	141 (24.0)	10 (1.7)	9 (1.5)	6 (1.0)	588 (100)	3.90
	60대 이상	102 (23.1)	69 (44.0)	43 (26.9)	0 (0)	2 (3.2)	0 (0)	216 (100)	4.24
직업	일반도민	384 (25.7)	652 (43.7)	391 (26.2)	22 (1.5)	33 (2.2)	11 (0.7)	1,493 (100)	3.87
	전체도민	472 (24.9)	816 (43.1)	519 (27.4)	34 (1.8)	40 (2.1)	14 (0.7)	1,895 (100)	3.85
지역	천안시	68 (21.9)	141 (45.3)	87 (28.0)	9 (2.9)	4 (1.3)	2 (0.6)	311 (100)	3.82
	서산시	54 (28.4)	57 (30.0)	62 (32.6)	2 (1.1)	14 (7.4)	1 (0.5)	190 (100)	3.69
	아산시	17 (17.3)	45 (45.9)	32 (32.7)	3 (3.1)	0 (0.0)	1 (1.0)	98 (100)	3.74
	논산시 (계룡시)	29 (24.8)	54 (46.2)	31 (26.5)	1 (0.9)	2 (1.7)	0 (0.0)	117 (100)	3.91
	공주시	13 (18.8)	38 (55.1)	16 (23.2)	0 (0.0)	1 (1.4)	1 (1.4)	69 (100)	3.86
	보령시	42 (26.3)	76 (47.5)	39 (24.4)	1 (0.6)	2 (1.3)	0 (0.0)	160 (100)	3.97
	당진시	24 (26.1)	41 (44.6)	21 (22.8)	4 (4.3)	2 (2.2)	0 (0.0)	92 (100)	3.88
	홍성군	28 (31.1)	33 (36.7)	25 (27.8)	1 (1.1)	1 (1.1)	2 (2.2)	90 (100)	3.89
	예산군	18 (23.4)	39 (50.6)	16 (20.8)	2 (2.6)	0 (0.0)	2 (2.6)	77 (100)	3.87
	부여군	33 (22)	66 (44.0)	46 (30.7)	2 (1.3)	2 (1.3)	1 (0.7)	150 (100)	3.82
	서천군	18 (25.7)	33 (47.1)	13 (18.6)	3 (4.3)	0 (0.0)	3 (4.3)	70 (100)	3.81
	금산군	55 (26.6)	88 (42.5)	55 (26.6)	4 (1.9)	4 (1.9)	1 (0.5)	207 (100)	3.88
	청양군	39 (25.5)	58 (37.9)	49 (32.0)	2 (1.3)	5 (3.3)	0 (0.0)	153 (100)	3.81
	태안군	34 (30.6)	47 (42.3)	27 (24.3)	0 (0.0)	3 (2.7)	0 (0.0)	111 (100)	3.98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 남성은 “필요하다”가 514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334명(27.9%), “매우 필요하다”가 290명(24.3%)의 순
- 여성의 경우 “필요하다”이라는 답변이 300명(43.5%)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183명(26.5%), “매우 필요하다” 179명(25.9%)의 순
-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수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 20대와 30대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39.0%와 38.6%로 가장 높은 수준
- 40대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47.1%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기록
- 20~30대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보통이라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50~60대 이상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과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한지 묻는 문항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도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도민에서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3.7%, 43.1%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25.7%, 24.9%를 기록
-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과반수 이상이 응답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에서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매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산시에서 7.4%로 가장 높음
-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지역별로 태안군이 3.98로 가장 높았고, 서산시가 3.69로 가장 낮은 수치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과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의 만족도가 서산시에서 가장 높았음. 이는 서산시에서 지역치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비교적 낮은 것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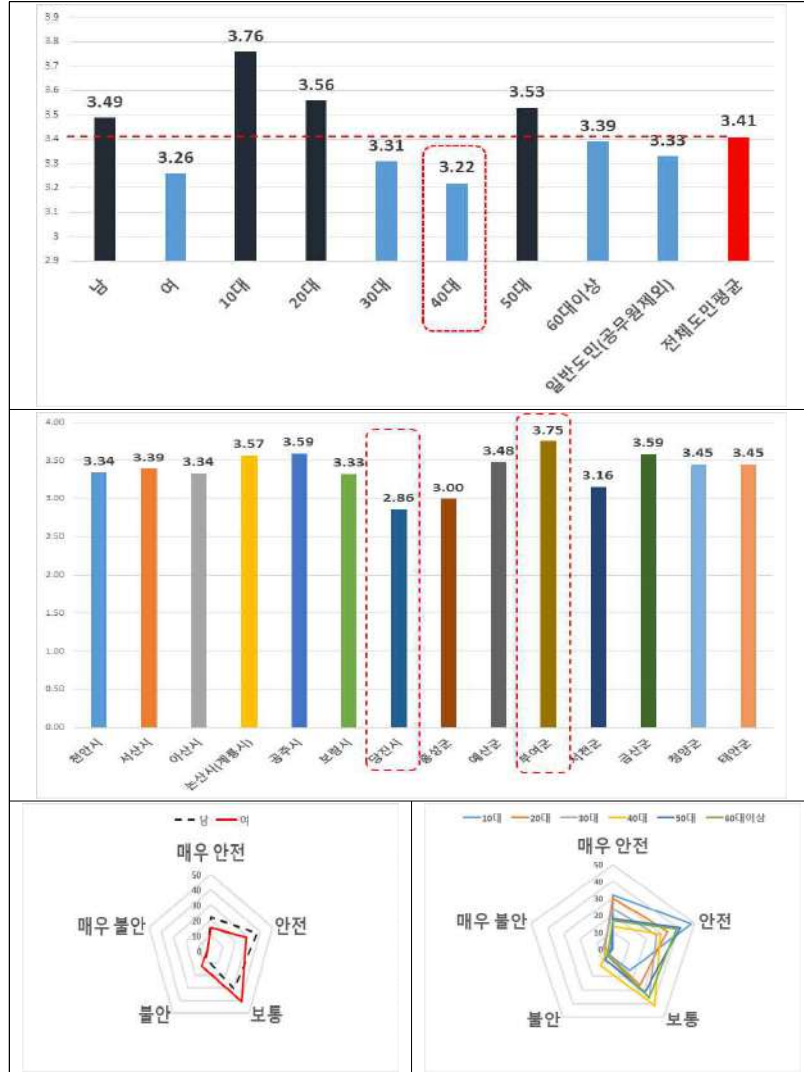
■ 가장 필요한 범죄예방활동(복수응답 가능)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범죄예방활동을 묻는 문항에 남성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220명, 18.4%)가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와 순찰강화, 이 두가지를 모두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
- 남성과 여성에서 공통적으로 순찰강화와 범죄예방물 설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을 확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범죄예방활동을 묻는 문항에 10대와 40대를 제외한 연령대에서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수치
- 40대의 경우 순찰강화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협력치안, 깨끗한 환경 조성, 치안정보 홍보 등 선택지의 모든 범죄예방활동이 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수치
- 각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순찰강화와 범죄예방시설물 설치를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비중을 차지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범죄예방활동을 묻는 문항에 일반 도민과 전체 도민에서 모두 범죄예방시설물을 설치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수준
- 직업별로 공무원을 포함하였을때와 포함하지 않았을때가 비슷한 응답

PART III. 교통안전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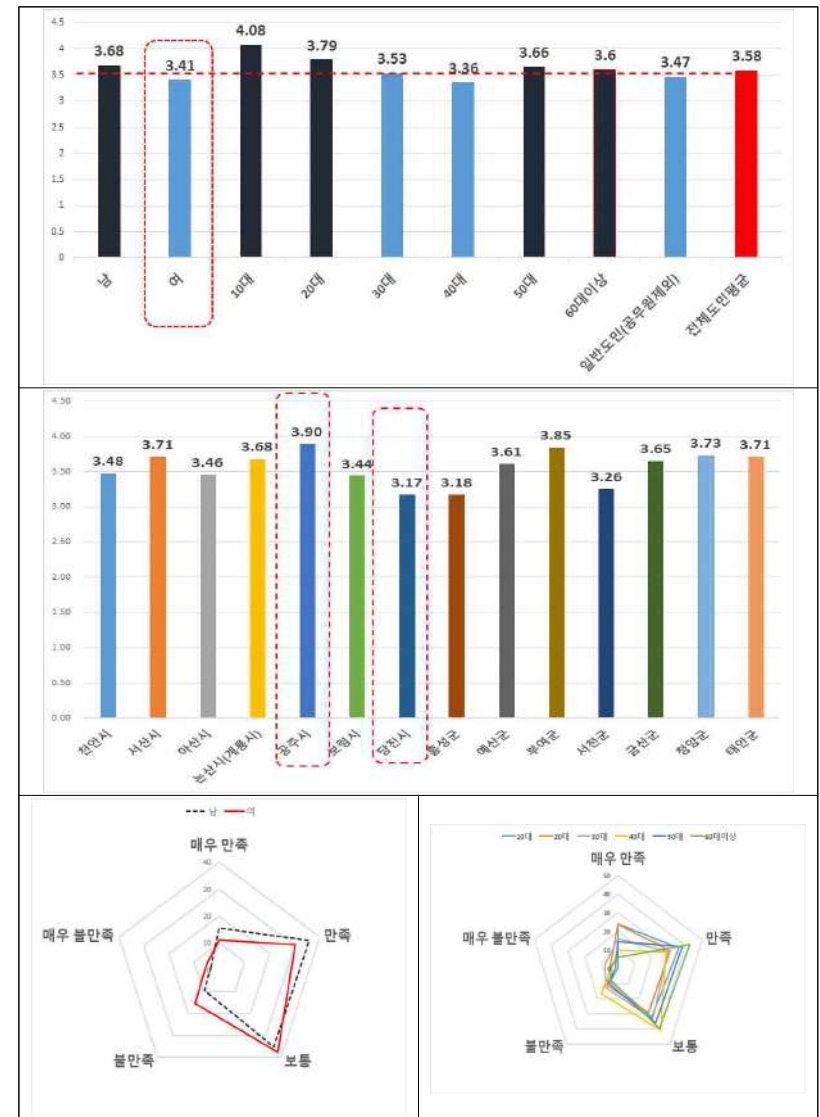
■ 거주지역의 교통안전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186 (15.5)	429 (35.8)	421 (35.2)	112 (9.4)	41 (3.4)	8 (0.7)	1,197 (100)	3.49
	여	77 (11.2)	209 (30.3)	260 (37.7)	106 (15.4)	36 (5.2)	2 (0.3)	690 (100)	3.26
연령	10대	6 (24.0)	9 (36.0)	8 (32.0)	2 (8.0)	0 (0)	0 (0)	25 (100)	3.76
	20대	57 (23.7)	75 (31.1)	70 (29.0)	26 (10.8)	12 (5.0)	1 (0.4)	241 (100)	3.56
	30대	59 (16.1)	109 (29.6)	123 (33.4)	45 (12.2)	29 (7.9)	3 (0.8)	368 (100)	3.31
	40대	45 (9.9)	129 (28.4)	185 (40.8)	75 (16.5)	17 (3.7)	3 (0.7)	454 (100)	3.22
	50대	85 (14.4)	224 (38.1)	211 (35.9)	55 (9.4)	10 (1.7)	3 (0.5)	588 (100)	3.53
	60대 이상	13 (6.0)	92 (42.6)	86 (39.8)	16 (7.4)	9 (4.2)	0 (0)	216 (100)	3.39
직업	일반도민	165 (11.1)	485 (32.5)	571 (38.2)	192 (12.9)	69 (4.6)	11 (0.7)	1,493 (100)	3.33
	전체도민	266 (14.0)	638 (33.7)	684 (36.1)	219 (11.5)	7 (4.1)	11 (0.6)	1,895 (100)	3.41
지역	천안시	38 (12.2)	101 (32.5)	117 (37.6)	42 (13.5)	11 (3.5)	2 (0.6)	311 (100)	3.34
	서산시	41 (21.6)	51 (26.8)	56 (29.5)	27 (14.2)	14 (7.4)	1 (0.5)	190 (100)	3.39
	아산시	10 (10.2)	32 (32.7)	41 (41.8)	12 (12.2)	2 (2.0)	1 (1.0)	98 (100)	3.34
	논산시 (계룡시)	15 (12.8)	48 (41.0)	45 (38.5)	7 (6.0)	2 (1.7)	0 (0.0)	117 (100)	3.57
	공주시	10 (14.5)	34 (49.3)	16 (23.2)	6 (8.7)	2 (2.9)	1 (1.4)	69 (100)	3.59
	보령시	16 (10.0)	51 (31.9)	67 (41.9)	21 (13.1)	5 (3.1)	0 (0.0)	160 (100)	3.33
	당진시	4 (4.3)	21 (22.8)	38 (41.3)	16 (17.4)	13 (14.1)	0 (0.0)	92 (100)	2.86
	홍성군	8 (8.9)	18 (20.0)	39 (43.3)	17 (18.9)	7 (7.8)	1 (1.1)	90 (100)	3.00
	예산군	10 (13.0)	32 (41.6)	24 (31.2)	9 (11.7)	0 (0.0)	2 (2.6)	77 (100)	3.48
	부여군	36 (24.0)	57 (38.0)	43 (28.7)	12 (8.0)	2 (1.3)	0 (0.0)	150 (100)	3.75
	서천군	9 (12.9)	21 (30.0)	24 (34.3)	7 (10.0)	6 (8.6)	3 (4.3)	70 (100)	3.16
	금산군	30 (14.5)	88 (42.5)	69 (33.3)	14 (6.8)	6 (2.9)	0 (0.0)	207 (100)	3.59
	청양군	24 (15.7)	52 (34.0)	52 (34.0)	19 (12.4)	6 (3.9)	0 (0.0)	153 (100)	3.45
	태안군	15 (13.5)	32 (28.8)	53 (47.7)	10 (9.0)	1 (0.9)	0 (0.0)	111 (100)	3.45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이 안전한지를 묻는 문항에 남성은 “안전하다”가 429명(35.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421명(35.2%), “매우 안전하다”가 186명(15.5%)의 순
- 반면 여성의 경우 “보통”이라는 답변이 260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다”가 209명(30.3%), “불안하다” 106명(15.4%)의 순
-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교통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이 안전한지를 묻는 문항에 10대는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6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
- 20대의 경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3.4%, 40.8%로 가장 높은 수치
- 30~40대의 경우 특히 “불안하다”와 “매우 불안하다”에 응답한 인원이 가장 많았는데, 이는 30~40대의 경우 자녀를 둔 학부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녀의 교통 안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유추
-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을 포함하였을 때와 제외하였을 때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38.2%, 36.1%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5%, 33.7%로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우 안전하다”는 의견은 부여군에서 24.0%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은 당진시만 10%를 넘기는 14.1%를 기록
-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지역별로 부여군이 3.75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2.86으로 가장 낮은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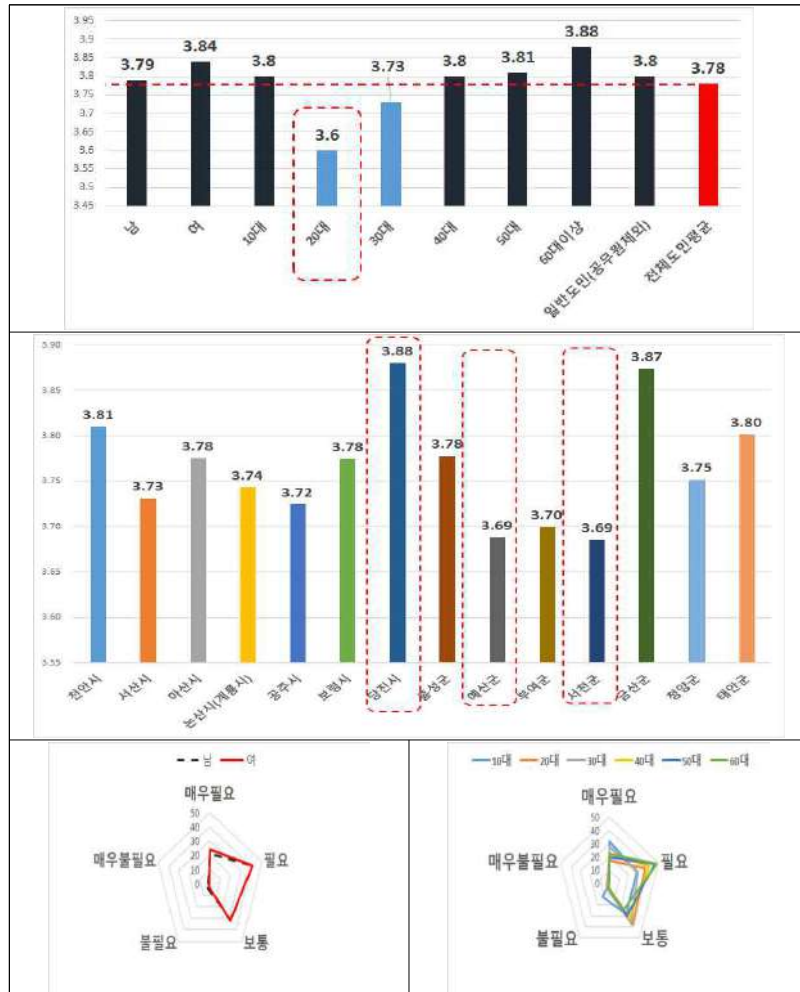
■ 거주지역의 교통안전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262 (21.9)	451 (37.7)	372 (31.1)	75 (6.3)	25 (2.1)	12 (1.0)	1,197 (100)	3.68
	여	107 (15.5)	199 (28.8)	280 (40.6)	83 (12.0)	15 (2.2)	6 (0.9)	690 (100)	3.41
연령	10대	8 (32.0)	12 (48.0)	4 (16.0)	1 (4.0)	0 (0)	0 (0)	25 (100)	4.08
	20대	73 (30.3)	81 (33.5)	64 (26.6)	11 (4.6)	11 (4.6)	1 (0.4)	241 (100)	3.79
	30대	87 (23.7)	99 (26.9)	131 (35.6)	28 (7.6)	20 (5.4)	3 (0.8)	368 (100)	3.53
	40대	61 (13.4)	133 (29.3)	189 (41.6)	55 (12.1)	12 (2.7)	4 (0.9)	454 (100)	3.36
	50대	106 (18.0)	243 (41.3)	185 (31.5)	45 (7.7)	6 (1.0)	3 (0.5)	588 (100)	3.66
	60대 이상	36 (16.7)	84 (38.9)	78 (36.1)	11 (5.1)	5 (2.3)	2 (0.9)	216 (100)	3.60
직업	일반도민	234 (15.7)	513 (34.4)	549 (36.8)	132 (8.8)	51 (3.4)	14 (0.9)	1,493 (100)	3.47
	전체도민	371 (19.6)	653 (34.5)	651 (34.4)	151 (8.0)	55 (2.9)	14 (0.7)	1,895 (100)	3.58
지역	천안시	52 (16.7)	96 (30.9)	127 (40.8)	24 (7.7)	9 (2.9)	3 (1.0)	311 (100)	3.48
	서산시	50 (26.3)	68 (35.8)	51 (26.8)	10 (5.3)	10 (5.3)	1 (0.5)	190 (100)	3.71
	아산시	15 (15.3)	34 (34.7)	37 (37.8)	7 (7.1)	3 (3.1)	2 (2.0)	98 (100)	3.46
	논산시 (계룡시)	23 (19.7)	48 (41.0)	34 (29.1)	10 (8.5)	2 (1.7)	0 (0.0)	117 (100)	3.68
	공주시	17 (24.6)	33 (47.8)	15 (21.7)	3 (4.3)	1 (1.4)	0 (0.0)	69 (100)	3.90
	보령시	22 (13.8)	56 (35.0)	59 (36.9)	17 (10.6)	6 (3.8)	0 (0.0)	160 (100)	3.44
	당진시	6 (6.5)	29 (31.5)	36 (39.1)	17 (18.5)	4 (4.3)	0 (0.0)	92 (100)	3.17
	홍성군	11 (12.2)	24 (26.7)	31 (34.4)	19 (21.1)	4 (4.4)	1 (1.1)	90 (100)	3.18
	예산군	12 (15.6)	31 (40.3)	30 (39.0)	2 (2.6)	0 (0.0)	2 (2.6)	77 (100)	3.61
	부여군	45 (30.0)	53 (35.3)	40 (26.7)	9 (6.0)	2 (1.3)	1 (0.7)	150 (100)	3.85
	서천군	11 (15.7)	19 (27.1)	27 (38.6)	6 (8.6)	4 (5.7)	3 (4.3)	70 (100)	3.26
	금산군	43 (20.8)	73 (35.3)	71 (34.3)	16 (7.7)	4 (1.9)	0 (0.0)	207 (100)	3.65
	청양군	38 (24.8)	55 (35.9)	49 (32.0)	4 (2.6)	6 (3.9)	1 (0.7)	153 (100)	3.73
	태안군	26 (23.4)	34 (30.6)	44 (39.6)	7 (6.3)	0 (0.0)	0 (0.0)	111 (100)	3.71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 안전에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남성은 “만족한다”가 451명(37.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372명(31.1%), “매우 만족한다”가 262명(21.9%)의 순
- 반면 여성의 경우 “보통”이라는 답변이 280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가 199명(28.8%), “매우 만족한다”가 107명(15.5%)의 순
-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교통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교통안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확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안전에 대하여 만족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10대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0%로 대다수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10대가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이 가장 적어 도에 거주하는 전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 존재
- 20대의 경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5.6%, 41.6%로 가장 높은 수준
- 50~60대 이상의 경우 “만족한다”가 각각 41.3%, 38.9%로, 10대를 제외하고, 50대에서 “만족한다”로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음
-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도민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6.8%로 가장 높았으나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도민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5%로 가장 높은 것을 확인
-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부여군에서 30.0%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서천군에서 5.7%로 가장 높은 수준
-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지역별로 공주시가 3.90으로 가장 높았고, 당진시가 3.17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거주지역의 교통안전활동 필요도



구분		매우 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 불필요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254 (21.1)	487 (40.7)	383 (32.0)	44 (3.7)	20 (1.7)	9 (0.8)	1,197 (100)	3.79
	여	166 (24.1)	281 (40.7)	220 (31.9)	14 (2.0)	6 (0.9)	3 (0.4)	690 (100)	3.84
연령	10대	8 (32.0)	7 (28.0)	7 (28.0)	3 (12.0)	0 (0)	0 (0)	25 (100)	3.80
	20대	42 (17.4)	89 (36.9)	91 (37.8)	10 (4.1)	8 (3.1)	1 (0.4)	241 (100)	3.60
	30대	103 (28.0)	106 (28.8)	134 (36.4)	13 (3.5)	7 (1.9)	5 (1.4)	368 (100)	3.73
	40대	104 (22.9)	187 (41.2)	146 (32.2)	10 (2.2)	5 (1.1)	2 (0.4)	454 (100)	3.80
	50대	117 (19.9)	275 (46.8)	174 (29.6)	15 (2.6)	4 (0.7)	3 (0.5)	588 (100)	3.81
	60대 이상	49 (22.7)	105 (48.6)	52 (24.1)	7 (3.2)	2 (0.9)	1 (0.5)	216 (100)	3.88
직업	일반도민	345 (23.1)	618 (41.4)	455 (30.5)	43 (2.9)	19 (1.3)	13 (0.8)	1,493 (100)	3.80
	전체도민	425 (22.3)	769 (40.6)	604 (31.9)	58 (3.1)	26 (1.4)	13 (0.7)	1,895 (100)	3.78
지역	천안시	69 (22.2)	132 (42.4)	98 (31.5)	8 (2.6)	2 (0.6)	2 (0.6)	311 (100)	3.81
	서산시	53 (27.9)	59 (31.1)	63 (33.2)	5 (2.6)	9 (4.7)	1 (0.5)	190 (100)	3.73
	아산시	24 (24.5)	37 (37.8)	30 (30.6)	6 (6.1)	0 (0.0)	1 (1.0)	98 (100)	3.78
	논산시 (계룡시)	23 (19.7)	51 (43.6)	36 (30.8)	5 (4.3)	1 (0.9)	1 (0.9)	117 (100)	3.74
	공주시	15 (21.7)	28 (40.6)	22 (31.9)	0 (0.0)	4 (5.8)	0 (0.0)	69 (100)	3.72
	보령시	34 (21.3)	63 (39.4)	56 (35.0)	7 (4.4)	0 (0.0)	0 (0.0)	160 (100)	3.78
	당진시	21 (22.8)	43 (46.7)	25 (27.2)	2 (2.2)	1 (1.1)	0 (0.0)	92 (100)	3.88
	홍성군	28 (31.1)	30 (33.3)	24 (26.7)	3 (3.3)	2 (2.2)	3 (3.3)	90 (100)	3.78
	예산군	13 (16.9)	36 (46.8)	23 (29.9)	3 (3.9)	0 (0.0)	2 (2.6)	77 (100)	3.69
	부여군	24 (16.0)	66 (44.0)	53 (35.3)	5 (3.3)	2 (1.3)	0 (0.0)	150 (100)	3.70
	서천군	15 (21.4)	28 (40.0)	23 (32.9)	1 (1.4)	0 (0.0)	3 (4.3)	70 (100)	3.69
	금산군	47 (22.7)	94 (45.4)	61 (29.5)	3 (1.4)	2 (1.0)	0 (0.0)	207 (100)	3.87
	청양군	35 (22.9)	55 (35.9)	55 (35.9)	6 (3.9)	2 (1.3)	0 (0.0)	153 (100)	3.75
	태안군	24 (21.6)	47 (42.3)	35 (31.5)	4 (3.6)	1 (0.9)	0 (0.0)	111 (100)	3.80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경찰의 교통안전활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 남성은 “필요하다”가 487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383명(32.0%), “매우 필요하다”가 254명(21.1%)의 순
-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라는 답변이 281명(40.7%)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220명(31.9%), “매우 필요하다”가 166명(24.1%)의 순
- 남성이 상대적으로 지역의 교통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교통 안전에 대하여 만족도는 높았으나 지역 경찰의 교통안전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남녀 모두 공통된 의견임을 확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경찰의 교통안전활동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10대는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20~30대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8%, 36.4%로 가장 많았으며, 40대의 경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높은 수준
- 50~60대 이상의 경우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6.8%, 48.6%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았을 때, 60대 이상에서 교통안전활동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수준
-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을 제외하였을 때와 포함하였을 때 모두 지역경찰의 교통안전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1.4%와 40.6%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지역별로 살펴보면, 홍성군에서 교통안전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고,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이 “매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주시에서 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안전이 매우 안전하다는 응답과 교통안전활동의 만족도가 당진시에서 가장 낮았음. 이는 당진시에서 교통안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는 시민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교통안전활동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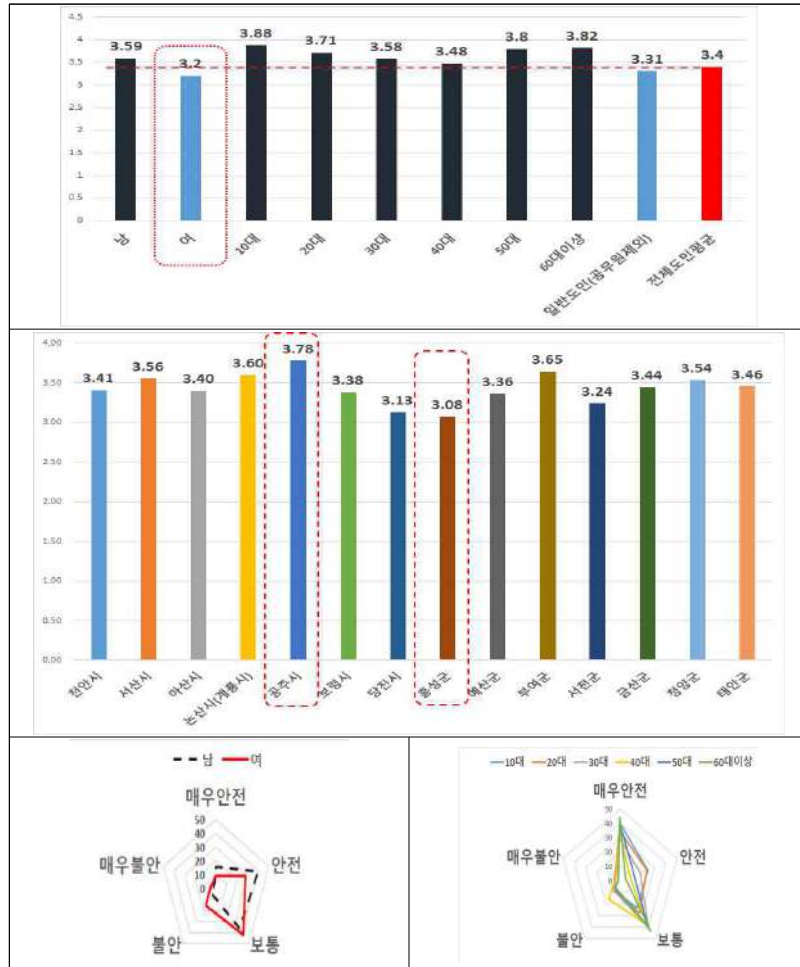
■ 가장 필요한 교통안전활동(복수응답 가능)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통안전활동을 묻는 문항에 남성은 교통안전시설 개선(144명, 12.3%)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 교통단속 및 제지(83명, 12.0%)가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
- 남성의 경우 횡단보도 야간 시인성 확보, 신호체계 효율적 개선 등의 시설의 개선으로 교통 안전성이 향상된다고 여기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음주 운전, 속도위반 등 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통제 등의 실제적인 지역경찰의 단속 및 제지로 교통 안전성이 향상된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통안전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20대는 교통안전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응답이 15.7%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와 50대의 경우 교통단속 및 제지가 각각 16.3%, 1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40대의 경우 교통안전 서비스활동, 교통단속 및 제지, 교통안전 시설 개선,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무인단속 장비 증설 등 선택지의 모든 항목이 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15.2%로 가장 높은 수준
- 60대 이상의 경우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13.9%로 가장 높았는데, 모든 연령대 중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만 확인됨. 이를 통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최근 많이 활용하는 PC 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교통 안전 홍보나 교육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통안전활동을 묻는 문항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도민은 선택지의 모든 교통안전 활동이 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12.5%로 가장 높았으며,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 도민의 경우 교통단속 및 제지(11.8%, 224명)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PART IV. 사회적약자 보호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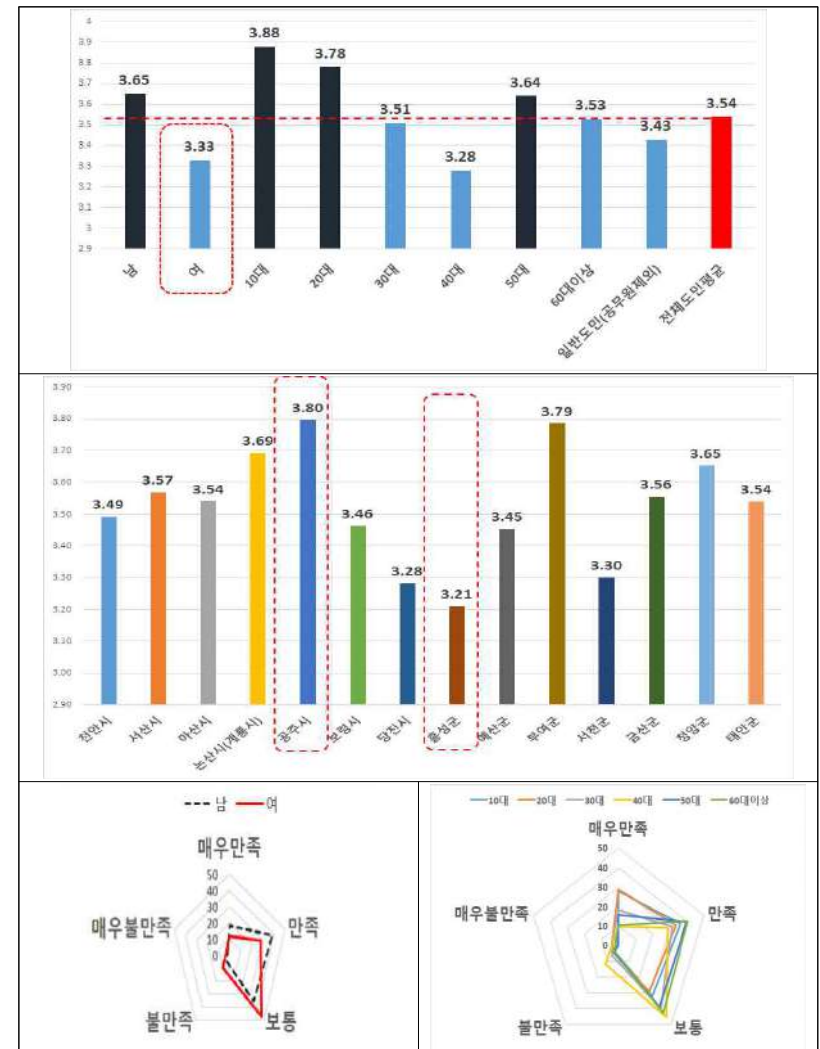
■ 거주지역의 사회적약자 안전 정도



구분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185 (15.5)	479 (40.0)	429 (35.8)	72 (6.0)	22 (1.8)	10 (0.9)	1,197 (100)	3.59
	여	62 (9.0)	195 (28.2)	288 (41.7)	108 (15.7)	35 (5.1)	2 (0.3)	690 (100)	3.20
연령	10대	10 (40.0)	6 (24.0)	6 (24.0)	2 (8.0)	1 (4.0)	0 (0)	25 (100)	3.88
	20대	83 (34.4)	56 (23.3)	67 (27.8)	21 (8.7)	12 (5.0)	2 (0.8)	241 (100)	3.71
	30대	108 (29.3)	65 (17.7)	146 (39.7)	32 (8.7)	13 (3.5)	4 (1.1)	368 (100)	3.58
	40대	146 (32.2)	40 (8.8)	175 (38.5)	72 (15.9)	19 (4.2)	2 (0.4)	454 (100)	3.48
	50대	234 (39.8)	72 (12.3)	230 (39.1)	40 (6.8)	9 (1.5)	3 (0.5)	588 (100)	3.80
	60대 이상	95 (44.0)	10 (4.6)	94 (43.5)	13 (6.0)	3 (1.4)	1 (0.5)	216 (100)	3.82
직업	일반도민	165 (10.6)	485 (33.7)	571 (40.5)	192 (10.9)	69 (3.5)	11 (0.8)	1,493 (100)	3.31
	전체도민	266 (13.2)	638 (35.7)	684 (37.9)	219 (9.6)	77 (3.0)	12 (0.6)	1,895 (100)	3.40
지역	천안시	40 (12.9)	104 (33.4)	123 (39.5)	33 (10.6)	10 (3.2)	1 (0.3)	311 (100)	3.41
	서산시	36 (18.9)	70 (36.8)	59 (31.1)	15 (7.9)	9 (4.7)	1 (0.5)	190 (100)	3.56
	아산시	14 (14.3)	29 (29.6)	44 (44.9)	7 (7.1)	1 (1.0)	3 (3.1)	98 (100)	3.40
	논산시 (계룡시)	17 (14.5)	50 (42.7)	37 (31.6)	12 (10.3)	1 (0.9)	0 (0.0)	117 (100)	3.60
	공주시	10 (14.5)	39 (56.5)	17 (24.6)	1 (1.4)	2 (2.9)	0 (0.0)	69 (100)	3.78
	보령시	14 (8.8)	61 (38.1)	62 (38.8)	18 (11.3)	5 (3.1)	0 (0.0)	160 (100)	3.38
	당진시	8 (8.7)	20 (21.7)	45 (48.9)	14 (15.2)	5 (5.4)	0 (0.0)	92 (100)	3.13
	홍성군	10 (11.1)	18 (20.0)	38 (42.2)	19 (21.1)	3 (3.3)	2 (2.2)	90 (100)	3.08
	예산군	6 (7.8)	26 (33.8)	39 (50.6)	4 (5.2)	0 (0.0)	2 (2.6)	77 (100)	3.36
	부여군	30 (20.0)	59 (39.3)	41 (27.3)	18 (12.0)	2 (1.3)	0 (0.0)	150 (100)	3.65
	서천군	5 (7.1)	30 (42.9)	21 (30.0)	8 (11.4)	3 (4.3)	3 (4.3)	70 (100)	3.24
	금산군	20 (9.7)	81 (39.1)	85 (41.1)	13 (6.3)	8 (3.9)	0 (0.0)	207 (100)	3.44
	청양군	27 (17.6)	53 (34.6)	53 (34.6)	15 (9.8)	5 (3.3)	0 (0.0)	153 (100)	3.54
	태안군	12 (10.8)	37 (33.3)	55 (49.5)	4 (3.6)	3 (2.7)	0 (0.0)	111 (100)	3.46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적약자(아동·여성·청소년)가 어느 정도 안전한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남성은 “안전하다”가 479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429명(35.8%), “매우 안전하다”가 185명(15.5%)의 순
- 반면 여성의 경우 “보통”이라는 답변이 288명(41.7%)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다”가 195명(28.2%), “불안하다” 108명(15.7%)의 순
-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5배 이상 높았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41.7%)도 남성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35.8%)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을 확인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적약자(아동·여성·청소년)가 얼마나 안전한지를 묻는 문항에 10대는 “매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20대의 경우도 “매우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으며, 30~40대의 경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9.7%, 38.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매우 안전하다”가 각각 29.3%와 32.2%를 차지
- 50대와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매우 안전하다”가 각각 39.8%, 44.0%, “보통”이 39.1%와 43.5%로 차이가 근소
-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을 포함하였을 때와 제외하였을 때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40.5%, 37.9%로 가장 많았고, “안전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7%, 35.7%로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우 안전하다”는 의견은 부여군에서 20.0%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은 당진시에서 5.4%로 가장 높게 응답
-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지역별로 공주시가 3.78로 가장 높았고, 홍성군이 3.08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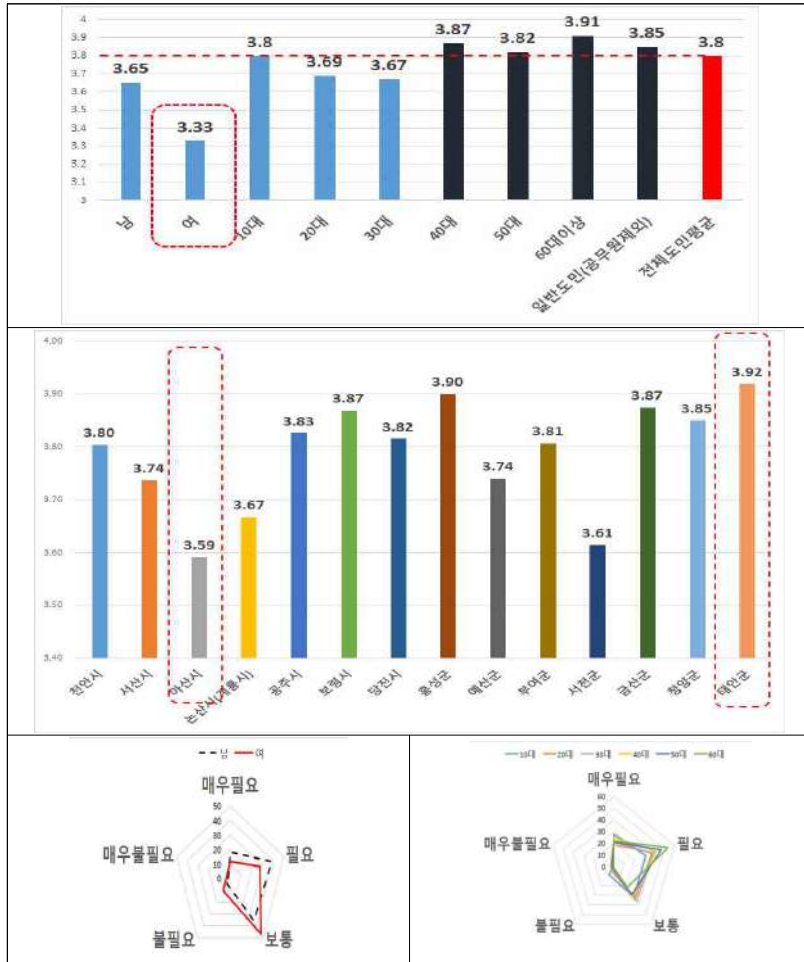
■ 거주지역의 사회적약자 보호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221 (18.4)	464 (38.8)	427 (35.7)	55 (4.6)	22 (1.8)	8 (0.7)	1,197 (100)	3.65
	여	80 (11.6)	192 (27.8)	323 (46.8)	70 (10.1)	23 (3.4)	2 (0.3)	690 (100)	3.33
연령	10대	7 (28.0)	9 (36.0)	8 (32.0)	1 (4.0)	0 (0)	0 (0)	25 (100)	3.88
	20대	69 (28.6)	81 (33.6)	70 (29.1)	11 (4.6)	9 (3.7)	1 (0.4)	241 (100)	3.78
	30대	67 (18.2)	115 (31.2)	146 (39.7)	23 (6.3)	14 (3.8)	3 (0.8)	368 (100)	3.51
	40대	45 (9.9)	130 (28.7)	207 (45.6)	55 (12.1)	15 (3.3)	2 (0.4)	454 (100)	3.28
	50대	92 (15.7)	234 (39.8)	229 (38.9)	27 (4.6)	3 (0.5)	3 (0.5)	588 (100)	3.64
	60대 이상	23 (10.6)	88 (40.7)	92 (42.6)	8 (3.7)	4 (1.9)	1 (0.5)	216 (100)	3.53
직업	일반도민	190 (12.7)	492 (33.0)	648 (43.4)	111 (7.4)	42 (2.8)	10 (0.7)	1,493 (100)	3.43
	전체도민	303 (16.0)	658 (34.7)	753 (39.7)	126 (6.7)	45 (2.4)	10 (0.5)	1,895 (100)	3.54
지역	천안시	42 (13.5)	107 (34.4)	134 (43.1)	19 (6.1)	8 (2.6)	1 (0.3)	311 (100)	3.49
	서산시	41 (21.6)	59 (31.1)	70 (36.8)	8 (4.2)	11 (5.8)	1 (0.5)	190 (100)	3.57
	아산시	17 (17.3)	30 (30.6)	45 (45.9)	3 (3.1)	1 (1.0)	2 (2.0)	98 (100)	3.54
	논산시 (계룡시)	23 (19.7)	45 (38.5)	39 (33.3)	10 (8.5)	0 (0.0)	0 (0.0)	117 (100)	3.69
	공주시	12 (17.4)	37 (53.6)	16 (23.2)	2 (2.9)	2 (2.9)	0 (0.0)	69 (100)	3.80
	보령시	20 (12.5)	57 (35.6)	65 (40.6)	13 (8.1)	5 (3.1)	0 (0.0)	160 (100)	3.46
	당진시	9 (9.8)	26 (28.3)	42 (45.7)	12 (13.0)	3 (3.3)	0 (0.0)	92 (100)	3.28
	홍성군	8 (8.9)	26 (28.9)	38 (42.2)	14 (15.6)	3 (3.3)	1 (1.1)	90 (100)	3.21
	예산군	10 (13.0)	27 (35.1)	32 (41.6)	6 (7.8)	0 (0.0)	2 (2.6)	77 (100)	3.45
	부여군	39 (26.0)	50 (33.3)	52 (34.7)	8 (5.3)	1 (0.7)	0 (0.0)	150 (100)	3.79
	서천군	10 (14.3)	21 (30.0)	27 (38.6)	7 (10.0)	2 (2.9)	3 (4.3)	70 (100)	3.30
	금산군	31 (15.0)	76 (36.7)	83 (40.1)	11 (5.3)	6 (2.9)	0 (0.0)	207 (100)	3.56
	청양군	26 (17.0)	58 (37.9)	61 (39.9)	6 (3.9)	2 (1.3)	0 (0.0)	153 (100)	3.65
	태안군	15 (13.5)	39 (35.1)	49 (44.1)	7 (6.3)	1 (0.9)	0 (0.0)	111 (100)	3.54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적약자(아동·여성·청소년) 보호활동의 만족도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남성은 “만족한다”가 464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통”이 427명(35.7%), “매우 안전하다”가 221명(18.4%)의 순
- 여성의 경우 “보통”이라는 답변이 323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가 192명(27.8%), “매우 만족한다” 80명(11.6%)의 순
- 남성과 여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남성의 경우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57.2%이며, 여성의 경우 39.4%를 기록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적약자(아동·여성·청소년)의 보호활동에 어느 정도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10대의 경우, 대체적으로 만족한다(64%)고 응답
- 20대의 경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81명(33.6%)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70명(29.1%),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이 69명(28.6%)로 차이가 근소
- 30~40대의 경우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39.7%, 45.6%로 가장 많았으며, 20대와는 다르게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이 각각 18.2%와 9.9%로 상대적으로 큰 차이를 기록
-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을 포함하였을 때와 제외하였을 때 모두 “보통”이라는 의견이 각각 43.4%, 39.7%로 가장 많았고,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3.0%, 34.7%로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 지역별로 살펴보면, “매우 만족한다”는 의견은 부여군에서 26.0%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서산시에서 5.8%로 가장 많은 수준
-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지역별로 공주시가 3.80으로 가장 높았고, 홍성군이 3.21로 가장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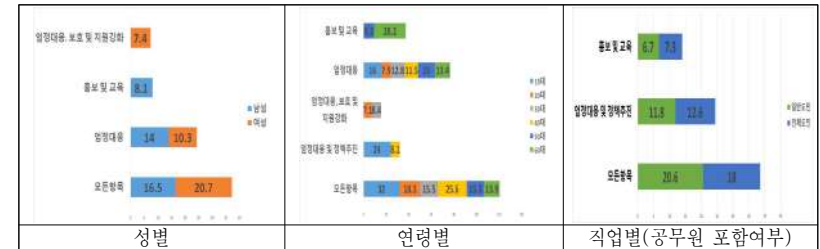
■ 거주지역의 사회적약자 보호 필요도



구분	매우필요	필요	보통	불필요	매우불필요	응답 없음	합계	5점 척도
성별	남 233 (19.5)	524 (43.8)	385 (32.1)	24 (2.0)	18 (1.5)	13 (1.1)	1197 (100)	3.65
	여 177 (25.7)	295 (42.8)	195 (28.3)	10 (1.4)	10 (1.4)	3 (0.4)	690 (100)	3.33
연령	10대 7 (28.0)	8 (32.0)	8 (32.0)	2 (8.0)	0 (0)	0 (0)	25 (100)	3.80
	20대 51 (21.2)	91 (37.8)	82 (34.0)	9 (3.7)	7 (2.9)	1 (0.4)	241 (100)	3.69
	30대 69 (18.8)	143 (38.9)	135 (36.7)	10 (2.7)	8 (2.2)	3 (0.8)	368 (100)	3.67
	40대 113 (24.9)	190 (41.9)	139 (30.6)	5 (1.1)	4 (0.9)	3 (0.7)	454 (100)	3.87
	50대 124 (21.1)	274 (46.6)	170 (28.9)	7 (1.2)	8 (1.4)	5 (0.9)	588 (100)	3.82
	60대 이상 48 (22.2)	116 (53.7)	46 (21.3)	1 (0.5)	1 (0.5)	4 (1.9)	216 (100)	3.91
직업	일반도민 352 (23.6)	663 (44.3)	425 (28.5)	19 (1.3)	18 (1.2)	16 (1.1)	1,493 (100)	3.85
	전체도민 414 (21.8)	822 (43.4)	581 (30.7)	34 (1.8)	28 (1.5)	16 (0.8)	1,895 (100)	3.80
지역	천안시 70 (22.5)	128 (41.2)	101 (32.5)	8 (2.6)	2 (0.6)	2 (0.6)	311 (100)	3.80
	서산시 46 (24.2)	74 (38.9)	56 (29.5)	3 (1.6)	10 (5.3)	1 (0.5)	190 (100)	3.74
	아산시 17 (17.3)	36 (36.7)	39 (39.8)	3 (3.1)	0 (0.0)	3 (3.1)	98 (100)	3.59
	논산시 (계룡시) 21 (17.9)	49 (41.9)	40 (34.2)	2 (1.7)	4 (3.4)	1 (0.9)	117 (100)	3.67
	공주시 12 (17.4)	40 (58.0)	14 (20.3)	0 (0.0)	2 (2.9)	1 (1.4)	69 (100)	3.83
	보령시 37 (23.1)	65 (40.6)	58 (36.3)	0 (0.0)	0 (0.0)	0 (0.0)	160 (100)	3.87
	당진시 21 (22.8)	38 (41.3)	30 (32.6)	1 (1.1)	2 (2.2)	0 (0.0)	92 (100)	3.82
	홍성군 22 (24.4)	43 (47.8)	22 (24.4)	1 (1.1)	1 (1.1)	1 (1.1)	90 (100)	3.90
	예산군 11 (14.3)	42 (54.5)	21 (27.3)	1 (1.3)	0 (0.0)	2 (2.6)	77 (100)	3.74
	부여군 34 (22.7)	62 (41.3)	48 (32.0)	4 (2.7)	1 (0.7)	1 (0.7)	150 (100)	3.81
	서천군 13 (18.6)	31 (44.3)	20 (28.6)	2 (2.9)	0 (0.0)	4 (5.7)	70 (100)	3.61
	금산군 47 (22.7)	92 (44.4)	64 (30.9)	3 (1.4)	1 (0.5)	0 (0.0)	207 (100)	3.87
	청양군 32 (20.9)	74 (48.4)	41 (26.8)	4 (2.6)	2 (1.3)	0 (0.0)	153 (100)	3.85
	태안군 31 (27.9)	48 (43.2)	27 (24.3)	2 (1.8)	3 (2.7)	0 (0.0)	111 (100)	3.92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사회적약자(아동·여성·청소년)의 보호활동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하여 묻는 문항에 남성의 경우 “필요하다”가 43.8%이며, “보통” 32.1%, “매우 필요하다” 19.5%의 순
- 여성의 경우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42.8%로 가장 많았고, “보통” 28.3%, “매우 필요하다” 25.7%의 순
- 남성과 여성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다수
-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의 경우,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20대의 경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91명(37.8%)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143명(38.9%)으로 가장 많은 수준
- 40대~60대 이상의 경우에서도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41.9%, 46.6%, 53.7%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60대 이상에서 특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을 확인
- 직업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을 제외하였을 때와 포함하였을 때 모두 지역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4.3%와 43.4%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직업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필요하다”와 “매우 필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각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지역경찰의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
- 지역별로 살펴보면, 태안군에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7.9%로 가장 많았고, “매우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서산시에서 5.3%로 가장 높게 응답
- 5점 척도로 환산했을 때, 지역별로 태안군이 3.92로 가장 높았고, 아산시가 3.59로 가장 낮은 수준

■ 가장 필요한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을 묻는 문항에 남성은 선택지의 모든 활동을 다 선택한 유형(197명, 16.5%)이 가장 많았으며,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택지의 모든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이 모두 필요하다고 선택한 유형(143명, 20.7%)이 가장 많은 수준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이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10대~50대의 경우 사회적약자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사회적약자에 대한 정책 추진 및 보호와 지원 강화,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가해자 제벌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선택지 모든 보호활동이 다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8.2%로 가장 많은 수준
- 이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 최근 많이 활용하는 PC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나 교육이 잘 전달되지 않음으로, 다른 방법의 홍보나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을 묻는 문항에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도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전체도민 모두 선택지의 모든 사회적약자 보호활동이 다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이 20.6%와 18.0%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 비슷한 수준

2)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여성에 대한 안전 보호 강화

- 일반적으로 여성의 안전 민감도가 높은만큼 여성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범죄 및 교통 등에 있어 여성들의 불안감 존재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발굴

- 지역별로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이 존재
-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치안정책 필요

■ 범죄예방시설의 확대

- 범죄 안전에 대해 여성의 불안감이 남성보다 높으며, 지역별로는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불안감이 높게 나타남
- 범죄예방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서산시가 가장 높고, 당진시가 가장 낮음
- 범죄예방 활동 필요성에 대해서는 40대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지역별로는 태안군, 보령시, 논산시에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남
-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음
 - 범죄예방활동의 필요성이 매우 높으며 그 중 범죄예방시설의 확대설치를 통한 예방활동 필요
 - 범죄예방시설과 함께 순찰강화 등 자치경찰의 생활 속 활동 중요

■ 교통안전활동 강화

- 교통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30~4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당진시, 홍성군, 서천군에서 불안감이 높았음
-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으로서 남성은 교통안전시설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여성은 교통단속이나 제지의 요구가 높음

- 교통안전시설의 확대도 중요하나 여성의 경우 교통단속 및 제지의 필요성을 강조

■ 사회적약자를 위한 활동 확대

-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만족도는 공주시가 가장 높게 홍성군이 가장 낮게 나타남
-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태안군의 요구도가 가장 높고, 아산시가 가장 낮았음
 -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의 확대
 -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다양화

5. 비전 가치 도출 조사 분석

1) 비전 가치 도출 조사 개요

■ 조사목적

- 충남자치경찰의 비전 설정을 위해 T/F위원과 외부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내외부 환경과 핵심가치 및 추진방안들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비전으로 연계

■ 조사설계

[표 38] 조사설계 내용

구분	내용
조사내용	내외부 환경, 기관의 존재이유와 목적, 고객의 수요, 핵심가치와 달성방법, 핵심서비스 등
조사대상	자치경찰T/F, 자문위원, 연구진
조사기간	2021. 6. 02 ~ 07. 02
자료수집방법	개방형 조사지 활용 인터뷰 및 워크숍

2) 비전 가치 도출 조사 분석

(1) 내외부 환경

-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환경들에 있어 자치경찰제 추진의 한계
- 자치경찰제의 발전을 위한 기회들로는 주민들의 참여와 다양한 의사반영 및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 존중에 대한 가능성 등이 제시



- 자치경찰제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우리의 문제
- 자치경찰제의 추진을 어렵게 하는 내부의 문제들로는 내부의 인식부족과 지방정부간 재정격차 및 자치경찰인력의 신분문제 등이 제시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내부의 장점
- 자치경찰제의 성공을 위한 장점들로는 지역특화서비스제공 가능,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긴밀한 협조관계의 지속적 유지, 충남의 주민자치활동 등이 제시



(2) 기관의 존재

■ 존재의 목적과 이유

-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활동과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치적 중립과 안전 체감도를 높여야 하는 것으로 제시



■ 자치경찰제 고객의 수요

- 자치경찰제에 대한 고객의 수요들로서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주민 자치 실현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등으로 제시



■ 자치경찰위원회의 핵심가치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핵심가치와 추구해야 할 방향들은 자치분권의 가치 실현과 행정과 치안의 균형 및 중립성 확보 등으로 제시



■ 핵심가치의 달성 방법

- 자치경찰제의 핵심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은 지역친화적 치안행정과 협력체계의 구축 및 민관거버넌스의 플랫폼 구축 등으로 제시



■ 자치경찰위원회의 핵심서비스

-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제공해야 할 핵심 서비스들은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주민요구사항 반영 등으로 제시



■ 자치경찰위원회 장기적 성과

- 자치경찰제의 장기적 성과는 지역주체의 참여와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치안활동과 주민의 요구 반영과 주민 자치의 활성화 등으로 제시



제3장 충남 자치경찰 비전과 목표

제1절 충남 자치경찰 비전과 목표

제2절 충남 자치경찰 비전 목표와 전략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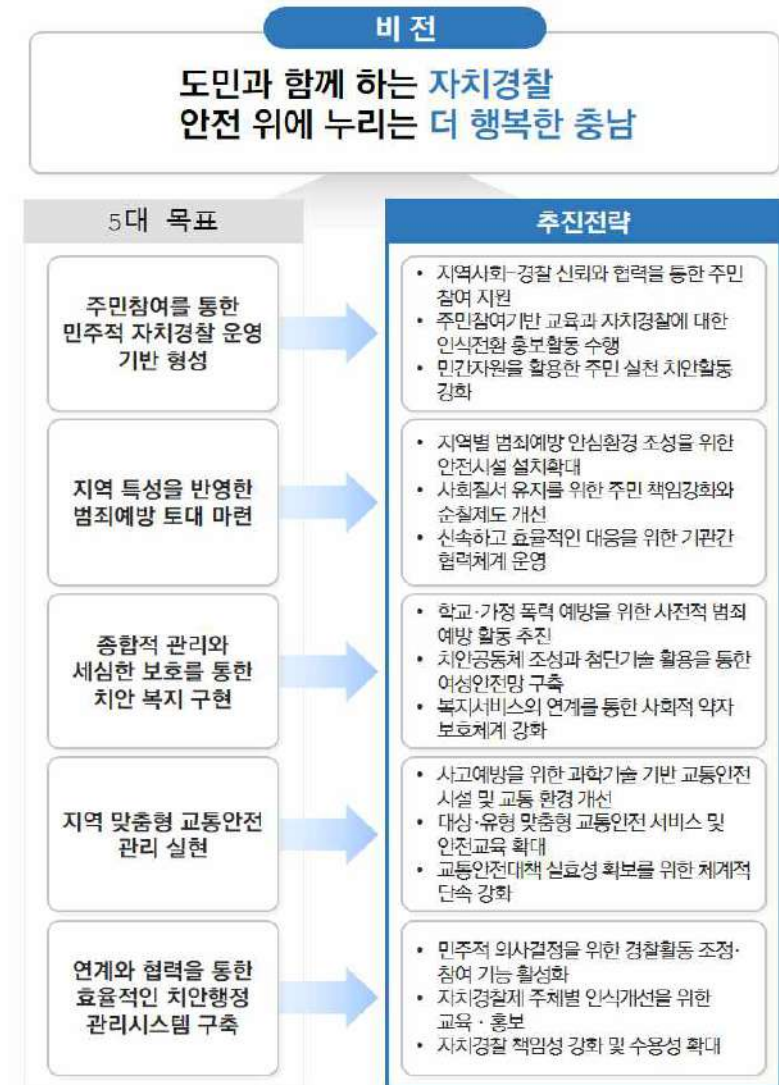
1. 충남 자치경찰 비전과 목표

-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시행
 -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치안서비스의 질을 향상
 - 지역주민의 의견이 치안서비스에 반영되어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
- 한편,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들도 예상
 -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치안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불균형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
 - 자치경찰이 지역의 권력과 유착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중립적이고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 필요
 -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과정에 있어 기초자치단체의 소외와 배제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제의 운영과정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모니터링 필요
 -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자치단체 별 치안의 불균형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보조 방안에 대한 구상 필요
- 자치경찰 비전은 새롭게 시작되는 자치경찰제의 시행에 따라 제기되는 문제와 우려들을 해소하고 도민의 변화되는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기반을 마련
 - 강화되는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충남의 특성이 반영된 자치경찰의 모습을 제시

1. 비전과 기본가치

- ① 연계, 협력 (→ 권한, 자원, 재원의 통합과 연계 : 효율성 강화)
 -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충남도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고 협력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
 - 충남도정과 연계는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가능성도 높일 수 있어 참여의 영역을 확대
 - 업무에 있어서도 단순한 연계와 협력을 넘어 신규 업무 및 통합, 조정을 통한 성과 창출 기대
- ② 주민밀착, 참여 (→ 주민주도 : 체감안전도 향상)
 - 주민참여를 높이고 주민이 느끼고 체감하는 치안행정 추진 가능
 - 지역공동체 및 시민단체들과의 적극적 연대를 통한 주민친화적 자치경찰 정착
- ③ 주민수요 반영 (→ 의견수렴 : 지역특성 반영)
 - 획일적인 치안업무와 행정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고 도정 및 주민의 수요 적극 반영
- ④ 보호, 안전 (→ 사회적 형평 : 사회적 약자 보호)
 - 사회적 요보호 계층 및 치안행정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 제고
- ⑤ 민주, 창의 (→ 의사결정 과정과 기관운영 : 일하는 방식 개선)
 - 민주적 의사결정과 합리적 업무추진을 통한 효율적 기관운영
 - 새로운 업무 및 기능 발굴과 창의적 추진을 통한 자치경찰의 목적 달성

2. 비전-목표-추진전략



2. 충남 자치경찰 비전 목표와 전략방향

[목표 1] 주민 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적은 지역사회 주인인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고, 이는 생명과 재산의 보호활동으로서 경찰의 주요기능에 해당
 - 주민의사가 적극 반영된 치안행정의 수행은 주민 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 민주화의 축으로 작동
- 자치경찰제는 헌법상 명시된 지방자치와 분권 이념에 부합하는 시대적 과제로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및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합행정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 자치경찰제 시행을 통해 지방정부는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치안행정 추진의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며, 지역적 특성과 필요에 따라 주민요구에 맞는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가능
- 경찰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ary policing)을 전개하는 새로운 치안질서(new policing)를 지향하는 흐름 속에서 주민중심 또는 봉사중심의 고객지향적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단속과 처벌위주에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자(problem solver)로서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전략으로의 변화 필요(이황우, 2007: 86)
 - 경찰과 지방정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동하여 지역마다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하고 실정에 맞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피해우려 등 불안감 해소와 치안만족도 제고에 기여
-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주민참여의 관점에서 ‘우리 동네 치안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자치치안 실현의 기회 제공
 - 주민은 수동적 고객이 아닌 능동적 주체로 역할이 변화되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중요

- 범죄예방의 효과성과 경찰활동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공식 지역사회 조직 및 주민을 참여시키는 협력적 활동의 중요성 강조
- 범죄 통제에 초점을 둔 전통적 경찰활동에서는 주민의 역할이 수동적인 입장이지만, 기초질서유지를 위한 자치경찰활동에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사회가 크고 복잡해질수록 경찰과 같은 공식적 통제기구 역할이 증대되고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약화되어 지역사회는 자신의 구성원에 대한 통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지만, 공식적 사회통제 수단 역시 인력 및 조직, 재원의 한계로 인하여 범죄통제 능력이 저하되고, 그 결과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비공식 사회통제 기능의 활성화 없이는 효과적인 활동 수행의 난맥 발생
- 따라서 경찰활동을 통한 공식적 통제와 지역사회에 의한 비공식적 통제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사회적 상호 작용과 규범을 공유하는 사회집단의 형성과 서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 상호연대에 의존한다는 것이므로 집단적이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매우 중요
- 자치경찰과 주민참여의 연계는 지역의 안전 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공동의 대안 마련이어야 하며, 공동생산과 파트너십 관점에서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가능한 수단이 필요
 - 과거 주민 참여제도는 자문위원회 등 협의회 형태의 간접 참여제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다양한 직접 참여제도가 마련
- 주민 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통해 진정한 자치경찰이 구현될 수 있다는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제시와 자발적 기여가 가능한 주민 참여의 공간과 기회를 마련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의 설계 필요
 - 주민참여 기반을 활성화하고 정보 공개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상호 인식의 차이를 좁히며 지역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생성
 - 협력치안 조직인 “자율방범대”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행정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민간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지역의 자율치안 역량 강화와 자원 확충
 - 지역사회 공동체성 회복을 통한 자치경찰활동의 연계는 사전 예방적 차원의 기여뿐만 아니라 지역단위의 상호부조, 긴급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사후구조 등 다양한 측면으로 확대 가능

- 전략 1.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전략 2.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전략 3.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 실천 치안활동 강화

목 표	추진전략	실행과제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자치경찰 민관협력 통합논의 제도화
		자치경찰과 주민자치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상답실”운영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어린이·청소년 자치경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주민공동체 조직의 치안활동 역량강화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 실천 치안활동 강화	민간장비와 인력을 연계한 협력방법
		딥러닝 활용 주민참여 취약공간 정보공유 및 위험지도 제작
		지역대학 - 자치경찰 연계 범죄예방 교육봉사프로그램 운영

전략 1.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신뢰는 민주행정의 첫 번째 요건이나 정부정책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 수행이라는 고객주의 이념보다는 권력의 현장유지나 고착화 수단으로서 역할에 치중해 온 결과 경찰행정에 대한 주민의 소외감 증대
 - 이러한 주민과 경찰행정 사이의 거리감은 결과적으로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지 못하게 됨으로써 수행능력이 감소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공질서의 기반이 흔들리는 결과 초래
- 질서와 치안이라는 사회 유지의 기본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약화는 사회 무질서와 혼란 야기
- 따라서 주민의 지지와 협조를 통해 질서있고 건강한 지역사회 유지의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때 자치경찰의 주민신뢰도 제고를 위한 전략으로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력관계 형성과 주민 참여공간의 확대 필요

■ 추진 방향

- 자치경찰위원회 내 세부 분야를 구성하고 분야별로 주민(조직)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과 논의과정 및 의제제안 기능부여
- 세부분야별 실무협의회의 논의들을 자치경찰민관협력 통합논의기구 통해 수렴하여 치안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며,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확대·강화하고 직접 참여 기회 제공함으로써 제도안착의 기본 틀 제공
 - 민관협력 플랫폼은 시와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 이통장협의회, 자원봉사협의회 등의 민간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치안협의회의 형태의 통합적 논의기구로 구성
 - 주민자치조직이 자치경찰위원회 및 지구대, 파출소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단순 심의기능이 아닌 주민주도 문제해결형 속의민주주의 기능 부여
 - 지역치안활동의 연계뿐만 아니라 위험지역과 통계 등의 정보공유와 공동조사 및 개발 등의 협력적 활동을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치안활동의 종합 플랫폼 역할 수행
- 통합 논의기구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먼저 민간차원의 주민자치조직이 치안행정에 능동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조직의 참여 유도
 - 민간 네트워크를 정례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위험요소들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추진
 -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안전과 관련된 참여형 활동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 및 정보 제공
 -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진정한 의미의 도민 참여 치안행정 서비스 확대
-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안전 및 일상 치안서비스 관련 정책제안의 창 마련과 적극적 제안을 위한 관심제고 노력 병행

- 경찰이 갖는 통제권한으로 인하여 주민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불만을 해소하고 자치경찰 도입의 취지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나 고질·반복·복합 민원 사항을 도민 입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창구 기능 수행

실행과제① 자치경찰 민관협력 통합논의 제도화
실행과제② 자치경찰과 주민자치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실행과제③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실행과제④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전략 2.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제도의 정착을 위해 치안행정부문의 변화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한 인식제고도 필수적
-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인 경우 체감안전도가 증가하는 등 긍정적 영향이 동반
 - 경찰활동이 범죄예방이나 검거에 효과적이거나 적절하다고 인식할수록 (Baumer, 1985; Renauer, 2007; 박성수·성용은, 2009; 정철우·정진성, 2017),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Dietz, 1997; 윤철규·최웅렬, 2015; 장안식, 2012),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Alda, Bennett & Morabito, 2017; 박운환·장현석, 2013) 주민들의 체감안전도가 증가
 - 따라서 경찰이 주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 못지 않게 긍정적인 경찰 상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의 병행 필요
- 주민의 적극적 참여유도를 위해서는 홍보활동의 대상자라는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서 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 의식과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추진 방향

- 지방정부와의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에서 경찰활동이 지역주민의 봉사자로 인식을 변화시키고, 주민으로부터 더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서는 경찰상에 대한 이미지 구축

- 미래세대에 자치경찰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정책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어린이·청소년의 체험활동은 자연스럽게 학부모로 연계되어 30~40대의 인식제고와 가족동반 체험 등의 기회가 마련되는 연계방식으로 확장이 효과적
- 자율방범대 등 주민공동체 단위 조직 활동은 일정한 예산 지원과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회원들이 생업에 치중하다보면 조직 활동에 소홀해 지거나 친목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역량강화 활동을 통한 전문성 증진의 기회 제공
 - 지역에 장기간 거주하며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치안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협조 요청
 - 주민 교육을 통해 스스로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제공

실행과제① 어린이·청소년 자치경찰 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행과제② 주민공동체 조직의 치안활동 역량 강화

전략 3.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 실천 치안활동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주민이 지역사회 안전의 능동적 주체로 기능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공동생산과 파트너십 강조
 - 행정과 주민이 함께 정책을 생산하는 공동생산(co-production) 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확장되며, 제4섹터로 명명되는 자원봉사단체와 공공부문이 함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방식,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전략적으로 협력하여 기반 시설 구축이나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종수·윤영진 외, 2008: 570-571)
 - 사회안전망 구축은 민간부문의 참여와 의식향상, 취약계층의 보호, 사회 집단별 계층별 보호 및 참여의 활성화에 중점
- 다양한 모든 지역사회의 치안문제 해결 목적의 자원을 공공에서 전부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 활용되는 관련 유무형 자원들의 적극적 활용이 효과적

- 민간 방법 인력 및 기구와 자산 및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 압목지 등의 활용은 자치경찰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견인
- 지역사회에서 보유한 전문지식과 유무형의 자산을 치안행정에 활용하고 민간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유발 사업 필요
-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위험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막연한 위험노출은 불안을 가중 시키거나 반대로 대비와 대처를 늦추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위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지원 활성화 요구
 - 최근 정보 데이터의 생산주체는 정부기관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민간 부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데 대한 긍정적 평가 확산
- 새로운 범죄유형이 생겨나거나 기존 범죄의 수법이 변화하고 특히 청소년 관련 범죄, 노인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 대응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현실적 예방 지원에는 한계가 존재
 - 지식의 전달과 범죄의 예방적 차원에서 나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관계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날로 파편화되는 공동체의식 복원의 계기 마련 필요

■ 추진 방향

- 사고 처리와 수색 단계에서 활용되는 지방청 단위 장비 보유 대수가 적고 관리가 엄격하여 적시성과 활용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하고 초동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내 민간자원(인력·장비)을 활용하기 위한 협력방법체제 정립
 - 경찰과 민간경비 간 지역 방법정보 교환, 민간경비업체-자율방범대와 협조적 연계 순찰 실시 가능
-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 안전지도 작성을 통해 지역사회 취약공간의 상세한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공유하여 효과적인 치안활동을 도모
 - 주민 조직들의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위험지도 작성(매핑(mapping))과정을 수행하고 이에 대해 실제 방법순찰활동을 주민조직이 운영하여 자발적인 치안활동을 수행하도록 설계
 - 위험지역 매핑(mapping)은 성범죄 우범지역, 청소년 범죄 우범지역, 현금 다액취급업소 등 치안의 세부분야별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작성하며 지역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도록 설계

- 구성된 지역위험지도의 정보는 지역치안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 구조를 마련하여 주민참여 치안역량을 강화
-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주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험한 곳에 경찰이 함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유도하여 체감 안전도를 향상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범죄예측이나 사고방지를 위한 기본적 기법인 범죄지도 작성, 핫스팟 분석, 도식화 작업을 수행
 - 위험지역에 대한 정보의 개방을 통해 주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환경 개선의 토대를 형성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범죄 취약시설 개선
 - 취약공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과의 협업을 위한 방식으로 데이터마ining, 딥러닝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
 - CPTED 등 범죄안전환경디자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 생성에 있어 주민이 참여한다는 효능감 제공
- 지역 대학의 구성원을 봉사자로 활용하여 청소년 대상 폭력예방 교육,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등 범죄피해 예방교육 실시
 - 지역의 인적자원을 범죄 예방교육에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봉사자에게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속가능성 담보

실행과제① 민간장비와 인력을 연계한 협력방법
실행과제② 딥러닝 활용 주민참여 취약공간 정보공유 및 위험지도 제작
실행과제③ 지역대학 - 자치경찰 연계 범죄예방교육 봉사프로그램 운영

[목표 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 2015년 이후 충남지역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대상별·지역(시군)별 격차가 현저하여 현재의 치안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역별 정책 방향과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새로운 전략 필요성 제기

[표 39] 충청남도 연도별 5대범죄 발생건수 및 112 신고건수

(단위 : 건)

구분	5대범죄 발생건수	112 신고건수
2016	20,054	847,244
2017	18,910	830,541
2018	19,143	795,179
2019	19,830	789,513
2020	19,160	754,670
2021. 12. 17. 기준	15,827	838,012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 자료

- 강력 범죄 발생 건수의 총계는 감소하였으나 여성 피해자 비율, 노인 대상 범죄, 학교 폭력 등은 증가하였으며, 범죄 유형별로 성 범죄 피해 건수, 노인 대상 범죄 건수, 학교 폭력 피해건수 증가
- 지역별 강력범죄 발생 건수는 천안 서북경찰서가 전국 평균의 2.2배 수준으로, 천안 동남경찰서, 아산 경찰서 관할지역도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안 서북경찰서의 경찰 1인당 담당 주민수가 854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해당하며, 아산경찰서 747명, 천안 동남경찰서 617명으로 전국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등 치안력 편차 현저
- 한정된 자원으로 치안수요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찰 활동전략과 과학기술의 접목을 통하여 문제점을 탐색·발굴하며,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진단으로 최적의 방안 마련 필요
 - 충남도의 경찰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2020년 8월말 기준 455명으로 전국평균 415명 보다 높으며, 경기(551명), 경남(472명) 제외, 도 단위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수치
 - 치안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축적·분석해 취약요소를 발견함으로써 경찰력 활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 극대화하는 스마트 폴리싱의 특징은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과 객관성 있는 연구·기관간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

-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전략의 수립과 자원활용에 적용하는 지역별 분석을 발전시켜 자치경찰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해결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분석체계 마련을 통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
 -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생산하는 범죄 및 치안환경 관련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여건에 따른 예방전략 마련을 위한 정보자료를 형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외부적 환경변화와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과학적 접근 용이
 - 교통, 생활안전, 수사 등에서 따로 관리되는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연구개발의 투자 필요
-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에 따른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방법론 CCTV증설과 치안인력/순찰 강화가 요구됨에도 예산부족 등 현실적 한계 노정
 - 이에 대한 극복을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원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대처전략 마련 필요
 -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범죄의 발생 장소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은 범죄에 취약한 물리적 환경이 존재한다는데 있으며 일정한 장소적 경향성을 활용하여 예방정책에 반영
 -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이하 CPTED 또는 셉테드)는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기법으로 여러 학문간 연계를 통해 도시 및 건축공간 설계 시 범죄기회를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함으로써 범죄 및 불안감을 저감시키는 원리이자 실천전략
 - 대부분의 범죄는 일정한 시공간적 발생패턴과 피해대상의 반복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적 요인들을 사전에 통제하거나 제거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CPTED의 핵심
 - 범죄예방을 위한 CCTV설치가 개인 사생활 침해에 대한우려가 일부 대도시 권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는 있으나, 범죄의 예방적 효과와 사후 범인검거 활용 등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사업으로써 일정 수준의 시설 증가는 필수적이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제인력을 보강하는 등의 추가적 예산 투입 병행

[표 40] 인구 만명당 범죄예방 CCTV 대수 및 관제인력 수

(단위 : 건, 명)

구분	건수	관제인력 수
2015	26.37	-
2016	36.13	-
2017	41.93	0.014
2018	55.72	0.011
2019	74.86	0.012
2020	86.19	0.010
2021. 12. 17. 기준	86.19	0.010

자료 : 충남경찰청 내부 자료

- 주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의 위해요인 차단 및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이 단체장의 핵심 공약 사항으로 설정되면서 안전 도시를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부각
- 주민의 체감안전도가 낮을 경우 주민의 일상적인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정진성·장윤식, 2014), 경찰에 대한 평가와 인식도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Dietz, 1997; Sprott & Doob, 2009) 실제 범죄 발생의 감소 못지않게 체감 안전도의 중요성 대두
 - 경찰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거나 순찰 등 경찰활동의 가시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체감안전도가 높게 나타나고(이병도 외, 2015; 장현석, 2016; 정철우·정진성, 2017; 류준혁, 2012), 주민들의 경찰활동에 대한 만족이나 신뢰가 높을수록 체감안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박윤환·장현석, 2013; 윤철규·최응렬, 2015; 장안식, 2012)
 - 이러한 맥락에서 긴급구호 및 재난 분야⁴⁾에서도 관계기관 간 협력이 필요하며 관광지 운영 및 관리 분야, 방법 · 치안 활동을 위한 지원 분야에서 도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유기적인 공조가 필요

전략1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확대
전략2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전략3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4)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제2조 1항),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제5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등에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경찰의 개입을 근거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남도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무의 범위에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발생 시 지역주민 안전확보를 위한 긴급구조지원과 재해발생지역의 사회질서 유지, 재해발생지역의 교통관리와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서 지역 내 긴급구조 지원활동이 포함됨

목 표	추진전략	실행과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확대	스마트치안행정을 위한 예측활동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
		시군별 수요예측에 의한 경찰활동 지원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및 방범시설 설치 확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도민생활중심 법교육 실시
		기초질서위반 책임성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 수행 기준 마련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탄력순찰제도 보완 및 지역안전순찰 확대
		실종 및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연계관리
		주취자 ·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자치경찰 교육·훈련 실시

전략 1.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야 하는 여건에서는 제도적 · 현실적 제약이 예상되지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점에 의미
 -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경찰인력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대처 전략을 마련하는 기초의 형성 필요
 - 특히 범죄는 무작위 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장소적 경향을 나타내며 핫스팟(hot spot)이라 불리는 범죄 다발지역은 면적상의 비율은 높지 않지만 발생비율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서 대체로 변동성이 적음
 - 스마트 치안행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예측활동이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문제해결 지향적 경찰활동에 대한 이념과 절차를 계승 · 발전시킨 종합적인 업무수행 절차로 연결 필요
 - 범죄지도 작성, 핫스팟 · 핫타임 분석, 시공간 분석, 지리적 프로파일링, 위험지역 분석 등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의 신속하고 효과적 처리를 통해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기술적 여건 활용

- 현재 도입된 자치경찰제는 광역단위 모델로서 권역별,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적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우며, 소규모 지역단위, 마을단위에서 나타나는 요구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 노정
 - 따라서 광역단위를 기준으로 자치경찰 정책과 운영계획을 제시하더라도, 세부적인 활동계획에 있어서는 적어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는 다원화된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다각화된 전략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여건 마련 필요
- 도내 치안 정책 운영의 분야별 체감 안전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범범안전 분야를 가장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⁵⁾ 성별, 연령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범죄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요계층에 대한 만족도향상 방안 제고 필요
 - 2021년 3월 충남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 범죄 안전 정도에 대해 남성은 ‘안전하다’ 또는 ‘매우안전하다’ 고 느끼는 비율이 전체의 74.7%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은 53.2%로 편차 발생
 - 시군의 인구구성고 밀집도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범죄발생 현상이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예측적 대응이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대두
- 자치경찰의 역할은 주민이 바라는 경찰활동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형성하고 불안감 해소에 중점
 - 자치경찰이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산 시설과 연계하여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하는 등 지자체와 경찰서가 유기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진단 및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 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사업 실시 필요

■ 추진 방향

- 범죄의 예방적 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고려하면 지역사회 범죄안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적·비구조적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역 범죄 발생의 위험도와 발생빈도 등 현황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5) 충남경찰청 설문조사결과 체감안전도 안전하다는 응답비율 범죄예방 66.9%, 사회적 약자보호 49.2%, 교통안전 48% 순 (주민참여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자료, 충남지방경찰청, 2021. 4)

- 통하여 취약지역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자원을 재배치함으로써 효율적 관리 도모
- 현재 경찰이 자체적으로 수집·보유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행정 및 유관기관 정보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배치
 -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시설설치 및 순찰 강화지역을 선정하고 적절한 시설물의 성능과 순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하며, 이를 토대로 적절한 인력과 장비 등 순찰자원의 재구성 가능
- 특정 경찰활동을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병행되는 적극적 경찰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유형은 지역의 치안수요에 따라 상이
- 방범활동은 단순 범죄발생 뿐만 아니라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 수요 반응을 통한 시행지역 선정과 추진 방식 발굴
 - 충남은 70만 이상 대도시부터 3만의 군까지 관할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 각 시·군 및 권역에 맞는 치안수요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을 통해 수요 예측
 - 천안시의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폭력과 절도가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익명성 개인화의 특성으로 지역경찰의 도보순찰, 자전거 순찰 등의 공식적이고 가시적인 경찰활동 수요에 대응이 필요
 - 외국인 밀집지역의 경우, 경찰과 지역주민 간 유대관계 취약하거나 경찰에 적대적인 문화가 많으므로, 다문화 시민 등을 외국인 자율방범대와 다문화 치안봉사단 형태로 치안 활동에 적극 동참시키는 방식 고려
-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설치와 환경설계를 위하여 충청남도의 자치행정국, 재난안전실 및 건설교통국과 연계가 가능하며, 시·군과 협조가 필요한 업무를 포함한 지원을 통해 향후 자치분권 및 자치경찰 사무 발굴 업무에 있어서 보다 긴밀한 공조가 가능
 - CCTV 통합관제센터 활용, 반복적으로 범죄 발생이 높은 노후 주거단지 등 주거지역에서는 주택과 각종 기반시설의 노후도, 인적이 드물고 복잡한 좁은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 개별 건축물의 시간장치와 축벽공간 방범창 미흡, 노출 배관의 부실한 방범대책, 가로등, CCTV, 비상벨 등 공공시설의 부족 및 부적절한 설치 위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기관의 상호 협력 필요
 - 스마트 시티 구축사업과 CPTED를 활용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자치경찰이 참여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보완적 제공과 함께 사업의 완결성을 기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진단 및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사업 실시

실행과제① 스마트치안행정을 위한 예측활동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
실행과제② 시군별 수요예측에 의한 경찰활동 지원
실행과제③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및 방범시설 설치 확대

전략 2.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기초질서는 국민들의 질서인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지켜야 하는 윤리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위반상태를 방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에 위협이 되기도 하고, 경미한 위반을 용인하면 더 큰 범죄를 야기할 수 있을 우리나라 범죄수준 지수는 OECD 30개 국 중 27위에 불과
 -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무질서를 줄어나감으로써 지역사회가 질서있게 관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더 많은 범죄 발생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충남도와 자치경찰이 공동으로 불법주차, 쓰레기 투기, 불법노사적치물, 신호위반, 낙서, 고성방가, 호객행위 등 각종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속인력의 부족 등 현실적 어려움 발생
- 경범·기초질서의 경우 사회가 발전하면서 준법정신 등 시민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단속과 지도, 홍보를 병행하되, 지역별로 행락객이 집중하거나 특정 이슈에 관해 위반사태가 증가할 때는 선제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의 조성 필요
 - ‘경범죄(즉결심판)’의 경우 최고점은 2013년 1,224건이며, 최저점은 2011년 715건이며, ‘기초질서(통고처분)’의 경우 최고점은 2016년 2,409건이며, 최저점은 2019년 1,814건
 - 흐름을 살펴보면 2016년 427건 증가 후 2019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며 총 595건 감소

(단위 : 건)



출처: 경찰청, 각 연도 통계연보

[그림 5] 충청남도 경범죄(즉결심판), 기초질서(통고처분) 단속건수

- 여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 빈도가 증가하며, 특히 2000년대 후반 발생한 다중운집행사 중 대형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
-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들이 특정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모여들기 때문에 사소한 원인에 의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며 교통 혼잡 및 안전관리 요구 증대
- 집회 시위의 경우, 특정 집회 상황에 따른 분석은 자료를 활용하기 어려워 객관화가 난해하나 충남지역은 집회 시위 개최 건수는 전국 6위 수준으로 인구대비 발생이 비교적 많은 지역에 포함
 - 시위 개최 현황의 경우, 최고점이 2018년으로 나타나는데, 최저점은 2017년 1,015건 보다 2,672건 증가하면서 가장 큰 폭의 변화량을 기록
 - 경찰동원시위는 최저점이 2012년 50건, 최고점은 2016년 513건, 집시법 위반의 경우는 최저점이 2011년 5건, 최고점은 2015년 24건

(단위 : 건)



출처: 경찰청, 각 연도 통계연보

[그림 6] 충청남도 집회시위 개최 및 경찰동원 시위, 집시법 위반 발생 건수

- 체감안전도 측면에서 전체 응답자 중 약 45%가 순찰차량이 주변을 돌아다녀서 안전감을 느꼈다는 응답이었고, 다음으로 약 26%가 지구대나 파출소가 주변에 있어서 안전감을 느꼈다는 응답 이외에 도보순찰이 약 16%, 질서유지 활동이 약 9%, 범죄검거 활동이 약 4% 순
 -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들이 체감안전도 제고 측면에서 차량순찰 활동도 심리적 안정 측면에서 일정수준 긍정적으로 인식
- 도보순찰이 차량순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죄감소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도출되고 있으며,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보순찰과 차량순찰의 병행보다는 도보순찰의 한 가지 방법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단순히 순찰빈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경찰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순찰의 범죄예방 효과의 극대화
 - 도보와 차량순찰의 고유한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도보순찰은 차량순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이루어져 시민과의 대면접촉 가능성과 빈도를 높여 범죄정보 등의 지역사회의 소식을 청취할 수 있고,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무질서에 개입할 수 있는 개연성을 높여 보다 적극적 경찰활동이 가능
 - 차량순찰은 시민과의 대면접촉 가능성과 빈도는 낮으나, 신속성에 기반하여 신고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차량순찰로 발현되는 범죄예방 효과는 억제이론에서 설명하는 일반예방보다 특별예방의 효과에 기인
 - 경찰의 감시자로서의 범죄예방 효과는 순찰에 따른 경찰의 가시성에 의해서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예견되는 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경찰의 적극적 역할에 의해 발현

■ 추진 방향

- 생활중심 법 교육을 통해 지역변호사 단체나 유지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학습 보조자료를 개발·보급하고, 변호사, 경찰 등 외부인사들이 이를 교육함으로서 준법 의식 기초질서 교육이 전 도민에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
 - 특히 외국인 등 법제도의 기반이 되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불법행위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회적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적 교육 실시
- 주변환경 방치에 대한 것에 대한 상태책임 부과무를 지역차원에서 제도화 가능
 - 사람의 행위가 아닌 물건·환경의 상태로부터 위협이나 장애가 야기되는

- 경우 발생하는 위협에 대해 원칙적으로 행위자에 대한 책임부담이 합당하다는 측면
 - 질서를 해하는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와 관련된 문제로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권장하되 주민의 합의를 도출하는 수준에 이르게 되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실효성을 담보
- 다중운집행사에서는 행사 내부, 외부적 위험요소와 교통안전 위험요소가 존재
 - 경찰력을 투입할 때 고려되는 일반적인 위험성 평가 항목은 행사의 규모 및 성격, 기상 및 지리적 요건, 행사장 인근 행사 및 집회, 행사반대 단체의 위협 등
- 참가자의 흥분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 민간경비의 대응방식 등에 대한 급격히 변화할 수 있는 요인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부족하며, 구체적으로 참가인원 대비 대응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사실상 책임자의 재량에 의존
- 다중운집행사는 그 목적상 정치적 이거나 기업의 이윤추구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력의 투입 정도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세분화 필요
- 범죄빈발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를 통하여 주민의 심리적 안정감 제고와 치안 만족도 향상
 - 상당수 주민들은 경찰이 순찰의 횟수를 늘리고 도보순찰을 강화하거나 주요 지역에 대해 거점근무를 하는 방법을 통해 순찰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경찰의 가시성을 높인다면 체감안전도 제고에 효과적
 - 범죄빈발지역 외에 인적이 드문 어두운 골목길 등 취약지역이나 취약시간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며, 특히 골목길에는 차량순찰이 어렵기 때문에 도보순찰 확대가 불가피
 - 공원이나 학교 등 공공장소 주변에 어둡거나 구석진 곳에 대한 경찰활동 강화 요구에 반응
 - 부족한 현장 경찰력에 대한 보완이 필요성에 따라 지구대로 변경되면서 폐쇄된 파출소(치안센터)에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지구대의 파출소 분리 또는 별도의 파출소 신설 등 기구 재배치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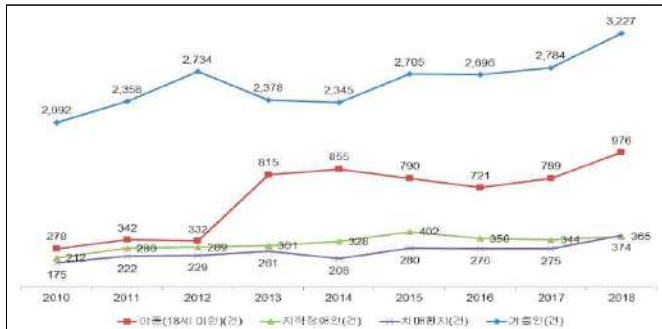
- 실행과제① 도민생활중심 법교육 실시
실행과제② 기초질서위반 책임성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실행과제③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 수행 기준 마련
실행과제④ 탄력순찰제도 보완 및 지역안전순찰 확대

전략 3.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 배경 및 필요성

- 도내 실종 및 가출인 발생추이를 최근 10년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아동에서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치매환자의 실종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단위 : 건)



출처: 경찰청, 각 연도 통계연보

[그림 7] 충청남도 실종(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및 가출인 발생현황

- ‘가출인’의 경우 최고점은 2018년 3,227건이며, 최저점은 2010년 2,092건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642건 증가하였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89건 감소한 이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882건 증가
- ‘아동실종’의 경우 최고점은 2018년 976건이며, 최저점은 2010년 278건으로 변화량이 가장 큰 구간은 2013년으로 483건 증가
- ‘지적장애인 실종’의 경우 최고점은 2015년 402건, 최저점은 2010년 212건 발생하였고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총 190건 증가
- ‘치매 환자 실종’의 경우 최고점은 2018년 374건, 최저점은 2010년 175건 발생하여 흐름에서는 일부 감소하는 구간들(2014년, 2017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9건 증가

- 생활 속 범죄 및 사고 발생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험 행위의 발생유발과 가중요인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음주는 그 자체로 범죄와 절대적 상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주취 폭력, 공무집행 방해, 불쾌감·불안감 유발, 우발적 범행의 단초를 제공
 - 음주나 약물은 중독으로 이어져 개인과 가정 및 사회적 불안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폐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요구
 - 최근 3년 기준으로 112 신고가 평균 19,510건 발생하여 주취자에 대한 과도한 경찰 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 출동시간 지연 등으로 치안공백을 유발하여 도민의 안전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며, 주취자를 경찰관서 보호 중 돌연사, 자해 등 불의의 사고 발생 시 경찰책임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 초래

[표 41] 주취자 112 신고접수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건)	천안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2018	23,014	8,512	2,092	2,853	1,409	1,060	1,173	1,824	1,137	633	481	438	444	307	651
2019	23,440	8,338	1,993	3,128	1,512	976	1,239	1,800	1,309	675	551	549	413	321	636
2020	18,901	6,417	1,798	2,564	1,062	889	1,107	1,356	1,029	552	466	470	368	255	568

출처: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 ‘최선의 형사정책은 최선의 사회정책’이라는 명언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방정책에서 본다면 정신질환 범죄인들은 범죄자이기 이전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점에서 형사사법의 처우대상이자 정신보건의료의 처우대상으로 형사사법체계와 정신보건의료체계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
 - 이질적인 두 분야의처우가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결합되어 실시될 때 이들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관리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사회복귀 기대 가능
 -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구체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촉발되므로 정신과적 증상과 위기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를 통해 그들이 지역사회에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지속

- 하기 위해서 어떠한 치료와 원조가 필요한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
-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충청남도과 각 시·군이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안전사고부터 치안업무로 사무영역을 확대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에 대한 민생치안활동을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적을 가짐
 - 자치경찰과 지방행정 조직간 연계 필요성이 증대되며, 도, 시·군 및 소방, 보건 관련 기관간 협력을 통한 주민 편의 증진과 안전 확보 필요
- 경찰은 범죄예방인 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해결인 역할 수행(Sheptyck, 2007)
 - 각종 안전사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이 일차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들 기관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지 않아 경찰에 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관계가 취약하므로 경찰의 순찰활동이나 방범심방을 통해 사고 발생 유발 요인의 사전 파악 기능이 보완되면 지역 안전도 향상에 기여 가능
- 기관간 분절적으로 수행되어온 동일목적의 유사사무에 대하여 경찰-행정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연계 협력 필요
 -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와 목적에 따라 정책 수혜자인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예산과 인력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가 필요한 사무를 발굴과 책임 한계에 대한 제도화 과정 요구

■ 추진 방향

- 상대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인적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안전수요를 반영하고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찰 사무와 연계하여 실종예방, 자살, 산불 등 기관 간 통합관리가 가능한 사무 영역을 발굴하여 지원
 - 지역의 안전수요에 맞는 사무의 재정립과 고도화를 통해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소방서 및 관련 행정기관과 연계
- 시군 기초지자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관제센터에 안심벨, 실종자 접수 등 치안활동에서 취득되는 정보를 연계하여 위급상황 모니터링과 신속한 출동 및 구조 업무 처리 지원

- 주취자로 인해 유발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권역별 지방의료원과 경찰서간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신고건 수 비율을 확인하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센터 근무경찰관은 교대근무 배치하며 기존 시설을 활용
- 중독과 연계치료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조를 통한 통합서비스 실시
 - 주취자의 보호와 더불어 중증 주취자에 대한 약물치료 상담, 회복 등 치료와 재활을 통한 근본적 사후관리 구조를 형성
- 정신질환자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한 어떤 환자의 경우에는 신체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또는 항정신병 약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도록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군청이 시행하는 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
- 현대적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전인적 지역 경찰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 설치를 통한 체계적 교육·훈련 실시

실행과제① 실종 및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연계관리
 실행과제② 주취자,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실행과제③ 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목표 3]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 경찰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
 -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례없는 속도로 한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행동에 큰 변화 야기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연결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치안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고, 예측불가능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통제에 중점을 기존의 경찰활동만으로는 변화된 치안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특히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대응은 성격상 사전적(proactive), 예방적(preventive)이기 보다는 반응적(reactive)이고 사건지향적(incident driven)인 특성(이황우 외, 2016)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과 엄정한 대응전략이 필수적
- 범죄통제에 있어 사전예방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경찰활동에 있어도 범죄의 예방이 핵심이 되고 있으나,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경찰의 기능과 활동에는 분명한 한계를 노정
 - 범죄의 원인은 매우 복잡하고 사회 전제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현상이기에 범죄의 예방을 위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매우 제한적
 -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 일원화 모델은 현행 경찰조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학교 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업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으로 자치경찰제도 본래의 취지와 이상을 모두 담아내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
 - 자치경찰이 보다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찰활동을 수행하고, 지역실정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일선 경찰관과 지역 주민, 유관기관 등과 의견수렴 및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

- 자치경찰제도를 실효적으로 구현하고, 효과적인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사회, 지자체,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과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성은 물론 도민 전반에 불안심리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이미 과거부터 스토킹, 묻지마 범죄, 여성 혐오범죄, 증오범죄 등의 다양한 형태(오세연, 2017)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법도 계속 진화
 - 최근 범죄예방의 패러다임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적 요인 즉, 범죄기회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여성을 범죄 표적으로 한 범죄자가 범행기회를 가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의 발생의 예방관리 필요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드론(Drone) 등 4차 산업혁명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범행기회를 차단해 범죄를 예방하거나 발생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대처
 -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의 형태는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크게 소프트웨어(Software)적 방법과 하드웨어(Hardware)적 방법으로 구분
 - 소프트웨어적 방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을 활용하거나 특정 범죄예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하드웨어적 방법은 범죄 예방을 위해 각종 센서나 드론, CCTV 등을 사용하는 방식으로써 나날이 진화되고 융합화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종합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 제기
- 평균연령의 증가와 저출생 등 사회 여건의 변화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학대나 사회적 무관심으로 인한 노인 자살을 증가 등 사회문제가 증대
 - 노년기에 접어들어 신체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에 따른 사회적 존중과 인권의 보장 요구
- 공간기준으로 가정, 시설, 기타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와 방임, 자기방임, 유기 등 피해 예방과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

전략 1.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전략 2. 치안공동체 조성 및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안전망 구축 전략 3.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목 표	추진전략	실행과제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시민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가정폭력 업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치안공동체 조성 및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안전망 구축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경미 가해자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 개발
		범죄 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전략 1.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범죄는 피해의 특성상 은밀하게 자행되고,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는 발생하였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른바 암수범죄(hidden crime)가 많아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함
 -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특성, 가정과 사회문화적 요인, 교육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만큼 형사사법기관의 노력만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나날이 흉폭화·잔인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2012년 부터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138명으로 증원되어 1인당 10.9개 학교를 담당(경찰청, 2020)

-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폭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전문성 및 인성이 부족한 경찰관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리는 사례가 발생

[표 42] 최근 5년간 학교전담경찰관 충남지역 배치현황(정원 66명)

(단위 : 명)

년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SPO 명수	66	63	55	55	54

출처: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 아동·노인 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위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를 2016년 4월에 신설하였으나 담당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 2020년 기준 충남의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으로 정원(29)명에 못 미치며, 충북 또한 정원(24명)에 3명 모자라는 21명으로써 학교경찰관 1명당 평균 6,000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⁶⁾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노인·장애인 학대, 스토킹 범죄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해 현 인력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보다는 현재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힘겨운 실정이며, 학대예방 경찰관으로 활동하는 경찰관의 계급도 경사 이하로 집중되어 있어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발생

■ 추진 방향

-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의 사전적 예방과 업정한 대응을 위해서 시민 참여 중심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자체·경찰 통합교육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 전문가 인력풀 구성,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경찰학교 운영 등 다양한 실천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 충청남도 자치경찰의 다양한 치안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협력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6)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10112010003933>(검색일: 2021.08.24)

유도하고 범죄예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범죄예방활동 마일리지 (포인트) 제도’ 를 시행

- 다양한 범죄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정 교육을 수료한 주민, 자율방범대 및 사회적 약자 안심 귀갓길 지원 등 자원봉사자, 기타 충청남도 치안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한 주민을 대상으로 마일리지를 부여하며, 일정 마일리지 적립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감소 뿐만 아니라 학내 안전감 제고, 경찰에 대한 태도 향상, 학생 및 교사의 인권보호, 그리고 관계 기관들 사이의 협력 증진 등 다양한 성과를 지향(김상호, 2021)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확충과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필요성 제기

- 청소년과 교육이라는 업무 특성에 맞는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권,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 상담, 상담 윤리, 피해자 심리 등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대상 경찰교육훈련을 추진

- 자치경찰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을 증원하여 담당 인구를 현실화 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치안취약계층에 대한 학대 사건이 증가한 만큼 여성청소년 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 등 인사 관련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강화, 근무 환경개선, 충분한 예산지원 등으로 장기 근무 유도

실행과제① 시민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
실행과제② 학교폭력·가정폭력 업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실행과제③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실행과제④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전략 2. 치안공동체 조성 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 안전망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한정된 경찰 인력만을 활용한 경찰활동으로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화·지능화·첨단화·강력화되는 범죄에의 효과적 대응 한계 발생

- 국가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방식으로는 새로운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치안활동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치안확보라는 거시적인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및 경찰, 지자체 등 공공부분, 민간부분, 시민사회가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하는 치안 거버넌스(Security Governance)의 필요성이 대두(김영식, 2016)

- 지역사회 치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경찰, 지자체,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과 긴밀하고 체계적인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범죄 소식을 접할수록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과 국민, 나아가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가 저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표 43] 2020년 충청남도 지역별 성폭력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분	계	천안	서산	아산	논산	공주	보령	당진	홍성	예산	부여	서천	금산	청양	태안
발생 (건)	1,020	381	91	114	49	59	60	68	61	34	15	32	29	6	21
인구 (만명)	212	65	40	31	11	10	10	16	10	8	6	5	5	3	6
10만명당 발생(건)	48	115	22	36	44	59	60	42	61	42	25	64	58	20	35

출처: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 특히 늦은 밤 또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 및 살인 등을 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밤 늦게 홀로 귀가하는 1인 가구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은 가중되는 실정

-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범죄가 감소한 데 반해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 범죄는 2016년 11,631건에서 2020년 18,210건으로 약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거침입 범죄의 증가 원인을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로 파악⁷⁾

-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여성 1인 가구는 261만 477 가구에서 2020년 333만 8956가구로 21.8%나 급증⁸⁾하고 있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 및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단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

7)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17010010545&form=MY01SV&OCID=MY01SV> (검색일: 2021.08.25.)

8)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8707>(검색일: 2021.08.25.)

Ⅲ. 충남 자치경찰 비전과 목표

【표 44】 2020년 충남지역 성범죄 발생시간

(단위 : 건, %)

구 분(건/%)	계	심야 (00-04)	새벽 (04-07)	오전 (07-12)	오후 (12-18)	초저녁 (18-20)	밤 (20-24)
계	1,020	349	87	119	164	73	228
		34.2%	8.5%	11.7%	16.1%	7.2%	22.4%
강간·강제추행	806	286	78	80	135	52	175
카메라 등 이용촬영	142	46	6	23	21	11	35
통신매체 이용음란	61	16	3	14	6	9	1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1	1	0	2	2	1	5

출처: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 추진 방향

- 충남지역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가정폭력범죄 3회 이상 반복신고 불입건수는 25건(신고건수 대비 73.5%)으로 전국 평균 50.6% 대비 22.9% 증가하였으며, 특히 형사입건시에도 여전히 2/3 이상은 영장신청 또는 임시조치 없이 단순입건만 하고 있는데 반복신고 사건은 ‘재발 우려가정’ 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가정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들 수 있으며, 세대 간 전승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원혜옥, 2021) 가정폭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하여 가정폭력 징후가 있는 가정의 조기 발견 및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초기 상담 및 교육, 교정프로그램을 실시
 - 현재 경찰은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육 및 교정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가정폭력 교육 및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예컨대,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재발방지를 서약한 가정에 한하여 ‘행복 가정안정 지원금’ 지급)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성을 극대화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표 45】 가정폭력범죄 3회 이상 반복신고 처리현황(2021년 06월 기준)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071	219	50	44	95	26	33	38	0	337	44	23	6	34	6	29	39	24	24
재발우려가정	1,031	209	49	44	93	25	33	27	0	337	44	23	6	24	6	28	37	22	24
소계	529	88	11	20	43	11	20	20	0	178	39	13	5	9	3	17	18	17	17
임시조치영장신청	16	5	1	0	0	0	1	1	0	6	0	1	0	0	0	0	0	0	1
형사입건	148	26	1	1	21	4	9	10	0	43	14	0	3	2	2	3	4	1	4
임시조치영장신청	8	4	0	0	0	0	0	0	0	1	0	0	1	0	0	0	2	0	
영장신청	357	53	9	19	22	7	10	9	0	129	24	12	2	6	1	14	14	14	12
불입건			39	24	52	15	13	18	0	159	5	10	1	25	3	12	21	7	7

출처: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원룸촌 등 범죄 사각지대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별 여성으로 구성된 치안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역 치안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 및 취약점, 골목길의 가로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의 이상 유무, 귀갓길 위험지역, 디지털 성범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찰과 민간이 협력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앱 내 같은 지역의 여성 가입자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긴급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할 경우 경찰 및 등록된 지인에 현재 위치 전송, 1인 가구 여성이 일정 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등록해 놓은 다수의 구호자에게 GPS로 파악된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의 범죄 예방 서비스를 추진하며 추가 기능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원룸촌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설계
 - 야간 자체 발광 할 수 있는 축광석 설치, 야간 조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 표지병 및 태양광 안심등 설치, 고가의 CCTV 설치가 어려운 범죄 취약 지역에 스마트보안등 설치, 범죄자의 범죄심리 역제를 위한 노면 표시, 비상벨 LED 안내판, 귀갓길에 친근한 이미지와 문구가 투영되는 로고젝터 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조화

- 현재 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여성안심귀갓길의 안내표지판은 고유번호, 도로명 주소 등 안내표기 방식이 차이가 있어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또는 위치값으로 안내표지판을 통일화하는 개선 작업을 추진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거주자 및 여성안심귀갓길 지역 거주자, 노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안심홈세트 (①도어락과 이중 잠금 가능한 ‘현관문 이중잠금 안전장치’ ②문열림을 앱이나 문자로 알려주는 ‘문열림 센서’ ③ 경보음이나 긴급메세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휴대용 비상벨’) 지원 사업을 시행
- 충청남도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 구축 사업, 안전마을 조성 사업, 범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등은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전담경찰관(CPO)과 지자체 도시개발 관련 전담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 모형 구축 필요

실행과제① 가정폭력 제발방지를 위한 경미 가해자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실행과제②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실행과제③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 개발
실행과제④ 범죄 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전략 3.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부모와 따뜻하고 깊은 유대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에 이르기 까지 자존감의 수준이 높고, 이러한 높은 자존감은 범죄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다수의 연구결과(Siegel, 2006)가 보고
-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거나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김정란, 2014; 이승주·정병수, 2015; 조민경·조한익, 2019; 전대성·김동욱, 2020)
-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의 피해경험이 공격성 및 폭력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폭력의 순환(cycle of violence)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 하게 개입하는 것이 중요

- 코로나19 팬데믹은 특정 범죄의 발생 및 피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개학 및 등교 연기, 유치원 및 학교의 원격(비대면) 수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장기간 자택에 있을 수 밖에 없다보니 범죄 표적 및 범죄 가해자가 되는 양면적인 현상이 발생
 -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 디지털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보호자의 부재나 가정불화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증가로 청소년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교 밖 및 제도권 밖에 있는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 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조상현·정병수, 2021)
- 고령화를 증가에 따라 변화 속도가 빠른 사회에서 판단력이 약해진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핵가족화로 인하여 혼자 생활하는 노인이 손쉬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 또한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경향이 나타남
 -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범죄나 교통사고 실종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경찰의 치안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대두됨

[표 46] 충남지역 학교폭력 현황

(단위 : 건, %)

구분	계(명)	초	중	고	학교밖
2018년	649	20	137	227	265
비율(%)	100	3.1%	21.1%	35.0%	40.8%
2019년	504	29	130	148	197
비율(%)	100	5.8%	25.8%	29.4%	39.1%
2020년	461	37	115	150	159
비율(%)	100	8.0%	24.9%	32.5%	34.5%
19년 대비(%)	-8.5	27.5	-11.5	1.3	-19.3
2020. 6월	177	20	52	63	42
비율(%)	100	11.3%	29.4%	35.6%	23.7%
2021. 6월	248	11	60	61	116
비율(%)	100	4.4%	24.2%	24.6%	46.8%
동기간 대비(%)	40.1	-45.0	15.4	-3.2	176

출처: 충남자치경찰위원회 내부자료

- 성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초기 개입과 분리, 대응, 지원 등 경찰과 유관 기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전이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추진 방향

- 학교폭력, 가정폭력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교육청, 지자체 여성·가족·청소년 부서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의 사후 지원을 도모하는 등 더 큰 범죄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
 -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각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 위기 아동·청소년 대응지원팀을 설치하여 대응 1팀에는 학교예방경찰관과 지자체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 대응 2팀에는 학대예방경찰관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합동 근무하며 사건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경찰 간의 유기적 협력 모형을 구축
- ※ ‘시·군’의 행복복지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지자체 도시개발 관련 전담 공무원, 학교예방경찰관(SPO)-지자체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 학대예방경찰관(APO)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찰-지자체 통합 부서를 설치·운영한다면 조직 및 부서 간의 원활한 정보 공유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충남형 자치경찰의 새로운 모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밖 및 제도권 밖 위기 아동·청소년을 상담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에 연계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쉼터를 제공하여 의료·생활·상담·학업·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후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
- 노인·장애인에 대한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맞춤형 안전 치안 추진
 - 노인·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발생 시 노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적극적인 현장대응으로 재발 방지 가능
 -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노인 증가에 대비하고, 가정과 시설 내 노인 및 장애인 학대 방지

- 성폭력, 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초기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 등에 있어 경찰과 유관기관의 공동대응을 위해 명확한 업무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

실행과제①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실행과제②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실행과제③ 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실행과제④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목표 4]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 우리나라는 199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최고 수치(13,429명)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지만 선진국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여전히 많은 상황으로 2018년 기준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우리나라는 7.3명인 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5.6명이며, 보행 사망자 비율도 우리나라는 39.3%로 OECD 평균(20.5%)의 두 배에 육박
 - 더구나 그 중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2019년 기준 노인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34.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의 3배를 넘는 심각한 수준
- 우리나라 교통 사망사고는 지자체 관할도로(지방도, 특·광역시도, 시·군도)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77%이고, 특히, 기초 지자체(시·군도)의 사망사고 비율이 36%에 이르며, 광역 지자체간 교통안전수준 차이가 최대 5배 이상에 이름
 - 도로종류별 사망자(%) : 고속국도 6.4, 일반국도 16.8, 지방도 13.1, 특별광역시도 23.4, 시군도 35.5 등
 - 2018년 기준 충청남도의 도로종류별 교통사고는 전체 9,677건 중 고속도로 313건, 일반도로 1,637건, 지방도(시·군도) 7,098건, 기타 629건으로 시·군도 발생 비율이 약 73%
- 2020년 충청남도 교통안전 분야 지역안전지수는 4등급이고, 기초자치단체는 2등급(천안시, 계룡시, 금산군), 3등급(아산시, 부여군, 홍성군, 예산군), 4등급(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태안군, 당진시), 5등급(논산시, 서천군)으로 15개 기초자치단체 중 9곳이 4, 5 등급으로 교통안전에 취약
 -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 지수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위험요소를 분석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
 - 2018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전국 평균이 7.3명이고 충청남도는 16.3명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고령자·어린이 등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교통약자를 우선 보호·배려하는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 필요

전략 1.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 환경 개선
 전략 2.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전략 3.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목 표	추진전략	실행과제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첨단 도로 위험도 평가기법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위험지역 첨단교통안전 보호시설 확충
		고령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 및 교통복지 확대
		영업용 운전자(운수업체·종사자, 택시·화물차 운전자, 이륜 배달기사 등)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강화
		초·중고, 대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 운영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도·단속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첨단 단속기법 활용 확대
		고위험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전략 1.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 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

■ 배경 및 필요성

- 국토교통부는 한국판 뉴딜 일환으로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여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44곳을 선정하였고, 충청남도에서는 아산시와 천안시가 선정
 - 지능형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첨단교통기술로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화·자동화된 운영으로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Cooperative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 자동차-자동차, 또는 자동차-인프라 간 통신을 통해 안전과 편의를 추구하는 교통시스템
-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로 새로운 도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도로 안전에 대한 정보확인이 용이하고, 도로안전에 위협이 되는 포트홀, 결빙, 안개, 유고 등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가공·제공하는 기술이 개발
 -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 정책의 패러다임이 기존 교통 소통정보 중심의 ITS에서 ‘교통안전’ 중심의 ‘C-ITS’로 변화
- 2020년 보행 사망자는 1,093명으로 전년대비 크게 감소(△16.1%)하였으나, 아직도 전체 사망자의 35.5%를 차지하고 있고, 사망자의 56.8%는 횡단중(횡단보도 내 22.4%, 외 34.4%)에 발생하며, 연령별로는 고령자(65세 이상)가 절반 이상(55.8%)이며, 주로 도시부 도로에서 다수(64%) 발생
 -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교통약자(어린이, 고령자) 보호를 위한 보행자 안전 인프라와 어린이고령자 안전 환경 조성 필요

■ 추진 방향

- 충청남도의 지역·권역별 도로교통사고 위험요인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위험도 평가기법을 모색하여 체계적인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쿨존,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시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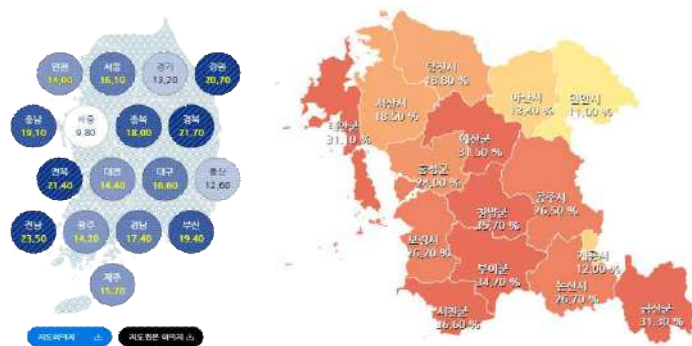
- 시·군 구도심의 도로환경은 차량 통행과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고, 보행안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곳이 많으므로 지자체별 보행안전 환경을 평가하여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횡단보도 및 보도 설치 등 보행 인프라 확충 추진
-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시·군의 경우 노인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고령자 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보행 환경 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
 -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농어촌 국도변 마을에 보호구역 지정, 보행안전 시설을 개선하여 사고 예방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예방

실행과제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실행과제② 첨단 도로 위험도 평가기법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실행과제③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위험지역 첨단교통안전 보호시설 확충
 실행과제④ 고령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

전략 2.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기준 충청남도의 고령인구비율(전체인구에서 만 65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로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나타냄)은 19.10%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곳이 6곳(태안군, 예산군, 청양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20% 이상인 곳이 4곳(홍성군, 보령시, 공주시, 논산시)



- ## ■ 추진 방향

-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
 - 지자체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증을 가진 반납하면 상품권과 교통카드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2018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2020년 말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9년 말 자진반납자 수만 7만3221명에 이르는 등 급속하게 증가
 -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충청남도의 경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자진반납 운전자들에 대한 타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과 충청남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이동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화물 적체불량으로 인한 낙하 사고, 과적차량,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및 난폭운전 등 고위험 행위 예방을 위한 영업용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운수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책무성 확보 방안 마련
 - 배달 업체 종사자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자, 자동차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올바른 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초·중·고, 대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확대
- 13세 미만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의 교통안전 감수성 향상
 - 특히, 교통약자의 특성상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교육센터를 운영 및 교통안전 의식을 함양, 체계적인 교통안전 교육 실시

실행과제① 교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납반 제도 개선 및 교통복지 확대
실행과제② 영업용 운전자(운수업체·중식사, 택사·화물차 운전자, 이륜 배달기사 등)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강화
실행과제③ 초·중·고, 대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 운영
실행과제④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전략 3.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교육 및 홍보와 함께 사고유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일반 예방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특정 행위에 대한 안전문화 정착
- 충청남도 교통안전 대책과 연계된 법규위반 단속을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안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고요인 행위의 감소 유도 필요성 제기

[표 47] 충남 교통사고 발생현황

구분	사고요인행위(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	9,229	8,894	8,560	8,406	8,910	10,027	9,032	9,327	8,885	9,471
사망(명)	491	451	433	448	433	413	393	356	355	309
부상(명)	15,231	14,628	14,093	13,604	13,928	15,507	13,475	14,225	13,495	14,196

출처 : 충남경찰청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계

- 충청남도의 차량등록 대수(이륜차 제외)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전체 도로의 52.5%가 시·군도, 23.5%가 지방도, 일반국도가 17.9%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높음
 - 2016년 전체 교통사망사고 중 지자체 관할도로(지방도, 특·광역시도, 시·군도)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77%이고, 특히, 기초 지자체(시·군도)의 사망사고 비율 36%를 기록

[표 48] 충청남도 연도별 차량 등록 대수

연도	총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2010	834,391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834,466	595,145	47,710	188,838	2,773
2012	855,931	615,863	46,764	190,399	2,905
2013	887,190	642,732	46,823	194,484	3,029
2014	924,651	675,335	46,110	199,842	3,364
2015	969,162	714,064	45,562	205,881	3,655
2016	1,015,144	755,208	44,783	211,110	4,043
2017	1,057,515	792,859	44,363	215,860	4,433
2018	1,093,582	825,081	43,528	220,317	4,656

출처 : 2019년 충청남도 통계연보

- 충남경찰청의 주민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장 필요한 교통안전활동에 대한 질문에 여성의 경우 ‘교통단속 및 제지’가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 형성
 - 주민들은 음주운전 단속, 사고유발 법규위반 행위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규제 등 경찰의 ‘교통단속과 제지’가 교통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판단

■ 추진 방향

- 보행사고 다발지역의 과속신호위반·불법 주정차 단속, 과적 화물차 단속 등 중점단속분야에 대해 위반행위·사고위험도 높은 지역을 선택하여, 연중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제도·홍보 추진
 - 충청남도 지역별, 계절별 맞춤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계획을 마련하고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경찰, 국토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단속 활성화
- 교통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상시 단속이 필요한 지점, 구간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고, 도로교통관리체계 및 교통수단의 첨단화와 함께 단속장비의 첨단화가 필요
- 지역별 고위험 법규위반행위(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을 실시하고, 고령자 거주가 많은 농촌지역 및 어린이 왕래가 잦은 학원·유치원·어린이집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집중단속 활성화

실행과제① 지역·권역별 맞춤형 중점단속분야에 대한 연중 집중단속계획 수립 및 실행
실행과제② 교통안전 전담 인력 확충 및 합리적 인력 운용
실행과제③ 고위험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목표 5]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 지방자치는 정치권한의 분산으로 개인의 권리 및 자유, 책임 의식 고취로 시민 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이승철, 2020).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성과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자치경찰 활동의 비전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
 - 자율과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음.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주민 중심의 ‘Policing’ 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찰의 독자적인 임무 수행을 강조하는 전통적 경찰활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패러다임의 변화
- 기존 방식과는 다른 ‘창의’ 와 ‘효율’ 이 나타날 수 있는 치안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활동 범위와 대상의 ‘다양성’ 을 전제로 한 ‘능동적’ 인 접근이 필요
 - 충남자치경찰에서 ‘다양성’ 은 경찰활동에 관련되는 조직 즉, 참여 기관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관·민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의미
 - 경찰활동에서 ‘능동성’ 은 전담부서 및 책임운영기관의 능동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주민 등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성을 전제로 한 활동의 강화를 의미
-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이 운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치경찰 시행에 대한 취지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결과
 - 자치경찰위원회의 상시적 소통 기능을 강화하여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지역 주민 의견 적극 수렴
 - 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기관 및 시군을 연결하는 체계 구축 마련 요구
 - 자치경찰 사업 추진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는 상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변화하는 치안환경 적응력 향상
-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따른 지역 안전정보를 진단·분석하여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성 제기
 - 기능별로 직무집행시 존재하는 위험발생 요소를 분석하여 최소화하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
 - 충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기별로 나타나는 불안요소의 통합관리방안 필요성 제기
 - 충남 지역의 안전에 관한 공무원 간의 협업 및 업무지원을 위한 기능 수행에 대한 요구 증대
- 자치경찰의 사무에 대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부여의 활성화 체계를 구축

- 현재 투입된 자치경찰사무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경찰활동을 진단하는 체계 마련
- 지역안전지수 핵심지표와 자치경찰의 활동을 연계하여 관리함으로써 충남의 전반적인 안전도 향상 효과 기대
- 담당 공무원, 부서, 기관의 협력 정도를 진단하여 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마련
-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찰은 물론, 도·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교육과정 개설

전략 1.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 활성화
전략 2.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전략 3.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목 표	추진전략	실행과제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 활성화	시·군-자치경찰위원회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치경찰 교육과정 운영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도민 인식개선 및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디지털 미디어 홍보와 쌍방향 공보기능 강화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자치경찰 성과관리
		자치경찰 인센티브 및 복지 향상

전략 1.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가 분리되기까지 중앙정부-지방정부, 국가경찰-자치경찰의 관계 속에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활동에 대한 조정과 다각적인 참여를 활성화하는 노력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중추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으며 입법 공백 및 행정의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부서의 적극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방안이 마련
 -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내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 수준 향상 요구 증대
- 자치경찰은 지역 특성과 주민 중심형 서비스를 전제로 도입 취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이 요구되며 주민이 스스로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필요성 대두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정책 및 역점 시책이 시군에서 수용·확산 될 수 있도록 행정 기능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민의 체감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자치경찰이 시행되면서 선진형 자치경찰로 발전되기 위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행 자치경찰제는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식이 아닌, 별도의 경찰조직 신설 없이 사무만 이원화하는 방식
 - 조직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사무만을 이원화하게 되어 인사·예산 등에서 다소 혼란이 예상되며, 지역인사의 영향력이 작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임⁹⁾. 이러한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의 개선이 필요

■ 추진 방향

-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된 직무수행을 보장하면서 주민신뢰 확보방안 마련
 - 위원회 활동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시민들의 치안 서비스 및 생활안전 관련 요구 반영

-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중심적 권한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있으며 경찰활동 관련 기관 및 도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참여 보장
 - 자치경찰위원장의 충남 15개 시군협의회 및 지방정부 관련기관 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
 - 지역 주민과의 정기적 소통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이를 자치경찰 성과지표화 추진
- 주민과 도청에서 필요한 경우 조례의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향후 충남의 자치경찰활동에 필요한 경우 조례의 제정은 진행될 것이나, 주민이 자치경찰활동 전개 및 개선의 요구사항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진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충남의 환경 변화에 따라 자치경찰과 관련된 사항의 도민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안전에 대한 변화의 신속한 적용과 이해를 위해 광역단위부터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연결체계 구축
 - ‘도-시-군-읍면동’ 까지 자치경찰의 주된 사업 및 중요 정책이 신속하게 이해·실시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및 인력 구성
 - 기초단위의 치안행정과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 활용
- 지역의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자치경찰 사업추진 우선 분야 조정을 위한 상시적 위원회를 구성
 - 충남도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으로 연결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무적 책임과 권한, 의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 주민과 전문가를 통해 자치경찰의 요구와 방향 조정

실행과제① 시·군-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실행과제②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실행과제③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55565(보도일: 2021.06.30)

전략 2.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도민과 공무원조차 자치경찰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낮아 향후 활동에 대한 도민의 지지 확보에 한계가 발생
 -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도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관련 기관 공무원 및 담당자 전반에서 향상시킬 필요성 제기
- 경찰업무의 대민서비스를 강조하는 배경에는 경찰행정이 근본적으로 주민 또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의 업무 우선순위가 대민서비스를 향할 때 주민의 신뢰와 협조, 존중과 직업으로서의 존경 유발 가능
 - 주민의 경찰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는 법집행 및 질서유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경찰활동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홍보의 필요성 제기
-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충남 자치경찰에 걸맞는 이미지를 구축하여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출 빈도 확장
-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삼는 공보기능의 변화 필요
 - 주민 여론을 파악과 여론 수렴을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에 반영하고, 기관 업무에 대한 주민의 협조를 얻기 위한 기반 조성 및 설득이 요구
 - 경찰은 그 업무 특성상 주민이 접촉을 받기 어렵고 다소 냉소적 경향을 표출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타 기관보다 공보기능 강화 필요
- 기업의 이미지가 고객의 구매행동을 유발하는 잠재적 힘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듯, 자치경찰 조직에 대한 주민의 이미지 또한 조직 자체 및 공무원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사회적지지, 사기 향상의 촉진 역할을 하게 되어 자치경찰에 대한 호의적 이미지 형성 가능
 - 자치경찰 이미지가 변화하면 경찰 조직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과 이를 통한 사회적 지지와 자치경찰 업무 수행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기여
- 공권력 작용기관으로서 물리력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기존 경찰기관의 특성상 권위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인식이 강함만큼 지역사회 주민이나 타 기관과의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업무협약이 난해

- 주민과의 협력체제에 대한 경찰의 인식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경찰의지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동반자 관계 형성을 통한 문제해결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 추진 방향

- 자치경찰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경찰 내부적 자치경찰에 대한 역량을 제고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상호 이해 증진
 - 도, 시군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치경찰 담당자의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향상 교육 실시
- 경찰 활동의 조정과 참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연계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기구를 상시 운영하고, 시군과 상호 교류 확대
- 자치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근무평정, 직원 파견에 따른 자치경찰위원회의 권한 확대 기반 제공
- 교육과 홍보는 대외관계(주민, 다른 조직과의 관계), 대내관계(경찰 내부 구성원), 미디어와의 관계(언론매체)로 설정 가능
- IT 기술의 발달로 시·공간을 초월한 디지털 신정망이 창출됨에 따라 경찰도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치경찰의 활동상을 주민에게 알리는 공격적인 홍보 전략 마련
 - 지역공동체에 대한 정기적 성과홍보 적극실시
- 자치경찰제도로의 변화를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경찰청과의 차별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활용하여 주민은 변화를 감지하고 자치경찰은 소속감을 증진할 수 있는 이미지 시각화
- 대언론 홍보는 물론, 지역주민에게 자치경찰 정책을 홍보하고 주민 여론을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쌍방향 의사소통 기능 수행
 - 정책의 취지를 알리고 이를 통해 정책의 순응을 확보는 동시에 메시지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전략방안(커뮤니케이션 매뉴얼) 마련하는 한편, 경찰홍보 기능의 조직 정비와 위상을 강화하는 전향적 변화
- 경찰관의 주민참여와 관심에 다소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경찰과 지역사회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과의 협력에 대한 경찰의 인식 변화를 내재화하기 위한 교육기능 강화

- 경찰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지역경찰관의 대면 경험이나 경찰의 범법 행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윤리의식 확보와 청렴도 강화 노력
- 자치경찰 내 직장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 관련 기관과의 업무이해를 위한 워크숍 등 프로그램 마련

실행과제① 자치경찰 교육과정 운영
실행과제②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도민 인식개선 및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실행과제③ 디지털 미디어 홍보와 쌍방향 공보기능 강화

전략 3.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경찰은 ‘치안종합성과평가’를 통해 관서·부서·개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인사와 교육 등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은 평가체계에 관한 논의가 미흡하여 향후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지속적 관리 문제가 야기
-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진단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현재와 미래의 전략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안
 - 자치경찰활동 사무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의 노력을 전개하고, 향상도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 필요
 - 자치경찰의 업무 평가 및 성과 평가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 초기부터 활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향 및 중점 활동을 선정하는 것에 중점
- 지역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범죄 등의 주요 분야를 평가하여 통계기반으로 지역별 등급을 산출
 - 자치경찰의 핵심역량 및 중점 활동을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음. 지역안전지수와 연계된 분야의 지표관리를 통해 자치경찰활동의 업무 성과 지표관리 체계 마련
-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과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 내용을 토대로 후생복지 강화를 통해 구성원의 사기진작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구성원 및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동기부여 요인이 현재까지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 초래
- 파견근무자 및 담당 구성원에 대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을 통해 협력적 업무 추진의 동력 제공

■ 추진 방향

- 자치경찰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치안 요구도 반응을 통해 경찰활동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집행 이후의 활동에 대한 검토·평가를 거쳐 지역 중심형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운용
 - 자치경찰사무는 현재 도·경찰(국가경찰 파견)의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운용되고 있음.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도내 전체 공무원 및 도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주요 활동에 대한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자치경찰활동 진단체계는 개인·부서의 성과 지향적인 평가가 아닌 자치경찰 사무 수행에 대한 적절성, 주민 협력, 공감대 형성 수준을 평가하며 경찰활동의 모니터링과 진단을 통해 초기 활동의 방향설정 검토와 개선사항 도출 및 지속 관리 도모
 - 자치경찰활동은 지역 주민의 안전체감도가 향상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체감안전도를 지표로 구체화하여 산정하는 것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별도의 연구를 통해 충남형 성과평가 체계와 지표 및 척도 마련
 - 주민의 치안요구와 자치경찰 관련 정책의 간극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핵심역량 및 우선 추진사업 선정 기준마련
-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하여 자치경찰활동의 지표선정과 지표관리, 종합평가와 환류의 절차를 마련. 매년 주요 관리 지표와 신규지표 발굴을 통해 지역의 안전체감도를 향상시키고 교통·범죄분야 지표의 연계관리로 동반 상승효과 유발
 - 정량평가에 반영되는 사고 발생률 및 물리적 환경 개선 활동 정도, 전담 공무원 수의 통합적 관리를 통한 지역안전지수 관리
 - 연중 진단과 모니터링을 통해 기능별 단위지표의 미비점 보완
- 자치경찰 사무의 협력과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 내용을 토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 담당 공무원·경찰활동 연계부서 및 기관으로 대상을 구분하여 도지사·

자치경찰위원장의 포상 제도 보완

- 지방행정과 경찰활동의 업무 조정 및 협의·조정제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 지표 구성에 반영
- 도내 관련 기관·부서·개인별 평가 자료 활용 범위 설정과 평가 지표 구성을 통한 동기부여

실행과제① 자치경찰 성과관리

실행과제② 자치경찰 인센티브 및 복지 향상

제4장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제1절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제2절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제3절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제4절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제5절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Ⅳ. 추진전략별 실행과제

목표	추진전략	실행과제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1-1-1)자치경찰 민관협력 통합논의 제도화
		(1-1-2)자치경찰과 주민자치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1-1-3)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1-1-4)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1-2-1)어린이·청소년 자치경찰 체험 프로그램 운영
		(1-2-2)주민공동체 조직의 치안활동 역량강화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 실천 치안활동 강화	(1-3-1)민간장비와 인력을 연계한 협력방범
		(1-3-2)딥러닝 활용 주민참여 취약공간 정보공유 및 위험지도 제작
		(1-3-3)지역대학 -자치경찰 연계 범죄예방 교육봉사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확대
(2-1-2)시군별 수요예측에 의한 경찰활동 지원		
(2-1-3)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및 방법시설 설치 확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2-2-1)도민생활중심 법교육 실시
		(2-2-2)기초질서위반 책임성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2-2-3)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 수행 기준 마련
		(2-2-4)탄력순찰제도 보완 및 지역안전순찰 확대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2-3-1)실종 및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연계관리	
	(2-3-2)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2-3-3)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자치경찰 교육·훈련 실시	

충남형 자치경찰제 비전과 추진전략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3-1-1)시민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
		(3-1-2)학교폭력·가정폭력 업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3-1-3)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3-1-4)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치안공동체 조성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안전망 구축	(3-2-1)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경미 가해자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3-2-2)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3-2-3)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 개발
		(3-2-4)범죄 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3-3-1)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3-3-2)위기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3-3-3)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3-3-4)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	(4-1-1)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4-1-2)첨단 도로 위험도 평가기법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4-1-3)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위험지역 첨단교통안전 보호시설 확충
		(4-1-4)고령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4-2-1)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 및 교통복지 확대
		(4-2-2)영업용 운전자(운수업체·종사자, 택시·화물차 운전자, 이륜 배달기사 등)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강화
		(4-2-3)초·중고, 대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 운영
		(4-2-4)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4-3-1)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도·단속
		(4-3-2)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첨단 단속기법 활용 확대
		(4-3-3)고위험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기능 활성화	(5-1-1)시군-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5-1-2)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5-1-3)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5-2-1)자치경찰 교육과정 운영
		(5-2-2)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도민 인식개선 및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5-2-3)디지털 미디어 홍보와 쌍방향 공보기능 강화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5-3-1)자치경찰 성과관리
		(5-3-2)자치경찰 인센티브 및 수용성 향상

1.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1-1-1 자치경찰 민관협력 통합논의 제도화

자치경찰위원회의 주민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의견반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분야별 도민참여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인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속 불편과 문제점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주민, 전문가와 소통하면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 요구
-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인적구성의 한계로 지적되는 주민대표성 약화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문제해결형 숙의민주주의 기능 강화 필요성 제기

2. 사업개요

-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야별 도민 의견수렴기구 구성·운영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자치경찰위원회 내 분야별 도민 의견수렴기구 구성 및 운영
 - 교통,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등)보호, 민관협력 등 자치경찰 사무관련 분야를 3~5 그룹으로 세분
 - 분야별 대표성을 가지는 주민, 전문가, 관련 부서 경찰 및 행정 공무원으로 구성 (분야별 7~10인)
 - 정례회의 개최(분기별)
- 구성된 분야별 의견수렴기구에서 숙의를 통해 제안된 의제를 정기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하여 처리 결과 환류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력부서 : 도청, 도교육청, 도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2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치경찰위원회 도민참여협의체 운영	회의운영	연중	20	4	4	4	4	4

6. 기대효과

- 주민의 치안수요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장의 마련으로 자치경찰위원회와 주민간 정책 이해도 공유기회 제공
- 주민이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전달되고, 처리되는 과정을 공유함으로써 치안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 확보

1-1-2 자치경찰과 주민자치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주민자치회의 역할로 지역의 치안안전 영역 제시·활용하고, 청소년 치안자치회(가칭) 구성을 지원해 차세대 치안네트워크로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치안 안전 분야의 주민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직화가 요구되나, 신규 조직 구성을 위한 예산과 한정된 시군의 인적 자원 범위를 고려할 때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함
- 주민자치회는 시·군, 읍·면·동 단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다각적 시도를 전개하고 있으며, 마을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등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초기단계로서 주민자치회가 지역공동체의 주축조직으로 활동 영역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주민자치회에 치안 안전 분야의 활동 영역을 제안하고, 자치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는 상호 연계·발전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청소년의 참여 기회의 제공을 통해 치안 네트워크 확대가 가능함

2. 사업개요

- 주민자치회를 활용한 자치경찰 주민참여활동기구 및 청소년 치안자치회 구성 지원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주민자치회 내 자치경찰의 주민참여활동 요구분야에 대한 사업화 제시
 - 주민자치회 대상 자치경찰 사업 설명회 개최
 - 주민자치회 내 자치경찰, 치안, 안전 분야를 포괄하는 분과위원회 구성 지원 및 구성된 주민자치회 대상 역량 강화 교육
- 청소년 치안자치회 구성 지원

- 시군 교육청과 연계하여 각 학교단위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고, 1-1-1 사업의 실무협의회 위원들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해 운영을 지원 가능
- 중·고등학생에게 필요한 봉사활동 시간(연 60시간)을 부여하여 청소년 참여 유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력부서(기관) :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등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7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치경찰 치안협력 구축	도민 참여 치안협력 네트워크 운영	연중	20	4	4	4	4	4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	연중	50	10	10	10	10	10

6. 기대효과

- 기존조직을 활용하여 신규 조직화에 따른 실패위험을 최소화하고 행·재정적 부담 경감
- 청소년 자치회 구성으로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동시에 학교치안 활동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학교폭력예방 등 부수적 효과 창출 가능

1-1-3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지역의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정책문제를 인식하고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 유도와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시책에 접목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1. 배경 및 필요성

- 주민참여와 소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제도 발전을 위하여 도민 아이디어와 이슈를 발굴하고 자치경찰 제도와 지역치안정책 발전에 대한 관심 제고 필요성이 제기됨

2. 사업개요

- 충청남도 자치경찰 사업제안 아이디어 및 혁신 이슈 발굴 공모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자치경찰 분야의 새로운 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 공모
 - 자치경찰 분야의 새로운 정책 및 사업
 - 방법, 경비, 안전 분야의 신기술 및 융합기술의 적용 및 활성화 방안
 - 현재 추진중인 치안정책 분야 정부 정책 개선안
 - 치안 분야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 창의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및 기대효과를 종합하여 우수 과제를 선정 및 시상
 - 우수과제는 심층조사,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책기획(안)으로 작성
 - 향후 정책 반영 및 신규 예산 확보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주민 대상 정책제안 공모·평가·수상	2022~	250	50	50	50	50	50

6. 기대효과

- 전문가 의견 중심의 정책수립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도민이 치안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
- 도민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높여 향후 정책의 수용성 확대에도 기여

1-1-4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자치경찰사무 업무수행 과정에서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충남자치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고충민원상담실” 설치·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재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기관 행정처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도민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 특히, 고충민원의 공정한 처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타 분야에 비해 크고, 개선 요구도가 높아 충남자치경찰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고충민원상담실” 설치·운영 필요

2. 사업개요

- 고충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 내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대상민원)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사무 중 충남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를 침해 하거나, 도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 (민원신청) 방문, 우편 및 인터넷(국민신문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 (민원처리) 「경찰법」상 감찰 권한이 위원회에 없는 관계로 민원내용에 대한 상담 및 법적 절차 등 안내 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사무국에서 사실관계 자체 확인 후 위법·부당사항 발견 시 경찰청장·도 경찰청장에게 감사의뢰·감찰요구 및 관계기관 이첩 등 적법(적정)하게 조치
- ⇒ 2022년도에는 “고충민원상담실” 설치를 위한 타당성 사전검토, 제도마련 (필요시), 장소선정 및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고, 2023년 이후부터 본격 시행하는 중기사업으로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협력기관·부서 : 경찰청 및 도 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3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고충민원 상담실 운영	고충민원 상담실 설치	2022~	30	-	30	-	-	-

6. 기대효과

-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불합리한 경찰행정 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충남자치경찰 이미지 확립에 이바지

1-2-1 어린이·청소년 자치경찰 체험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 경찰의 직업소개 및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와 참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청 연계 초·중·고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 체험프로그램

1. 배경 및 필요성

- 교육부가 발표한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경찰관’은 초등학생 장래 희망 6위, 중학생 2위, 고등학생 3위 기록(2019년 조사)하고 있으나, 드라마나 영화 등 매체를 통해 비추어지는 경찰의 모습은 단편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어 경찰업무에 대한 정보 취득과 직업 체험을 기회 제공 필요성 대두

2. 사업개요

- 어린이 청소년 자치경찰학교 프로그램
- 사업대상 : 도내 초·중·고, 학교밖 청소년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경찰직업체험, 학교폭력에 맞서는 힘을 기르는 교육부-자치경찰 협업프로그램
 - 지역경찰서 활용,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병행
-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급별, 학교별로 진행가능하며, 초등학교 저학년은 학부모와 동반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어린이 청소년 대상 방과후 활동, 돌봄교실 및 특별활동으로 시범운영 후 확산
 - 장기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도
- 일반과정을 표준화 하고,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추가
 - 학교폭력 역할극
 - 자치경찰 직무체험, 경찰 장비사용법 시연
 - 경범죄 단속과 고지서 발부 체험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사업부서 :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43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청소년경찰학교운영	청소년경찰학교운영물품	2022~	23	3	5	5	5	5
	청소년경찰학교정비구입	2022~	20	4	4	4	4	4

6. 기대효과

- 어린이 청소년에게 현실적인 직업정보 제공과 자치경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고양 및 학부모 세대의 인식제고 효과
- 학교폭력, 성폭력 등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가해 또는 피해 대상이 되는 범죄를 예방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며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치관 확립을 위한 범죄 인식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궁극적으로 각종 폭력 예방 효과 강화

1-2-2 주민공동체조직의 치안활동 역량 강화

주민의 치안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 범죄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은 지역사회의 안전주체로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이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용방안은 미흡한 실정
- 특히 경찰력에 의존하였던 범죄예방 및 대응방식이 사회 환경과 범죄행태의 급속한 변화와 다양성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점점 높아지면서 시민과의 협력치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자율방범대 등 현장 활용도 증대를 위한 주민참여 조직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이론과 실무 중심의 교육 필요성이 제기됨

2. 사업개요

- 자율방범대 현장활용도 증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 사업대상 : 시군 파출소 단위 자율방범대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충남형 자율방범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 교육프로그램의 목적 설정과 교육방향 및 교육가능성에 대한 종합검토를 통하여 정규경찰과 차별화되는 주제 선정
 - 자율방범대 임무 관련 규칙을 준용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기초지식과 순찰 활동, 청소년 선도, 교통 및 기초질서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 지역 특성과 치안환경을 고려한 활동범위를 종합하여 권역별로 세분
 - 자율방범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 행동요령 등 실무교육 강화
 - 교육과정은 기초, 중간, 전문 과정으로 구분하여 순차 진행
- 시군별 프로그램 시행
 - 권역별 시범지역 선정 후 확대 시행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83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	2022~	835	167	167	167	167	167

6. 기대효과

- 지역사회 안전확보 및 자율방범활동을 통한 대원의 자긍심 함양과 자신감 확대
- 시민주도 사회안전 및 범죄예방효과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교육이 대원의 적극적 활동으로 선순환

1-3-1 민간장비와 인력을 연계한 협력방법

지역방범활동에 민간경비를 활용하여 협력방범체제를 정립하고 방범 활동능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 및 조직적인 민간경비 지도·감독

1.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경찰인력은 세계적 수준에서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충남지역은 전국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더라도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해당함
- 최근에는 경찰만이 지역치안의 전담마크맨이 아니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치안문제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responsible citizens)라는 인식의 확산과 함께 지역사회의 치안문제에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한 민간 차원의 협력방범 치안이 요구됨
- 부족한 경찰인력을 보완하고 시설·장비의 부족과 노후화 극복의 대안으로서 지역 내 가용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지역 방범활동에 방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민간경비업체의 경비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2. 사업개요

- 자치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범체제 정립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지역협력방범체제 정립을 위한 정보 교환
 - 순찰 및 방범활동을 통해 관할구역 내 경비업자 영업소, 경비업무대상 시설을 방문하여 근래 방생하는 범죄발생현황 및 중요범죄에 대한 지역 방범 정보 교환
 -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등 범행 대상과 수범, 예방 및 검거요령 등을 설명하고 신고 및 경보현장의 초동조치를 위한 연락체계 마련

- 경비업체·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대표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지방청·경찰서·지구대 등에 초청하여 최근 경찰활동과 그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종류, 시간 수법, 그리고 범행의 특징 등에 관한 범죄정보를 설명하고, 경비업체의 112 오신고 감소 및 출동경비원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 방안, 경비원 근무요령, 공동주택 자위방법체제 보완, 주민의견 수렴 등 주기적으로 정보교환

- 지역 민간경비 관련기관의 정기적 간담회 개최
- 민간경비 역할강화 활용을 위한 민간경비 지도·감독 및 협력 관리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경찰청
- 협력부서 :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 협력 방법체계 조성	지역 치안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운영 (간담회, 연락체계마련 등)	2022~	50	10	10	10	10	10

6. 기대효과

- 민간경비가 자치경찰의 방법활동을 분담하여 지역의 방법능력을 향상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

1-3-2 답리닝 활용 주민참여 취약공간 정보공유 및 위험지도(map) 제작

주민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의 취약공간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고 공유하여 위험지도(map)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자발적 치안활동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안전역량을 강화하는 주민활동 지원의 방법을 다각화 하여 실질적인 체감 안전도 향상과 연계 필요성 확대
- 정보 생산의 주체가 공공부문에 한정되지 않으며 개인이 생산하는 각종 데이터를 집적하여 정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치안서비스에도 적용 가능성이 대두됨

2. 사업개요

- 주민참여 기반의 역량강화 교육을 통한 취약지역 위험지도 제작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사업대상 지역의 현황분석
 - 인구사회학적 특성, 활용가능한 지역자원 현황, 범죄 취약수준 파악
 - 방법시설, 구조물 정보 포함
-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필수교육을 통해 기본 역량을 강화하고 선택교육을 통해 지역 주민의 필요 충족
 - 지역 특성에 맞는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도록 구성
- 주민참여를 기초로 지역 위험지도 제작
- 자체 운영이 어려운 시군은 원활한 활동을 위한 컨설팅 지원
- 효과성 분석 및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분석 및 확산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도경찰청
- 협력부서(기관) :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14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주민참여 지역 취약요소 점검	주민 참여 범죄예방 활동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위험지도 제작)	2023~	120	-	30	30	30	30
	시·군 컨설팅 지원	2023~	20	-	5	5	5	5

6. 기대효과

-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증진
- 위험 취약요소에 대한 경각심 제고

1-3-3 지역대학-자치경찰 연계 범죄예방 교육 봉사프로그램 운영

주민이 스스로 교육하고 더불어 학습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하여 지역 대학생이 교육봉사자가 되는 범죄피해 예방교육을 실시

1. 배경 및 필요성

- 공동체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 방향은 점검과 교육, 신고를 핵심 수단으로 삼아 이루어지는데, 공동체를 통한 안전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 각종 시설 및 인력 자원을 활용해 지역형 교육을 실시할 것이 요구됨
- 범죄예방 교육은 주민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거부감 없는 주체가 교육에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내용과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주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반복을 통해 가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정보 제공자에 걸맞고 반복적 수행이 가능한 주체로서 지역의 대학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제안 가능함

2. 사업개요

- 지역대학-자치경찰 연계 범죄예방 교육 봉사 프로그램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청소년, 노인 등 대상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교육 분야선정 및 분야별 교육자료 제작
- 기수별 교수봉사자 모집, 소양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 봉사자가 되는 대학생(경찰행정학과 등)에게 기본 소양 및 교수법 등 기초교육 실시
 - 봉사시간 인정 및 위촉장 수여, 우수자 표창 등 인센티브 발굴
- 사업 홍보 및 각급 학교, 기관, 단체 등과 교육대상자 발굴을 통한 교육 실시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8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대학 연계 범죄 예방 교육봉사 프로그램 운영	지역내 대학 연계, 범죄예방 교육 실시	2023~	80	-	20	20	20	20

6. 기대효과

- 청소년, 노인 등 범죄 취약계층의 피해발생 감소
- 대학생의 지역사회 참여기회 제공과 세대간 소통 증진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2-1-1 스마트치안행정을 위한 예측활동 데이터 통합 활용체계 구축

산재한 치안·안전관련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으로서 정보공유를 위한 기관간 협력과 지원인력 배치를 통해 지속적 정보축적

1. 배경 및 필요성

-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인력과 장비 및 자원의 부족은 지속적 확충 노력과 병행하여 자원배치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 보완가능함
- 최근 각종 정책실현을 위해 사전 수요를 파악하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예측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경찰관이나 순찰차 등 치안자원의 배치에 대한 활용가능성이 제기됨
- 경제·사회 전반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데이터기반 행정법’ 시행(’ 20.12.)으로 공공분야의 패러다임도 대전환에 직면
 - 모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데이터기반행정 수행을 입법화하고 있어, 경찰도 조직 전반의 선제적 변화가 긴요
- 해외에서도 빅데이터 · AI 기술을 치안 분야에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 자치경찰도 관련 기술을 활용한 치안 역량의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

2. 사업개요

- 예산·장비·인력 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활용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3~

3. 사업내용

-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안전확보에 필요한 데이터 종류와 수집가능 분야 및 활용가능한 데이터 상태 분석
- 경찰청이 보유한 112 신고, 범죄통계 등 치안데이터를 중심으로 소상공인 데이터, 항공사진, 통신사 유동인구, 신용카드 매출정보 등 민간과 공공의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기관간 양해각서 체결

- 정보자원관리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여 분석 활용 및 자료 축적
 - * 행안부·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데이터’ 직류 신설(* 20.8.)
- 분석 정보를 기반으로 범죄 위험도 예측과 인력 및 장비 배치 등 활용 분야 발굴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력부서 :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2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 치안환경 데이터	치안 데이터 활용체계 구축	2023~	250	-	100	50	50	50
활용체계 구축	정보자원관리 인력 배치	2023~	-	-	-	-	-	-

6. 기대효과

- 관리자 및 담당자 개인 역량과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객관성과 과학성에 근거한 치안행정 달성 가능
- 자치경찰 전반의 치안서비스 상향 평준화
- 자치경찰제 추진에 부응하는 지역 치안정보의 체계적 구축 및 활용
-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여 범죄 예방효과 증대

2-1-2 시군별 수요예측에 의한 경찰활동 지원

시군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치안 수요에 대한 정보모니터링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을 발굴

1.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지역주민은 범죄발생 예방과 신속한 초동조치에 대한 기대가 고조
- 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경찰이 담당해야 할 치안수요는 현재 시점의 범죄에 국한하여 설정할 수 없으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요구되는 역할인 도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하며 질 좋은 삶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문제의 예방·차단까지 포함되어야 함

2. 사업개요

- 시군별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예측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시군별, 권역별 치안수요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 제시
- 지역 특화 방법활동의 대상 사업지역 선정과 추진 방식 발굴
- 도는 자치경찰 정책과 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시군 단위에서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는 다원화된 자치경찰 활동 수행 지원
-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경찰서장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연계함으로써 기초단위 지역요구 반영기회 제공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경찰청
- 협력부서 :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수요예측 지역 맞춤형	치안 수요 모니터링 및 맞춤형 범죄 예방활동 제시	2022~	-	-	-	-	-	-
치안활동 추진	시·군, 경찰서 협의체 운영 및 위원회 연계	2022~	-	-	-	-	-	-

6. 기대효과

-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방법활동 제시를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근본취지에 부응하는 효율적 지역방법 수행 가능

2-1-3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및 방법시설 설치 확대

시군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사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치안 수요에 대한 정보모니터링을 통해 수요를 예측하고 사업을 발굴

1. 배경 및 필요성

-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전국적으로 100점 평균 기준에 40점 대 수준을 기록하나 성범죄와 폭력에 대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인적이 드물고 어둡거나 방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 경우가 가장 높으며, 범죄 취약장소로도 공·폐가 및 공터가 특히 불안한 곳으로 나타남(문화체육부 조사, 2019)
-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법 시설 설치가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조명 시설과 CCTV 등에 대한 설치 요구가 높음
- 현재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사업에 대한 필요성인식은 비교적 낮게 나타나지만 이는 실질 인지도가 낮아 기인하며, 상대적으로 인지자 대부분은 사업 효과를 높이 평가하여 확대 필요성이 크다 할 것임

2. 사업개요

- 범죄예방환경설계 및 방법시설 확대 설치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행정기관과의 연계 협력 강화
 - ‘범죄예방정책협의체(가칭)’ 구성하여 도 및 시·군의 범죄예방정책 논의·협업·조정 활성화
 - 도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 자치경찰이 참여
 - 정부부처, 시·군, 민간협업 범죄예방환경개선 사업 공동추진
- 과학적 분석을 통해 CCTV, 가로등, 비상벨 등 설치 장소 선정 정보 공유

- 셉테드(CPTED) 등 치안정책 마련 시 자치경찰,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을 잘 아는 주민이 관련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보장
- 지역 맘카페, 자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안설명회 개최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건축도시과, 도경찰청
- 협력부서(기관) :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22,08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추진	범죄취약지역환경 개선 사업	2022~	22,080	4,080	4,200	4,400	4,600	4,800
	범죄예방전담팀 운영	2023~	-	-	-	-	-	-

6. 기대효과

- 도와 자치경찰이 연계한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범죄 예방환경설계 추진 가능

2-2-1 도민생활중심 법교육 실시

기초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범죄 발생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목적의 법질서 준수의 기초로서 준법교육 실시

1. 배경 및 필요성

- 법교육은 청소년 및 일반주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체계, 법원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법적 이해 능력과 긍정적 참여의식, 헌법적 가치관 함양을 목적으로 수행됨
- 기초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교정되어야 할 일상생활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이 범죄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도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별 특성에 맞는 생활중심 법교육이 필요함

2. 사업개요

- 생애주기별 생활중심 법교육 실시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어린이·청소년, 청·장년, 노년 연령별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변호사 단체, 퇴직경찰 자원을 활용하여 학습자료를 개발, 보급 및 교육
 -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 교육, 기초질서 준수, 보이스피싱 등 신종범죄 예방교육 및 법령 변경사항 안내
- 이민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청소년 등 법제도 정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강사가 실생활에 필요한 법교육 실시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경찰청
- 협력부서 : 도교육청, 경찰서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1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도민 생활중심 법교육	생활중심 법교육	2022~	100	20	20	20	20	20

6. 기대효과

- 주민의 준법의식 고양과 범죄 피해발생 감소

2-2-2 기초질서위반 책임성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사소한 위반은 더 중대한 범죄 발생을 야기하고 사회불안을 초래하며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므로 상태책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처벌 확실성이 높을수록 범죄예방효과가 크다는 것은 다수 학자의 견해이나 경미한 범죄 단속은 경찰의 개인 실적평정에 영향이 적어 기초질서 단속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며 단속인력이 부족하여 처벌의 확실성이 저하됨
- 현행 지방자치법은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에 해당하는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으며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우리나라는 기초질서보다는 중요범죄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자치단체가 권한과 책임을 지는 자치경찰의 운영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이 기초질서유지를 위한 지자체 수준의 관심과 노력이라 할 것임

2. 사업개요

- 기초질서위반 및 위험환경 방치의 책임성강화 종합대책 수립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주변 위험환경 방치에 대한 상태책임 부과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의 원칙 설정
- 주민의 자발적 참여 권장
- 향후, 주민 합의 도출 수준에 이르면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실효성 담보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기초질서위반 및 위험환경 방지 단속 조례 제정 검토	조례 제정 검토·추진	2022~	-	-	-	-	-	-

6. 기대효과

- 기초질서 준수의 중요성인식하고 자신이 거주하는 물리적 환경을 청결하고 안전하게 하도록 의무 부과 하여 더 큰 위반 가능성 제거 효과

2-2-3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수행 기준 마련

행사장 및 시설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와 교통정리 실시 및 경찰력 동원 기준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비경찰활동은 기본적인 경찰활동으로서 사소한 사건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행사 등을 통제하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높음
- 다중운집행사는 많은 사람이 제한된 장소에 집중되는 행사로서, 위험성이 높으며, 군중의 돌발성이 강하고, 군중의 흥분가능성이 높은 특성 탓에 위험성이 높으나 다중운집행사의 통제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등에 의하여 경찰이 아닌 주최 측에 부여됨
- 그러나 신분적인 한계 등으로 통제가 어려운 경우 경찰이 동원되게 되는데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의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2. 사업개요

-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교통관리
- 업무수행 기준 마련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 영리목적 행사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되, 참가자의 흥분에 영향을 미치는 성향, 민간경비 대응 방식에 대한 변화요인 등 위험성 평가 항목을 지정하여 경찰력 투입의 판단근거 기준 마련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경찰청(교통과)
- 사업부서 : 경찰서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수행기준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수행기준	연중	-	-	-	-	-	-

6. 기대효과

- 다중운집행사 교통관리 및 안전확보와 경찰력 동원의 효율성 제고

2-2-4 탄력순찰제도 보완 및 지역 안전순찰 확대

탄력순찰제도 보완 및 지역 안전순찰 확대 시행

1. 배경 및 필요성

- 지구대·파출소 별로 주요 범죄분석(Hot-Spot)을 통해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탄력순찰 노선으로 지정하여 주민불안감을 해소하는 탄력순찰로 경찰이 직접 지점을 지정하기도 하지만,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든지 원하는 날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여 요청해 주면 경찰이 순찰을 하며 범죄를 예방하는 주민밀착형순찰 방식이 지역사회에 다가가 지역 내 불안요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순찰 체계 및 과정으로 강조됨
- 충남지역 시군의 경우, 관내는 넓으며 좁은 골목길이 많아 방법시설의 미비로 범죄 발생 사각지대가 많이 존재하며, 야간에는 보안등이 많이 부족하여 여성이나 노약자가 어두운 길을 보행하는데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주민들은 순찰하는 경찰관을 많이 만나길 기대하며 그런 모습을 통해 안전감을 느끼지만, 경찰력의 제한과 넓은 관내에서 주민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므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순찰하는 탄력순찰에 대한 보완 필요
- 경찰관이 순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다가가 지역 치안문제 등 의견을 청취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경찰서 담당자가 지자체와 개선여부 등을 협의하여 위험요소에 맞는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안전순찰의 도입 필요성이 있음

2. 사업개요

- 탄력순찰, 지역 안전순찰 실시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지역안전순찰 제도 시행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군 관내 범죄 취약구역에 대한 범죄 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취약 환경 개선
- 주·야간 위험지역 순찰, 공·폐가 등 우범지역 내 범죄발생 사전차단과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을 위한 도보순찰 시행
- 지역안전순찰로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개선, 치안우려사항 점검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경찰청
- 협력부서(기관) :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탄력순찰, 지역 안전순찰 실시	탄력순찰, 지역 안전순찰 실시	2022~	-	-	-	-	-	-

6. 기대효과

- 지역실정과 현장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역 치안순찰활동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지역의 체감안전도 향상

2-3-1 실종 및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연계관리

실종 및 가출인 발생 증가와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합관제 센터 활용 위급상황 모니터링과 구조업무 처리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경찰 업무인 생활안전, 교통, 경비, 여성·청소년 관련을 비롯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 사무의 연계를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실현 목표 제시
- 야간 단순 생활민원 업무 처리에 따른 치안 공백방지를 위하여 통합관제 센터의 위급상황 모니터링과 구조업무 처리를 위한 기관간 연계 필요

2. 사업개요

- 24시간 현장대응체계 구축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경찰 행정 유관기관 간 상시협업 가능체계 마련
- 경찰-도, 시·군, 소방 연계 ‘24시간 신속-현장 대응체계’ 확대방안 검토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경찰청
- 협력부서(기관) :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단위 : 백만 원)					
			소 요 예 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24시간 현장대응체계 구축	24시간 현장대응체계 구축	2022~	-	-	-	-	-	-

6. 기대효과

- 긴급 중요사건의 초동대처를 위한 인력확보 가능

2-3-2 주취자,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치료연계 가능한 통합서비스 실시

1. 배경 및 필요성

-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취자의 보호자 인계 및 보호를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인한 문제와 주취자 보호 중 자해나 폭행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책임부담 가중
-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료기관 인계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순찰 등 치안활동의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 개선요구가 이어짐
- 경찰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현장 입장 등 도움 없이는 현장에서 즉시 ‘주취자 및 극도의 흥분자’와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구분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비전문가로, 전문가의 개입이 없는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적절한 처리가 힘든 경우가 많으며, 초기 보호(발견) 단계에서부터 자치경찰과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

2. 사업개요

- 주취자 정신질환자 공동지원시스템 운영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확대
- 고위험 정신질환자 통합지원센터 연계
- 만취 상태로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구호대상자를 센터 내 병실로 이송
- 중독, 정신질환 치료·병원 연계 프로그램 실시
- 고위험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 및 치료연계 지역 협의체 운영
 - 지자체, 경찰·소방·의료기관으로 구성된 ‘지역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활성화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력부서 : 도경찰청, 공공의료원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1,500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주치자, 정신질환자 공동지원시스템 운영	주치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2022~	300	60	60	60	60	60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병상 확보	2023~	1,200	-	300	300	300	300
	지역 정신응급대응 협의체 운영 활성화	2022~	-	-	-	-	-	-

6. 기대효과

- 보호조치 대상자를 경찰관서에 보호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시비 및 안전사고 우려 해소
- 경찰은 주치자의 난동을 제지하는 수준에서 통합관리센터로 업무를 인계함으로써 업무부담이 완화되고, 경찰 본연의 임무에 더 집중하게 될 수 있음
- 중단없는 치료 재활을 통해 잠재적 범죄발생 위험성 감소 효과 및 사회 복귀 시간 단축

2-3-3 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변화하는 치안수요와 환경여건에 따라 자치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 다변화

1. 배경 및 필요성

- 변화하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경찰자원의 교육훈련을 모색하고 어떤 상황에도 대처 가능한 전인적 능력을 요구하는데 따른 전문성 강화 교육 필요성 대두
- 순찰 또는 112 신고 현장에서 위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 정신질환 이해 등 새롭게 마주하는 상황변화에 적합한 기능요구
- 이민자,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체류 외국인의 증가 추세에도 외국인은 언어장벽과 한국사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금융사기 등 각종 범죄에 취약한데 따른 지원기능이 가능하도록 다문화, 성인지 감수성 교육 필요

2. 사업개요

- 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교육·훈련 다변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전역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
-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대처방법 교육
- 다문화 범죄예방활동, 법 감수성 교육, 범죄예방 홍보 및 가족교육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 : 1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치경찰 담당경찰관 교육·훈련	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교육·훈련	2022년~	15	3	3	3	3	3

6. 기대효과

- 위급상황 시 신속대처로 도민과 자치경찰 모두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
- 긴급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과 자녀를 포함한 도민의 가정폭력 예방과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강화

3.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3-1-1 시민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 시민 참여 중심의 다양한 실천적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추진

1. 배경 및 필요성

-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과 같은 범죄는 피해의 특성상 은밀하게 자행되고,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범죄 피해는 발생하였지만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른바 암수범죄(hidden crime)가 많아 형사사법기관이 범죄의 발생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특성, 가정과 사회문화적 요인, 교육적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만큼 형사사법기관의 노력만으로 효과적으로 예방하거나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최근 범죄통제에 있어 사전예방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경찰활동에 있어서도 범죄의 예방이 핵심이 되고 있으나, 범죄의 사전예방을 위한 경찰의 기능과 활동에는 분명한 한계 있기 때문에 경찰활동에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이 중시
- 따라서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범죄의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참여 중심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인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천적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

2. 사업개요

-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하며, 주체적인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프로그램의 구축 및 추진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찾아가는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예방 강의
-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인식개선을 위한 토크콘서트
-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예방을 위한 체험형 시민경찰학교 운영
- 지역주민 대상 학교폭력·가정폭력 근절 캠페인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협조부서(기관) : 시군 경찰서, 도 교육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74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학교·가정폭력 예방 지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2022~	590	110	120	120	120	120
	복지시설 내 학대점검 및 예방교육	2022~	140	24	26	28	30	32
	APO워크숍	2022~	15	1	2	3	4	5

6. 기대효과

- 지역 주민들에게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회적 인식개선을 유도
- 지역 주민들의 주체적인 범죄예방 역량을 강화하여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한 대민 피해를 최소화
- 시민 참여 중심의 실천적 범죄예방 프로그램 제공으로 인한 경찰행정의 신뢰성 제고
- 경찰공무원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켜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관계 개선에 기여
- 경찰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 및 참여 증대

3-1-2 학교폭력·가정폭력 엄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례없는 속도로 한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행동에 큰 변화 야기
-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정치·경제·사회 등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는 재난 상황의 지속으로 연결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치안환경은 매우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통제에 중점을 기존의 경찰활동만으로는 변화된 치안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
- 전통적 경찰활동에서 대응은 성격상 사전적(proactive), 예방적(preventive)이기 보다는 반응적(reactive)이고 사건지향적(incident driven)인 특성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범죄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워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과 더불어 엄정 대응을 위한 전략적 경찰활동(Strategic Oriented Policing)이 필수적으로 요구
- 특히 학교폭력·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대응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중요

2. 사업개요

-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유관기관 공무원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치안취약계층 대상별(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의 개발
- 범죄예방활동 마일리지(포인트) 제도 시행
- 유관기관(지자체·교육청·경찰 등) 공무원 통합교육 실시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 전문가 인력풀 구성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협조부서(기관) : 도 저출산보전복지실, 여성가족정책관,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지자체 관련 부서 등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29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사후지원	피해자 보호 업무조력비	2022~	165	27	30	33	36	39
	가정폭력피해자 사례회의 운영비	2022~	25	3	4	5	6	7
	유관기관 통합교육	2022~	100	20	20	20	20	20

6. 기대효과

-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의 엄정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범죄의 감소 및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전략적 경찰활동 활성화에 기여
- 치안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획일화된 범죄예방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며, 다양한 지역 주민의 관심도 증대
- 유관기관 공무원 통합교육 실시 및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통한 업무 효율 증대, 궁극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판단과 현장 대응력 제고

3-1-3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찰교육 훈련을 추진

1. 배경 및 필요성

- 나날이 흉폭화·잔인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학교전담경찰관(SPO)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1,138명으로 증원되어 1인당 10.9개 학교를 담당
- 학교전담경찰관은 경찰-학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폭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경찰관 한명이 담당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으며, 전문성 및 인성이 부족한 경찰관이 배치되어 시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저버리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감소 뿐만 아니라 학내 안전감 제고, 경찰에 대한 태도 향상, 학생 및 교사의 인권보호, 그리고 관계기관들 사이의 협력 증진 등 다양한 성과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 실시 필요성 제기
- 청소년과 교육이라는 업무 특성에 맞는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성공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인권, 양성평등,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심리 상담, 상담 윤리, 피해자 심리 등의 커리큘럼을 마련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찰교육훈련의 추진이 필요

2. 사업개요

-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경찰교육훈련추진
- 사업대상 : 학교전담경찰관
- 사업기간 : 2023 ~

3. 사업내용

- 학교전담경찰관의 인력 확충
-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 실시
- 체계적인 경찰교육훈련의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협조부서(기관) : 경찰서, 도교육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89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학교전담경찰관 전문성 향상 교육훈련	학교전담경찰관 인력확충	2023~	-	-	-	-	-	-
	학교전담경찰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2023~	89	17	18	18	18	18

6. 기대효과

-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에 기여
- 학교전담경찰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로 인한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 향상
-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단순 사건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지자체- 학교 등과 경찰이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Problem Oriented Policing) 활성화에 기여

3-1-4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을 증원하여 담당 인구를 현실화하고, 여성청소년 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 등 인사 관련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강화, 근무 환경개선, 충분한 예산지원 등으로 장기 근무를 유도

1. 배경 및 필요성

- 아동·노인 학대를 포함한 가정폭력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사후관리를 위한 재발방지,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대예방 경찰관(APO) 제도를 2016년 4월에 신설하였으나 담당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
- 2020년 기준 충남의 학대예방경찰관은 26명으로 정원(29)명에 못 미치며, 충북 또한 정원(24명)에 3명 모자라는 21명으로써 학교경찰관 1명당 평균 6,000명 이상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 학대예방경찰관은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 노인·장애인학대, 스토킹 범죄까지 담당하는 등 업무의 영역이 매우 광범위해 현 인력으로 전문성을 키우기 보다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도 힘겨운 실정이며, 학대예방경찰관으로 활동하는 경찰관의 계급도 경사 이하로 집중되어 있어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발생

2. 사업개요

- 자치경찰을 통해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을 증원하여 담당 인구를 현실화하고,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치안취약 계층에 대한 학대 사건이 증가한 만큼 여성청소년 부서 근무자에 대한 승진 기회 확대 등 인사 관련 실질적인 인센티브의 강화, 근무 환경개선, 충분한 예산 지원 등으로 장기 근무 유도
- 사업대상 : 학대예방경찰관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 증원
- 인사 관련 인센티브의 강화
- 근무 환경개선
- 충분한 예산지원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협조부서(기관) : 경찰서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학대예방경찰관 인력확충	APO인력 증원	2022~	-	-	-	-	-	-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지원	2022~	50	10	10	10	10	10

6. 기대효과

- 학대예방경찰관의 사기 진작 및 전문성 강화에 기여
-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로 인한 지역 주민의 신뢰 향상
- 학대예방경찰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
- 지역 주민의 신고 활성화 및 치안취약계층의 보호안전망 확충에 기여

3-2-1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경미 가해자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가정폭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 체계를 통하여 가정폭력 징후가 있는 가정의 조기 발견 및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초기 상담·교육, 교정프로그램을 실시

1. 배경 및 필요성

- 충남지역의 경우, 2021년 6월 기준 가정폭력범죄 3회 이상 반복신고 불입건수는 25건(신고건수 대비 73.5%)으로 전국 평균 50.6% 대비 22.9% 증가
- 형사입건시에도 여전히 2/3 이상은 영장신청 또는 임시조치 없이 단순입건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반복신고 사건은 ‘재발우려가정’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
- 가정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들 수 있으며, 세대 간 전승되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체계를 통하여 가정폭력 징후가 있는 가정의 조기 발견 및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초기 상담·교육, 교정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

2. 사업개요

- 가정폭력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다기관 협력 체계를 통하여 가정폭력 징후가 있는 가정의 조기 발견 및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초기 상담·교육, 교정프로그램을 실시
 - 현재 경찰은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를 교육 및 교정프로그램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가정폭력 교육 및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성을 극대화
- 사업대상 :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초기 상담 및 교육
-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교정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
- 가정폭력 교육 및 교정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공
 - (가칭) 행복 가정안정 지원금 :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서약하고, 교육 및 교정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가정에 한하여 지원금 제공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사업부서 : 여성가족정책관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도 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2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지원	2022~	250	50	50	50	50	50

6. 기대효과

- 경미 가정폭력 가해자의 성역할 태도 및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재범 방지에 기여
- 가정폭력 범죄를 감소시키고,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체적·정서적 문제 완화
- 가정 내 폭력을 근절하여 가족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생활을 유지

3-2-2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지역별 여성으로 구성된 치안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역 치안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 및 취약점, 골목길의 가로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의 이상 유무, 귀갓길 위험지역,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조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한정된 경찰 인력만을 활용한 경찰활동으로는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화·지능화·첨단화·강력화하는 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
- 국가 중심의 치안문제 해결방식으로는 새로운 치안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치안활동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치안확보라는 거시적인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및 경찰, 지자체 등 공공부분, 민간부분, 시민사회가 상호의존적으로 협력하는 치안 거버넌스(Security Governance)의 필요성이 대두
- 지역사회 치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경찰, 지자체, 관계기관, 지역주민 등과 긴밀하고 체계적인 치안협력 네트워크 구축하여 치안공동체를 조성
- 최근 늦은 밤 또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행 및 살인 등을 행하는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여성 1인 가구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이 느끼는 범죄 두려움과 공포는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실정
-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범죄 두려움에 대해 선제적이고 세밀한 대응을 위해 여성 치안모니터링단의 필요성 제기

2. 사업개요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원룸촌 등 범죄 사각지대의 범죄예방을 위해 지역별 여성으로 구성된 치안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지역 치안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 및 취약점, 골목길의 가로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의 이상 유무, 귀갓길 위험지역,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할 수 있는 구조 마련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여성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지역별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위촉 및 운영
-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신고 및 개선 사항 피드백 프로그램 마련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조부서(기관) :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시군 경찰서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2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2022~	25	5	5	5	5	5

6. 기대효과

- 여성의 범죄 두려움 및 공포 감소
- 여성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찰정책에 반영하여 치안서비스의 대응성 향상
-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대한 지역 여성의 관심도 및 참여 증대
- 경찰과 시민 사이의 쌍방향 의사소통을 촉진
-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예방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효과
- 범죄예방활동의 효율적 수행으로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 조성

3-2-3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 개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경찰과 민간이 협력해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범죄예방 서비스를 추진

1. 배경 및 필요성

-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여성은 물론 도민전체의 불안심리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
-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의 경우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으로 발생하기 보다는 이미 과거부터 스토킹, 문자마 범죄, 여성 혐오범죄, 증오범죄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수법도 계속 진화
- 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해 경찰과 민간이 협력해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범죄예방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2. 사업개요

-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앱 내 같은 지역의 여성 가입자끼리 서로 연락할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위급한 상황 발생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긴급신호 버튼을 눌러 신고할 경우 경찰 및 등록된 지인에 현재 위치 전송, 1인 가구 여성이 일정기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등록해 놓은 다수의 구호자에게 GPS로 파악된 위치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하는 등의 범죄예방 서비스 추진
- 사업대상 : 충청남도 여성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여성 안심귀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공
- 지역별 여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공격적인 홍보
- 여성 치안모니터링단과 연계 운영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 건설정책과
- 사업부서 : 도 건설정책과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도 경찰청, CCTV 관제센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678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 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여성 안심귀가 어플리케이션 개발	스마트도시 광역 통합플랫폼 운영	2022~	678	558	30	30	30	30

6. 기대효과

-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감소 및 범죄예방 효과
-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 안정에 기여
-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범죄피해의 최소화
- 커뮤니티 기반 여성 네트워크 구축으로 예방적 경찰활동을 통한 여성의 범죄 두려움 감소
- 경찰 치안서비스의 대응성 향상 및 치안서비스 제공 비용의 절감 효과

3-2-4 범죄 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사업 추진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범죄 소식을 접할수록 여성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 및 두려움은 증대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민과 국민, 나아가 국민과 국가 간의 신뢰가 저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특히 늦은 밤 또는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 성폭행 및 살인 등을 행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밤 늦게 홀로 귀가하는 1인 가구 여성들의 범죄두려움은 가중되는 실정
-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5대 범죄가 감소한 데 반해 퇴거불응 및 주거침입 범죄는 2016년 11,631건에서 2020년 18,210건으로 약 5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주거침입 범죄의 증가 원인을 여성 1인 가구의 증가로 파악
-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여성 1인 가구는 261만 477가구에서 2020년 333만 8956가구로 21.8%나 급증하고 있어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의 범죄예방 및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기 위해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범죄의 기회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
- 따라서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이나 원룸촌 등 여성 대상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범시설물을 설치하여 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성 제기

2. 사업개요

- 야간 자체 발광 할 수 있는 축광석 설치, 야간 조도를 높이기 위한 도로

표지병 및 태양광 안심등 설치, 고가의 CCTV 설치가 어려운 범죄 취약 지역에 스마트보안등 설치, 범죄자의 범죄심리 억제에 위한 노면 표시, 비상벨 LED 안내판, 귀갓길에 친근한 이미지와 문구가 투영되는 로고 잭터 등을 설치하여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구조화

- 현재 각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여성안심귀갓길의 안내표지판은 고유번호, 도로명 주소, 단순 안내로 안내표기 방식이 차이가 있어 여성 및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위치를 전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 또는 위치값으로 안내표지판을 통일화하는 개선 작업 추진이 필요
-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 거주자 및 여성안심귀갓길 지역 거주자, 노인, 기초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충남형 안심홈세트 지원사업이 필요
- 충청남도 도시재생 및 공공디자인 구축 사업, 안전마을 조성 사업, 범죄 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사업 등은 경찰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과 지자체 도시개발 관련 전담 공무원 간의 긴밀한 협력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전체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범시설물 설치
- 안내표지판을 통일화하는 개선 작업 추진
- 충남형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추진
- 경찰-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모형 구축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시군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1,50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범죄취약지역환경개선 사업	스마트보안등 설치	2022~	1,000	100	150	200	250	300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2022~	500	100	100	100	100	100

6. 기대효과

- 범죄 기회의 감소에 의한 범죄예방효과
- 심리적 안전감 향상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 효과
- 다양한 범죄발생시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대민 피해 최소화
- 도시 및 공간 설계시 범죄예방적 고려에 대한 필요성과 인식 확대

3-3-1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들이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시스템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경찰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소외되는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배려와 이해,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며,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치안 복지를 실현
-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례없는 속도로 한국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의 일상과 행동에 큰 변화 야기
-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특정 범죄의 발생 및 피해에 상당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개학 및 등교 연기, 유치원 및 학교의 원격(비대면) 수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장기간 자택에 있을 수 밖에 없다보니 범죄 표적 및 범죄 가해자가 되는 양면적인 현상이 발생
-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 디지털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보호자의 부재나 가정불화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증가로 청소년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기 징후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

2. 사업개요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효과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신고가 없더라도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교육청-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들이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
- 사업대상 :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 교육청·지자체·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및 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각 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이 정보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
 -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의 돌봄과 사후지원 도모
 -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 협조부서(기관) : 시군 경찰서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872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위기청소년 선도 지원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2022~	872	172	175	175	175	175

6. 기대효과

- 위기의 징후를 보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속한 개입으로 범죄의 가해자 및 피해자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청소년의 안전환경 조성에 기여
- 학교폭력·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지자체공무원 등 업무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전문적인 교육을 통하여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들의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을 확립할 수 있는 계기 마련

3-3-2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밖 및 제도권 밖 위기 아동·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 사후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경찰-지자체 통합부서의 설치·운영

1. 배경 및 필요성

- 구조적·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자존감이 낮으며, 반사회적 행동의 경향이 높은 반면에 부모와 따뜻하고 깊은 유대감을 가진 청소년들은 아동기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존감의 수준이 높고, 이러한 높은 자존감은 범죄 행동과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
-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의 영향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 공격적 성향을 보이거나 폭력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 가해행동과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
- 기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학교폭력·가정폭력 범죄의 피해경험이 공격성 및 폭력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폭력의 순환(cycle of violence)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하게 개입하고, 이들을 체계적으로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

2. 사업개요

- 각종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학교 밖 및 제도권 밖 위기 아동·청소년을 상담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에 연계 및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는 쉼터를 제공하여 의료-생활-상담-학업-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 사후모니터링까지 할 수 있도록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추진하며, 이를 위한 경찰-지자체 통합부서의 설치·운영
- 사업대상 : 위기 아동·청소년
- 사업기간 : 2022 ~

3. 사업내용

-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위기 아동·청소년을 상담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에 신속 연계
 - 요보호 아동·청소년에게 쉼터 제공 및 의료-생활-상담-학업-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후모니터링
- 경찰-지자체 통합부서의 설치·운영
 - 위기 아동·청소년 대응지원팀을 설치하여 대응 1팀에는 학교예방경찰관과 지자체 위기청소년 전담 공무원, 대응 2팀에는 학대예방경찰관과 지자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합동 근무하며 사건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면 함께 출동할 수 있도록 지자체·경찰 간의 유기적 협력 모형 구축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산보육정책과
- 협조부서(기관) : 도 경찰청, 도 교육청, 시군 경찰서, 시군 청소년 관련 부서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10,354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청소년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청소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22~	25	5	5	5	5	5
	청소년통합관리시스템 운영	2022~	10,329	1,929	2,100	2,100	2100	2100

6. 기대효과

- 위기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경찰-지자체 통합부서의 설치·운영을 통한 업무 효율 증대,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상황의 판단 및 현장 대응력 제고
- 위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의료-생활-학업-자립 등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아동·청소년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촘촘한 아동·청소년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활성화

3-3-3 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노인, 장애인 관련 범죄예방과 사후대처를 위한 종합 계획 마련 시행

1.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약자가 범죄에 더 많이 희생되는 ‘치안 양극화’가 문제점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특화된 보호정책의 추진과 종합적·입체적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 충남은 2020년 기준 고령화율이 19%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서천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37.6%로 지역간 편차도 심화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 및 생명공학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반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감퇴에 따른 노인대상 사기 등 범죄도 지속증가
-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70만 명으로 장애등록자 수는 사회 전체 인구의 약 5%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보다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피해와 파급력이 크며 인지능력 부족에 따른 교통사고, 실종 등 사고 위험도 높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치안대책을 총 망라한 종합 대책 수립 요구도 증대
- 경찰의 역할이 범죄 단속자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배려와 존중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과 행복 증진은 물론 주민 모두가 동등한 기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반 여건 마련 필요

2. 사업개요

- 노인·장애인 치안종합대책으로서 범죄로부터 보호, 사고로부터 보호, 편의 증진 및 피해발생 사후조치를 포함하는 노인·장애인 치안종합계획 수립 시행
- 사업대상 : 도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노인·장애인 치안종합계획
 - 노인·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가정 내 노인·장애인 학대 예방 근절대책 추진, 노인·장애인 대상 사기·횡령 및 단속 강화, 장애 청소년 대상 학교폭력 등 범죄예방활동
 - 노인·장애인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정책 내실화,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대책
 - 장애인 인식개선 및 경찰관 교육, 점자 민원안내서·수어 활용, 민원안내서 글씨 크기 확대 제공 등 과제를 포함하는 종합대책 수립
 - 시군별 여건을 고려한 권역별 계획으로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조부서(기관) :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정책관, 도 경찰청, 도 교육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4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용역	2022~	40	40	-	-	-	-

6. 기대효과

-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보호기반 마련을 통해 치안불균형 해소
- 노인·장애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과 세심한 보호·지원
- 경찰관의 이해 및 공감도 제고

3-3-4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성폭력·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초기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 등에 있어 경찰과 유관기관의 공동대응을 위해 명확한 업무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초기 개입과 분리, 대응, 지원 등 경찰과 유관기관의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전이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사후관리 등에 대한 각 기관별 중복 및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찰과 유관기관의 업무협력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수적

2. 사업개요

- 성폭력·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초기 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 사후 관리 및 재범방지 등에 있어 경찰과 유관기관의 공동대응을 위해 명확한 업무협력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추진
- 사업대상 :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 사업기간 : 2022~

3. 사업내용

- 경찰과 유관기관의 공동대응을 위한 명확한 업무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성폭력·가정폭력 유관기관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2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2022~	25	5	5	5	5	5

6. 기대효과

- 성폭력·가정폭력의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대한 각 기관별 중복과 비효율성 문제 해결
- 범죄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사회 보호 및 적응을 도와주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명확하고 세부적인 업무협력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무 담당자의 책임과 권한이 명확해지고, 그로 인한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지역 맞춤형交通安全 관리 실현

4-1-1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교통취약자의 사고 현황과交通安全 취약지역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고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한 사고 예방 정책 제시

1. 배경 및 필요성

- 교통사고는 사고 발생지역과 사고 다발 특성의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감소방안이 도출되어야 지역과 여건에 맞는 효율적 예산집행이 가능함
- 충청남도의 전국 시도별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6년 18.2명에서 2020년 11.8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전국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 또한 2016년 8.4명에서 2020년 6.0명으로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망자 수 감소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어 현재의 사업운영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함

2. 사업개요

- 교통사고 다발지역 특성, 교통 취약자 사고 현황 및 전체 교통사고 취약 지역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시설물 설치 및 우선관리 지역 설정

3. 사업내용

- 교통사고 사상자 관련 자료인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SS)의 데이터와 소방본부의 교통사고 구급 출동 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취약자 사고 현황, 전체 교통사고 취약지역 분석
- 교통취약자 안전취약지역 안전시설물 설치 및 지역 맞춤형 교통취약자 안전관리 대책 수립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사업부서 : 교통정책과, 시군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41,5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계속	5,680	1,136	1,136	1,136	1,136	1,136
노인보호구역 개선	노인보호구역 개선	계속	16,930	3,386	3,386	3,386	3,386	3,386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계속	18,940	3,788	3,788	3,788	3,788	3,788

6. 기대효과

- 교통사고 취약자의 특성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 취약지역별로 교통시설의 설치 위치를 우선배정 함으로써 사고예방과 사상자 감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4-1-2 첨단 도로 위험도 평가기법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충청남도의 교통량, 도로구조, 사고정보 등을 활용한 도로 위험성 평가 모델과 교통안전 관련 다양한 자료수집 및 활용을 위한 교통정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함

1. 배경 및 필요성

- 교통사고는 도로시설 및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고, 지역 특정 지점에서 특정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유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 도로구조 불량구간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 조성이 요구 되고, 위험도로 및 반복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특정지점에 대해 사고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함

2. 사업개요

- 충남형 도로 위험성 평가기법 모델을 구축하고, 위험성 평가를 위한 지역의 각종 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함

3. 사업내용

- 교통량, 도로구조, 사고정보 등을 활용한 「충청남도 지능형 도로 위험성 평가 모델 구축 사업」 추진
- 교통안전 관련 다양한 자료수집 및 활용을 위한 「첨단 교통정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철도항공과
- 사업부서 : 도로철도항공과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90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도로계획및확충	지방도 도로정비계획 (국가교통DB 구축사업)	연중	305	61	61	61	61	61
	지방도 도로정비계획 (지방도 교통량조사 지원)	연중	600	120	120	120	120	120

6. 기대효과

-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대한 과학적 위험성 분석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 및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효과성 제고
- 교통정보 데이터 플랫폼 활용을 통한 교통 수단, 이용자, 보행자 등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충청남도 도로교통 생태계 형성

4-1-3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위험지역 첨단교통안전 보호시설 확충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생활도로 조성 및 보행자의 통행과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는 도로구간에 대한 보행 환경 개선

보행자 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들의 가시성 확보 및 주의환기를 위한 첨단 보조 장치 설치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교통사고 사망시 상태를 보면, 보행자가 40% 수준으로 가장 높고, 차량 탑승자 31%, 이륜차 탑승자 18% 순으로 발생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교통사망사고 분석 결과)
- 보행사망자는 주로 횡단중(58%), 보·차도 미분리도로(13%) 발생, 횡단 중 사망은 야간(62%)이 주간(38%)의 1.6배, 무단횡단(50.7%)도 다수 발생함
- 최근 5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인보행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고령자의 경우 보행 중 사망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 점유율은 높아질 전망으로 고령자특성을 고려한 보행자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함

[표 49] 최근 5년간(2015~2019) 지역별 어린이 보행 사망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망(명)	16	12	4	7	5	5	3	0	31	5	7	6	8	6	13	15	9	2

자료 : 경찰청, 2020.02.18. 보도자료

[표 50]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년도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6	11,425	866	10,693
2017	11,977	906	11,224
2018	11,815	842	11,124
2019	12,249	743	11,653
2020	9,739	628	9,233

자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2. 사업개요

- 충남도 차도폭 9m 미만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 점유율은 전체 사고의 63.9%, 사망자수 점유율 67.5%으로 이면도로의 안전성 개선 및 보행자 위험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 필요
- 횡단보도 대기장치 및 안전문구 설치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첨단 보조 장치를 활용하여 보행자 안전 강화
- 어린이 및 노인보행자 교통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신호등 설치 확대

3. 사업내용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 「시·군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 추진
- 「첨단 기술을 이용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사업」 추진
- 「야간 보행사고 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조명시설 확충 사업」 추진
- 「충청남도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도로철도항공과, 교통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74,46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도로교량 유지관리 및 재반영부 지원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연중	48,750	9,750	9,750	9,750	9,750	9,750
도로안전시설 확충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연중	25,710	5,142	5,142	5,142	5,142	5,142

6. 기대효과

- 도로시설 및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교통사고 잦은 곳을 개선하여 사망자수와 사고발생건수의 감소효과 기대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위한 안전 시설 및 침단 보조장치 설치로 어린이, 노인 보행사망자수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고 운전자들의 보행자 보호의무의식 제고

4-1-4 고령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

보호구역 설치와 함께 기존 설치 구역에 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이 요구됨

1. 배경 및 필요성

- 2017년 OECD 통계 기준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보행자 10만명당 사망자 12.8명으로 OECD 평균 2.8명의 4.5배에 이르고, 14세 이하 보행자의 경우 10만명당 사망자 0.5명으로 OECD 평균 0.2명의 2.5배 수준임

[표 51] 최근 5년간(2015~2019) 지역별 고령 보행 사망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망 (명)	469	211	184	146	129	112	66	8	543	145	195	201	325	287	358	416	379	92

자료 : 경찰청, 2020.02.18. 보도자료

2. 사업개요

- 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지정 및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정비는 미흡한 실정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정비가 필요함
- 2019년 기준 충청남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1,018개소, 노인보호구역 313개소 지정되어 있음(행정안전부 보호구역 지정 현황)

3. 사업내용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사업」 추진
-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35,87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도로안전시설 확충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연중	18,940	3,788	3,788	3,788	3,788	3,788
	노인보호구역 개선	연중	16,930	3,386	3,386	3,386	3,386	3,386

6. 기대효과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기지정 장소의 실태점검으로 어린이·노인 교통사고 감소효과 기대

4-2-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 및 교통복지 확대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충남 서천의 '100원 택시' 제도처럼 접근성이 높고 이용하기 쉬운 교통수단을 활성화하여 교통 복지 확대

1.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는 농촌지역이 많은 내륙권의 지역적 특성으로 고령 인구비율이 높고, 농촌지역의 교통복지가 열악한 상황임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지만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운전자(고령운전자) 중 면허를 반납한 인원의 비율은 2.06%(7만6002명)에 불과함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치사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 질수록 피해 정도도 심각함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2.9명으로 비고령운전자(1.7명)보다 1.8배 높았고,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운전자 나이가 많을 수록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큼

2. 사업개요

- 고령 운전자 면허반납은 교통복지 확대와 수레의 양쪽 바퀴처럼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고령운전자 스스로 운전할 때보다 운전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인식전환을 유도해야 함
-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등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병행되어야 함

3. 사업내용

- 충청남도 전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을 위한 충남형 교통 복지 사업」 추진

- 「충청남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를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 추진(지역별 주민 요구도에 따라 지역화폐, 교통카드, 대중교통 이용 바우처 등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시행)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사업부서 : 시군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4,31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운수업 지원 및 육성	농촌형 교통모델 (공공형 택시지원(농림부))	연중	4,310	862	862	862	862	862

6. 기대효과

- 교통복지확대를 통한 이동성보장으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임으로써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감소효과 기대

4-2-2 영업용 운전자(운수업체·종사자, 택시·화물차 운전자, 이륜 배달기사 등)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강화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과 함께 운전자에 대한 맞춤형 특별안전교육을 제도화하고,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체험형 안전교육을 내실화함

1. 배경 및 필요성

- 차종별 사망자 수는 승용차가 가장 많으나, 치사율 비교 시 화물차(3.4명)·이륜차(3.1명)가 승용차(1.5명)의 2배 이상이고, 사업용 차량 수(1.8백만대)가 비사업용(22백만대)보다 훨씬 적으나, 차량 1만대당 사망자는 사업용(4.1)이 비사업용(1.1)의 3.7배에 이룸(관계부처 합동,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분석 결과)
 - 화물차의 사망사고 중 비중이 가장 높고(33.0%), 치사율 및 대형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
- 이륜차로 인한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의 14.9% 차지하며 전체 사망사고 중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관계부처 합동,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분석 결과)
 - 이륜차 사망자(전체 사망 중 비율) : ‘17년 564명(13.5%) → ‘18년 537명(14.2%) → ‘19년 498명(14.9%)

2. 사업개요

-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을 유도하고,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을 강화함
- ‘배달 오토바이’ 사업주(운영자)에게 이륜차 운전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배달 업체 종사자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3. 사업내용

- 「사업용 차량 운전자 찾아가는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 「권역별 이륜차 운전자 체험형 안전교육 사업」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 사업부서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영업용 운전자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연중	-	-	-	-	-	-

6. 기대효과

- 운수사업자, 배달업 사업주에 대한 교통안전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업
용 차량 및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감소효과 기대

4-2-3 초·중·고, 대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 운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사항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가 활성화 되면서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아지고 있고, 관련 법령 개정으로 안전장구 착용,
통행방법 등 법적 규제가 강화되었음
-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 사상자수는 128명에서
481명으로 각각 282%, 276% 급증

2. 사업개요

-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정착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 교육대상이 학교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 및 대학생들이므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PM 이용 습관을
유도함

3. 사업내용

- 충청남도 교육청과 경찰이 공동으로 「충청남도 어린이 PM 안전운전
면허 사업」 추진
- 「이동형 PM 안전운전 체험교육 프로그램 사업」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 사업부서 :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도교육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운영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운영	연중	-	-	-	-	-	-

7. 기대효과

- 초·중·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감수성을 제고하여 PM 교통사고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아이가 안전한 충남’ 이미지 제고효과 기대

4-2-4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충청남도의 교통안전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함

1. 배경 및 필요성

- 연령대(유치원, 어린이, 청소년, 고령자)를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문화 확산

2. 사업개요

- 농촌지역 고령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및 교통안전용품(야광조끼, 야광지팡이 등) 보급 지속 추진
- 일상생활속 사고위험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통안전 체험시설 확충

3. 사업내용

- 「충남 교통안전 체험센터 구축 사업」 추진 및 운영
-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 사업부서 : 교통정책과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2,415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교통안전관리 사업	교통사고 줄이기 (범도민 교통안전 홍보캠페인)	연중	250	50	50	50	50	50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지원)	연중	500	100	100	100	100	100
	교통안전관리 업무 추진 (교통안전용품 구입지원)	연중	1,665	333	333	333	333	333

6. 기대효과

- 전 생애 주기별 도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한 의식을 고양하고, 경험과 실무 위주의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 효과성 제고 기대

4-3-1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도·단속

개요설명 요약지역·권역별 교통사고 유발 요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맞춤형 중점단속분야를 선정하고 연중 집중단속 실시

1. 배경 및 필요성

- 충청남도의 경우 지역별, 권역별 도로교통 환경이 다르고, 사고 유발요인도 상이함으로 과학적 분석을 통한 중점단속분야 도출이 필요함

2. 사업개요

- 충남경찰청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공동으로 교통안전대책을 위한 지역·권역별 실태분석을 통해 맞춤형 중점단속분야 도출함
- 충남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경찰서별 관할을 넘어 권역별 중점 단속 분야 선정 및 합동 단속을 추진함

3. 사업내용

- 「충청남도 지역·권역별 맞춤형 중점단속분야 분석 및 연중 집중단속계획」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도경찰청
- 사업부서 : 도경찰청, 경찰서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경찰서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도·단속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도·단속	연중	-	-	-	-	-	-

6. 기대효과

- 지역별 맞춤형 교통지도·단속으로 도민 만족도 제고 및 사고유발 요인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교통사고 감소 효과 기대

4-3-2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첨단 단속기법 활용 확대

인력 중심의 단속에서 탈피하여 무인교통단속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교통관리 체계에서 첨단 단속장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1. 배경 및 필요성

- 상습 과속·신호 위반 지점, 보호구역 등 상시 단속이 필요한 지점, 구간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함
- 도로교통관리체계 및 교통수단의 첨단화화 함께 교통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속장비의 첨단화가 필요함

2. 사업개요

- 충청남도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구축과 함께 교통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첨단 단속장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의 무인단속장비를 지속 확충하는 동시에 노후화된 장비 개선을 병행함

3. 사업내용

-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에 따른 첨단 교통단속 장비 도입 계획」 추진
- 「보호구역 및 상습 위반지역에 대한 무인교통단속장비(cctv) 확충 및 개선 사업」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교통정책과,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교통정책과, 도경찰청, 시군
- 협조부서(기관) : 자치경찰협력과, 도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60,2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도로안전시설 확충	교통안전사업추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지원)	연중	10,000	2,000	2,000	2,000	2,000	2,000
	교통안전사업추진 (ITS 구축지원)	연중	50,250	10,050	10,050	10,050	10,050	10,050

6. 기대효과

- 첨단 단속장비의 설치·운영으로 위험 행위별 단속의 효과성을 제고함으로써 운전자 준법의식 고취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 기대

4-3-3 고위험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지역·권역별 고위험운전행위에 대한 분석과 집중단속 계획 수립, 보호 구역 법규위반 단속 강화

1. 배경 및 필요성

-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사업용 차량의 고위험운전행위 집중 단속과 최근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이륜차·자전거·PM 등에 대한 취약 분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보행자) 보호를 위해 보호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함

2. 사업개요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난폭운전 등 사고유발 고위험운전행위에 대한 전략적 단속으로 교통법규 미준수 풍조를 근절함, 특히 상습·악성운전자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청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함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내 사고예방을 위한 집중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첨단 단속장비 설치를 확대함

3. 사업내용

- 「충청남도 지역·권역별 고위험운전행위 분석 및 근절 계획」 추진
- 「충청남도 보호구역 법규위반 실태 분석 및 단속 강화 계획」 추진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도경찰청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고위험 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고위험 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연중	-	-	-	-	-	-

6. 기대효과

- 지역별 고위험 법규위반행위(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에 대한 전략적 단속 및 고령자 거주가 많은 농촌지역과 어린이 왕래가 잦은 학원·유치원·어린이집 중심으로 교통안전 집중단속을 통해 교통사고 발생 및 사망자 감소 기대

5.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5-1-1 시군-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경찰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고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1.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분권형 경찰제도의 실현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함
- 현행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경찰조직의 신설 없이 사무가 이원화된 상황에서 시군과의 협력 및 네트워크의 미흡 문제가 발생됨
- 자치경찰 사무와 활동이 기초단체를 토대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구성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형식적 운영이 아닌 실무적 책임과 권한, 의무가 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지역사회 공동체 치안이 가능토록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 기능 및 위원장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개요

- 시군에 전담부서 및 인력을 배치하여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
-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
 - 기존 운영중인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을 포함시키는 방안
-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 수렴되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심의·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3. 사업내용

- ‘도-시-군-읍면동’ 까지 자치경찰의 주된 사업 및 중요 정책이 신속하게 이해·실시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및 인력을 구성
- 지역의 자치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초단위의 치안행정과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 마련

- 충남도와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교육청, 소방으로 연결되는 실무협의회의 구성
- 지역 주민과의 정기적 소통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 자치경찰위원장의 지역안전 관련 참여 범위 확대
 - 충남 15개 시군협의회 및 지방정부 관련기관 회의에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를 명시하여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47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치경찰위원회-시군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군과의 연계협력 강화	연중	47	7	10	10	10	10

6. 기대효과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자치치안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주민과의 정기적 소통방안을 마련 가능
- 자치경찰위원회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기관 및 주민의 현실적 요구를 청취 가능
- 도부터 기초단체의 하위 단위까지 전담부서 및 인력의 체계적 운용을 통해 지역 치안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과 동시에 책임있는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5-1-2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도와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하는 민관협력 플랫폼을 구축, 자치경찰 활동의 정책 및 주요 사업에 관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제의 조기 정착은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성패를 결정하게 되므로 도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상호협력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조직 및 기관에서 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운영이 마련되고 있지 못함
- 주민 의견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도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으나 통합적·종합적인 주민 의견수렴 및 공유체계를 구축하여 활동의 완성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충남도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검토와 관리를 통해 주민 친화형 자치경찰이 운영되어야 함

2. 사업개요

- 자치경찰의 사무 범위에 따라 세부 분야를 구성하고 자치경찰협의회(가칭)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
- 자치경찰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실무협의회 단계에서 주요 시책의 예산 및 기능의 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 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도가 수렴하게 되는 주민 및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3. 사업내용

- 충남도와 자치경찰위원회, 기초단체를 연계하는 자치경찰협의회 구성
- 참여 조직 및 자치경찰 실무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 구성
- 자치경찰활동 관련 예산 조정 협의기구 발족
- 충남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 시책에 대한 선정 및 집행력 강화를 위해 활동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프로그램 운영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치경찰-도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도와의 협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연중	-	-	-	-	-	-

6. 기대효과

- 도와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자치경찰협의회를 정기적으로 운영하여 상호 협력의 필요사항에 대한 도출이 가능함
- 도-자치경찰위원회 실무부서의 실무협의체의 운영으로 업무 조율이 가능하며 활동 중복에서 야기될 수 있는 조직 갈등의 사전 해결이 가능함
-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공유함으로써 주요 시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음

5-1-3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확대를 통한 위상 제고를 위하여 정책적·제도적 보완책 마련과 중앙부처 건의 지원

1.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의 치안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위험방지 사무에 있어 비리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
- 자치경찰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기관위임 사무로 평가될 정도로 인사나 조직 관리에서 국가의 관여가 강하게 존재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유롭고 주민자치 측면을 강조할 수 있도록 사무구성과 평정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책 마련필요성 대두

2. 사업개요

- 자치경찰위원회 권한 확대를 위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고, 중앙부처 건의 등 제반사항을 지원

3. 사업내용

-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승진 임용과 주요 보직의 전보권에 직접적 의견반영 가능하도록 임용권 행사 범위의 제도화
- 수시 또는 즉시성이 요구되는 인사 배치에 따른 치안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위임관계 명확화
- 승진, 근무평정, 파견결정 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견 반영구조 제도화 건의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치경찰위원회 위상강화를 위한 제도화 지원	-	연중	-	-	-	-	-	-

6. 기대효과

- 인사 운용의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도민의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
- 조직, 인사권에 대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위한 제도건의 등 실질적 자치경찰 사무 수행 효율화

5-2-1 자치경찰 교육과정 운영

자치경찰 및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관련기관 구성원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의 시행 취지와 업무수행에 대한 이해를 고취시키고 전문성 증진과 상호협력 강화 사업 전개

1.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경찰활동이 변화되고 있음. 일반 시민을 비롯하여 지역 내 공무원,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의 관심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제도 시행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한 인식 저조
- 자치경찰 사무 및 활동에 관하여 지역 내 공무원의 이해도가 낮은 문제는 지방행정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력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 발생
- 특히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경우, 변화하는 지역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신속한 인지와 적응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의 요구를 이해하여 자치경찰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훈련 필요
-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 및 지역 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자치경찰 사무 및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전문적인 교육과정 개설 필요

2. 사업개요

- 공공 및 지방행정 분야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자치경찰 사무 및 주요 활동에 대한 교육 실시
- 자치경찰 사무 및 지역 특성과 관련하여 교육훈련과정 및 교안을 개발
-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교육훈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전문교육훈련센터를 설치

3. 사업내용

-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직무교육과정 운영
- 충남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훈련 과정 개설 및 교안 개발
- 자치경찰 전문교육센터 설치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자치경찰협력과
- 협조기관 : 충남인재개발원, 경찰인재개발원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비예산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치경찰 교육과정 운영	도내 지방공무원 직무교육과정 운영	2022~	-	-	-	-	-	-
	충남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과정 운영	2022~	-	-	-	-	-	-

6. 기대효과

- 자치경찰의 취지 및 운영 목적에 대한 도내 공무원의 이해도 및 관련 업무 수행 능력 향상 가능
- 자치경찰의 특성 및 장점에 대한 인식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 확산 및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협력관계 강화 효과 기대
- 자치경찰사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향상
- 자치경찰 교육훈련에 대한 교육과정 및 교안 개발, 전문교육센터의 확보를 통해 타 지역대비 전문교육 입지 선점 가능

5-2-2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대도민 인식개선 및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자치경찰 활동 및 정책의 수용성을 향상시키고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접근의 홍보를 전개

1. 배경 및 필요성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변화의 체감이 낮고, 자치경찰로의 제도변화에 따른 내용적 차이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실정
-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주민들의 안전체감도가 증가(Alda, Bennett & Morabito, 2017; 박윤환·장현석, 2013)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자치경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활동에 대한 주민 신뢰 향상 필요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의 조직, 업무에 대한 홍보와 동시에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맞는 충남자치경찰 이미지 형성을 통한 자치경찰의 소속감 제고 필요성 대두

2. 사업개요

- 자치경찰로의 변화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수단을 선택하여 노출 빈도를 확대
-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방향과 충남 자치경찰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시각적 장치 도입
 - 충남 자치경찰만의 차별화된 시각적 이미지 구축으로 대 도민 가시적 홍보 효과 극대화 및 자치경찰 내부적 소속감 제고

3. 사업내용

- 전통적 방식의 대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자치경찰 홍보물 게시 및 이벤트 중심의 홍보영상 제작
- 충남자치경찰 캐릭터 제작
- 충남 자치경찰만의 차별화된 기동장비 도안 디자인 변경 시범운영 차량 운영
- 자치경찰 싸이카, 외근 근무자 복제 디자인 일부변경 추진
 - 충남자치경찰만의 차별화된 특성 반영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협조부서(기관) : 공보관, 도경찰청, 도교육청,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16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자치경찰 소속감 제고	이벤트 중심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물 게시	2022~2024	110	20	21	22	23	24
	충남자치경찰 차량도색 및 복제 디자인 일부 변경	2022	20	20				
	충남자치경찰 캐릭터 제작	2022	30	30	-	-	-	-

6. 기대효과

- 자치경찰의 취지 및 활동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공감대 확대
- 충남 자치경찰에 대한 고유 이미지의 형성을 통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구분 명확화 및 경찰행정 책임성 강화 및 도민 혼선 최소화
-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소속감 강화

5-2-3 디지털 미디어 홍보와 쌍방향 공보기능 강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홍보를 시행하고 주민과 소통하는 상시적 쌍방향 공보기능으로의 변화를 추진함

1. 배경 및 필요성

- 시민은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공개와 원활한 접근뿐만 아니라 참여 주체로서의 역할을 기대
-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주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자치경찰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의 마련 필요성 제기
- 대언론 홍보는 관 주도적인 측면의 단방향적 제공은 일방적 방식으로 원활한 소통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바, 주민 여론을 수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쌍방향 형태로 변화 요구
- 주민들이 활용하는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효과적인 전달 매체에 대한 선택과 개발을 통해 상시적인 홍보 채널 구축 필요

2. 사업개요

- 자치경찰 활동에 대해 실시간으로 소통·홍보할 수 있도록 기술팀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구성된 홍보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을 개발함
- 지역 주민 및 학생 등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이를 활용한 언론모니터링 기능 강화
- SNS 소통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디지털 미디어 송출 방식의 적극적 홍보활동 실시와 실시간 소통 채널 개설
- 자치경찰 사무별·지역불안요소 유형별 등으로 홍보 요소를 도출하고 집중 홍보 및 해당 요소에 대한 주민의 제보 수용



자료: <http://www.jeju.go.kr/jmp/talk/comm1.htm>

[그림 8] 제주 자치경찰의 온라인 대화방 ‘소통공감’

3. 사업내용

- 지역 주민 및 학생(초·중·고, 지역 대학)을 홍보도우미(가칭)로 선정하여 지역사회 홍보조직 구성
- SNS 소통 전담 조직을 구성 및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의 온라인 대화방을 개설
- 소통 및 홍보 활동을 적극행정과 연계하여 우수공무원 표창제도 시행
- 우수 홍보 참여자를 선발하여 자치경찰위원장 표창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사업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협조부서(기관) : 공보관, 도경찰청, 도교육청, 경찰서, 시군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26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디지털 홍보와 쌍방향 공보기능 강화	충남자치경찰 퀴즈 이벤트	SNS용 충남자치경찰 홍보물 제작	2022-2026	100	20	20	20	20	20
	SNS용 충남자치경찰 홍보물 제작			150	28	29	30	31	32
	충남자치경찰 홍보 우수 공무원 표창			10	2	2	2	2	2

6. 기대효과

-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홍보에 대한 민간참여 조직의 구성 및 운영으로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우호적·긍정적 이미지 제고
- 실시간 온라인 소통 채널을 마련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원활하게 하고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신속한 전파 및 지속적인 홍보 가능

5-3-1 자치경찰 성과관리

자치경찰활동에 대한 지표화 및 관리의 기준을 마련하여 개선 노력을 전개하고, 향상도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안을 마련

1.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경찰은 ‘치안종합성과평가’를 통해 관서·부서·개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목표 설정과 달성도 및 정책의 효과를 측정
- 자치경찰 성과에 대한 평가·관리체계 관련 논의가 가시화되지 않아 앞으로 지속관리를 위해 성과관리 체계 마련의 필요성 제기
- 자치경찰 활동에 관한 진단체계 수립을 통해 조직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 계기 마련
- 자치경찰의 업무 평가 및 성과 평가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 초기부터 활동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향 및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우선 적용
- 자치경찰의 핵심역량 및 중점 활동을 지역안전지수 등 평가제도와 종합 연계하여 사업운영의 효율성 강화 필요

2. 사업개요

- 지역 특성과 주민의 치안 요구도를 반영하여 경찰활동의 우선 순위 및 주요 시책을 설정하고 사업운영 관리 실시
-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충남형 성과 분석 제도 및 평가 지표 개발
- 주민의 치안요구와 자치경찰 관련 정책의 간극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핵심역량 및 우선활동 선정 체계 마련
- 지역안전지수와 연계하여 자치경찰활동의 지표선정과 지표관리, 종합평가와 환류 절차 마련

3. 사업내용

-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충남형 지표 개발
-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교통사고, 범죄분야) 중점의 개선과제 및 지표 평가
- 자치경찰사무 및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체감도 평가

- 기관간 협업 및 교육참여, 주요 시책 추진을 중심으로 하는 기관 참여도 평가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협력과
- 협조부서(기관) : 도경찰청, 경찰서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17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충남형 자치경찰사무 지표 개발 및 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2022~	70	30	10	10	10	10
	자치경찰사무 주민체감도 평가	2022~	100	20	20	20	20	20

6. 기대효과

- 자치경찰활동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점의 조기발견을 통한 대응과 지속 관리 가능
- 주요 업무의 성과지표에 대한 달성도를 평가하여 책임성 있는 사업 운영 가능
- 매년 주요 관리 지표와 신규지표를 발굴하여 지역의 안전체감도를 향상 시키고 지역안전지수와 연계된 관리를 통하여 동반 상승효과 기대

5-3-2 자치경찰 인센티브 및 수용성향상

자치경찰사무의 업무 추진과 참여·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및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여 대내외적인 사기진작과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함

1. 배경 및 필요성

- 조직 구성원 및 업무 담당자의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유인책 마련 필요
- 국가경찰은 국가공무원으로 승진 및 복리후생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현재 자치경찰은 파견형태로 운영되어 있어 보상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도·기초단체·산하기관의 부서 및 구성원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의무만을 요구하며 활동에 상응하는 보상체계가 논의되지 못해 형식적 협력관계에 그칠 우려 제기
- 적극적인 활동 수행을 위한 목적으로 각 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및 복리후생 제도의 보완이 요구됨
- 주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관계 강화 필요

2. 사업개요

- 자치경찰사무국 담당자 및 각 기관별 업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주민인권 존중 및 치안행정 개선 사례에 대한 포상 및 격려 제도 시행
-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 및 협력에 대한 우수 성과 포상 및 홍보

3. 사업내용

- 자치경찰사무국 및 기관별 업무 담당자의 성과금 지급
- 자치경찰사무국 업무 담당자의 차기 희망부서 우선 배정제도 마련
- 자치경찰의 근무 및 맞춤형 복지제도 마련(휴가 및 복지포인트 추가 부여 방안)

-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포상 및 협력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고과 반영 제도 마련(승진 가점 부여)
- 참여 및 협력에 관한 우수 시민·단체의 선발과 포상제도 마련

4. 추진체계

- 주관부서 : 자치경찰행정과
- 사업부서 : 도경찰청
- 협조기관 : 경찰서

5. 예산계획

- 소요예산액 : 8,250백만원
-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세부	사업기간	소요 예산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자치경찰 인센티브 및 복지향상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2022~	8,250	1,350	1,450	1,600	1,800	2,050

6. 기대효과

-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의 내부 협력을 강화하고 업무의 집중을 향상시켜 적극적인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가능
- 시행초기 설치부서의 회피현상을 해소하고 적극성·전문성을 확보한 실무자의 확보 가능
-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일반 주민에 대한 자치경찰위원회의 포상을 통해 자체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각 기관별로 자치경찰사무 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진작과 격려가 가능하고 관련 업무의 적극성 발휘 기대

제5장 행·재정계획 및 제언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예산계획

제3절 평가계획

1. 행정계획

■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 확산

- 자치경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내부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
 - 단기간의 과제와 중기적 관점의 과제들로 구분하고 충남경찰청 및 충남도청 모두의 이해와 수용성의 확산 필요
 - 이러한 수용성 확산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 교육과 함께 역량 교육의 병행이 필요하며 상호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

■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확보

- 자치경찰사무 수행 평가 및 보직 등에 대한 의견 등 권한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과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행사, 파견 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등 인사권 확대 방안 강구
- 국가재정지원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강구(국비지원 명문화, 자치경찰 교부세 신설 등)하고 충남도 차원에서의 재정을 마련하는 등 재정권의 확보
-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민주성 확보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의 원활한 운영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참여의 통로 확보

■ 주민참여와 주민통제 강화

- 주민통제의 주요한 요건은 정보의 공개와 접근성의 확보 및 평가와 협력으로 주민과 자치경찰위원회, 주민과 경찰, 자치경찰위원회와 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필요
- 자치경찰업무는 자치경찰의 공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이를 위해 명시적인 규정을 제정하여 업무보고와 주민에 의한 평가의 정례화 필요

■ 충남자치경찰위원회를 매개로 충남경찰청과 충남도청의 제도적 연계 확대

- 자치경찰 사무의 성과향상을 위해 충남경찰청과 충남도청의 제도들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조정 및 정리
 - 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해야 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하여 정부의 평가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자치경찰의 성과를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매개로 충남경찰청과 충남도청의 정책적 연계를 촉진

■ 예산의 연계를 통한 자치경찰사무의 성과 향상

- 경찰법에 따라 자치경찰사무에 필요한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되어지나 실제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업예산은 충남도의 치안과 관련한 부서에서 관할하는 예산이 더 광범위
 - 치안은 경찰활동만이 아니라 사회 인프라의 상호연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만큼 충남도의 치안관련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

■ 정보의 공유 확대를 통한 연계협력 강화 추진

- 연계와 협업은 정보의 공유와 공감대 형성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그 동안 미약했던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정보 연계 강화 필요
 - 데이터만의 공유를 벗어나 서로 다른 기관의 활발한 대면 활동을 통해 기관 간 방향과 목표의 조율 및 수단의 공유로 확대

■ 지역특성의 치안사업 발굴 확대

-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1호 사업 및 시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나 대부분 해당 사도와 시도경찰청의 올해 중점 과제나 사업으로 추진 중인 과제로 그 취지에 미흡
 -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단순히 치안시책을 개발하고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새로운 제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정비 수행
 - 충남경찰청의 업무현황과 충남도 등 관계기관의 협업 실태를 정비하면서 기존 업무 이외 환경변화와 지역사회의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치안시책을 개발
 -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남도와 시군별 중요 치안정책에 대한 논의들을 지속

■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주민생활에 밀접한 지역치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의 밀접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적인 활동 수행
 - 지역사회가 자치경찰의 보완적 치안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주민밀접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역치안기능에 대한 역량을 확보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관들의 실천의지 제고

- 자치경찰사무 부서를 선호부서로 만들기 위해 정·현원 확대를 통한 업무량 감소와 자치경찰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및 승진·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대처
 -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경찰에게 이관하는 제도가 아니며 범죄에 대한 경찰관의 집중도를 높이고 지역 여건에 부합한 치안시책을 마련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인식을 개선
 - 자치경찰업무 및 경찰관들에게 과감하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으로 근무여건의 개선 및 업무 집중도 향상 유도

■ 자치경찰 인력에 대한 사기양양 정책의 마련

- 자치경찰사무 담당 인력에 대한 복지와 처우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자치경찰 제도의 효율적 정착과 활성화를 도모
 - 자치경찰사무 담당 인력의 보지와 처우를 위해 관련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복무규정 등에도 관련 사항 등의 명시 필요

■ 자치경찰제도의 홍보와 인식공유 노력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경찰, 주민 등 이 제도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가 매우 낮은 만큼 관심도를 높이고 시행의 의미에 대한 인식제고 방안들을 다양하게 강구

2. 예산계획

1. 예산계획 총괄

(단위: 백만원)

목표	합	2022	2023	2024	2025	2026
연도별 예산	269,028	53,070	53,386	53,715	54,174	54,683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 운영기반 형성	1,518	252	339	309	309	309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23,945	4,163	4,683	4,833	5,033	5,233
종합적 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구현	14,918	3,176	2,850	2,907	2,964	3,021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관리 실현	219,760	43,952	43,952	43,952	43,952	43,952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8,887	1,527	1,562	1,714	1,916	2,168

2. 부문별 예산계획

■ 주민참여를 통한 민주적 자치경찰운영체계 구축

(단위: 백만원)

추진전략	실행과제	합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사회-경찰 신뢰와 협력을 통한 주민 참여 지원	자치경찰 민관협력 통합 논의 제도화	20	4	4	4	4	4
	자치경찰과 주민자치조직 네트워크 활성화	70	14	14	14	14	14
	참여확대를 위한 정책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250	50	50	50	50	50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상담실” 운영	30	-	30	-	-	-
	어린이·청소년 자치경찰 체험프로그램 운영	43	7	9	9	9	9
주민참여기반 교육과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전환 홍보활동 수행	주민공동체 조직의 치안활동 역량 강화	835	167	167	167	167	167
민간자원을 활용한 주민 실천 치안활동 강화	민간장비와 인력을 연계한 협력방법	50	10	10	10	10	10
	딥러닝 활용 주민참여 취약공간 정보공유 및 위험지도 제작	140	-	35	35	35	35
	지역대학-자치경찰 연계 범죄예방 교육봉사프로그램운영	80	-	20	20	20	20

■ 지역특성을 반영한 범죄예방 토대 마련

(단위: 백만원)

추진전략	실행과제	합	2022	2023	2024	2025	2026
지역별 범죄예방 안심환경 조성 위한 안전시설 설치확대	스마트치안행정을 위한 예측활동 데이터 통합활용체계 구축	250	-	100	50	50	50
	시군별 수요예측에 의한 경찰활동 지원	비예산	-	-	-	-	-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및 방범시설 설치 확대	22,080	4,080	4,200	4,400	4,600	4,800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주민 책임강화와 순찰제도 개선	도민생활중심 법교육 실시	100	20	20	20	20	20
	기초질서위반 책임성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추진	비예산	-	-	-	-	-
	다중운집행사 질서유지 및 업무 수행 기준 마련	비예산	-	-	-	-	-
	탄력순찰제도 보완 및 지역안전순찰 확대	비예산	-	-	-	-	-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력체계 운영	실종 및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간 연계관리	비예산	-	-	-	-	-
	주취자·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운영	1,500	60	360	360	360	360
	긴급상황 구급조치를 위한 자치경찰 교육훈련 실시	15	3	3	3	3	3

■ 종합적관리와 세심한 보호를 통한 치안복지 실현

(단위: 백만원)

추진전략	실행과제	합	2022	2023	2024	2025	2026
학교·가정 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적 범죄예방 활동 추진	시민 참여 중심의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활동	745	135	148	151	154	157
	학교폭력·가정폭력 업정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290	50	54	58	62	66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89	17	18	18	18	18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50	10	10	10	10	10
치안공동체 조성 과 첨단기술 활용을 통한 여성안전망 구축	가정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경미 가해자 교육 및 교정 프로그램 운영	250	50	50	50	50	50
	여성 치안모니터링단 운영	25	5	5	5	5	5
	여성 안심 어플리케이션 개발	678	558	30	30	30	30
	범죄 취약지역 맞춤형 방범시설물 설치	1,500	200	250	300	350	400
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위기 징후 아동·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872	172	175	175	175	175
	위기 아동·청소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354	1,934	2,105	2,105	2,105	2,105
	충남형 노인·장애인 종합 치안대책 수립	40	40	-	-	-	-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의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위한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25	5	5	5	5	5

■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관리 실현

(단위: 백만원)

추진전략	실행과제	합	2022	2023	2024	2025	2026
사고예방을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환경 개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대책 수립	41,550	8,310	8,310	8,310	8,310	8,310
	첨단 도로 위험도 평가기법을 통한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도로 환경 개선	905	181	181	181	181	181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 및 보행 위험지역 첨단교통안전 보호시설 확충	74,460	14,892	14,892	14,892	14,892	14,892
	고령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 환경 개선	35,870	7,174	7,174	7,174	7,174	7,174
대상·유형 맞춤형 교통안전 서비스 및 안전교육 확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개선 및 교통복지 확대	4,310	862	862	862	862	862
	영업용 운전자(운수업체·종사자, 택시·화물차 운전자, 이륜 배달기사 등) 교통안전 책임성 교육 강화	비예산	-	-	-	-	-
	초·중고, 대학생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과정 운영	비예산	-	-	-	-	-
	교통약자(고령자, 어린이)별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실시	2,415	483	483	483	483	483
교통안전대책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단속 강화	지역별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지도·단속	비예산	-	-	-	-	-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첨단 단속기법 활용 확대	60,250	12,050	12,050	12,050	12,050	12,050
	고위험운전행위 예방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전략적 단속	비예산	-	-	-	-	-

■ 연계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치안행정 관리시스템 구축

(단위: 백만원)

추진전략	실행과제	합	2022	2023	2024	2025	2026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경찰활동 조정·참여 가능 활성화	시군-자치경찰위원회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47	7	10	10	10	10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비예산	-	-	-	-	-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비예산	-	-	-	-	-
자치경찰제 주체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치경찰 교육과정 개설	비예산	-	-	-	-	-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자치경찰 이미지 홍보	160	70	21	22	23	24
	디지털 미디어 홍보와 쌍방향 공보기능 강화	260	50	51	52	53	54
자치경찰 책임성 강화 및 수용성 확대	자치경찰 성과관리	170	50	30	30	30	30
	자치경찰 인센티브 및 복지 향상	8,250	1,350	1,450	1,600	1,800	2,050

3. 평가계획

1. 자치경찰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 전략적 기획을 기반으로 한 성과관리체계 마련

- 성과관리는 업무의 추진에 이어 임무, 중장기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
 -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측정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국무조정실, 2015)
- 충남자치경찰의 미션과 전략 등은 전략목표와 성과목표로 구성되는 성과관리체계를 통해 구체화
- 충남자치경찰의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략기획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충남자치경찰비전은 자치경찰위원회와 충남도청, 충남경찰청의 협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만큼 성과관리체계에 역량을 집중하여 그 성과창출을 유도
 -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명확히 파악하고 비전과 전략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공감대와 참여를 도출
 - 전략기획은 자치경찰제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고 역량과 능력을 종합하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과정
- 전략기획은 미션, 비전,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체계로 구성됨
 -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며 이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선정

■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성과관리의 추진

- 성과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전략기획체계의 마련을 통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이를 실현하는 정보시스템의 도입이 필요
- 정보시스템은 비전과 전략, 성과지표 등을 실제적으로 측정하여 성과달성에 대한 결과 및 원인을 파악하고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도구

2.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조건과 고려사항

1) 효율적 성과관리를 위한 조건

■ 성과문화의 정착

- 자치경찰제는 새롭게 시작되는 제도로써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도의 성장과 발전에 한계
 - 구성원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도구로 성과관리가 능동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
 - 다른 일부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성과관리를 평가와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구성원들에게 성과관리는 긍정적인 조직문화로 받아들이는 데 제약
 - 성과관리를 시행한다고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성과문화의 기반이 필요

■ 성과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의지

- 성과관리체계는 의사결정자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적인 정착이 불가능
 - 의사결정자의 성과관리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성과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의 연속성 확보 필요
 - 충남자치경찰제의 발전과 선도적 역할에 대한 의지를 지속하고 성과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뢰를 조성
 -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성과관리를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미래지향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리더십 필요

■ 변화과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 성과관리는 성과표준과 매뉴얼, 객관적 정보, 성과측정과 활용, 성과결과의 공정한 반영, 성과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에 대한 신뢰성 필요
 - 자치경찰의 특성상 성과에 대한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방법들에 대한 객관성을 위해 성과측정방법, 목표 설정, 성과분석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필요

2) 성과지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 주민 중심의 성과지표 개발

-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체계로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 필요
 - 성과관련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의 확보를 바탕으로 측정요인의 구체화된 기술과 도민 중심의 이해와 접근성을 확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실적과 성과내용의 구체화가 필요
 - 도민들의 이해와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
 - 성과지표의 설정이 만족도 중심으로 구성될 수 있으나 이를 측정하고 조사하는 과학적 방법들을 사용

■ 관련기관 및 부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 자치경찰업무는 단일 기관이나 부서 등이 독립적으로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각 개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전체적인 성과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지며 성과관리에 대한 한계가 발생
 - 이해관계자의 협업을 강조하여 비전과 전략에서 이를 연계하여 통합할 수 있도록 개발
 - 모든 성과관리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축

참여 연구진

□ 연구 책임

고 승 희 연구위원

연구총괄 및 조직운영

□ 내부연구진

이상진 수석연구위원

생활안전

조 성 책임연구위원

거버넌스·생활안전

전지훈 책임연구위원

공동체·거버넌스

장창석 전문연구위원

법·제도

이홍택 전문연구위원

여성·청소년

목소리 연구원

현황분석 및 기초조사 분석

□ 외부연구진

김영식 교수(서원대학교)

교통안전

조민상 교수(신라대학교)

법제도·거버넌스

정병수 교수(세한대학교)

여성·청소년

□ 충남 자치경찰 비전수립 TF

최 호 택 교수

자치경찰위원

조 현 빈 교수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 건 수 교수

백석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 상 욱 과장

자치경찰행정과

김 영 일 과장

자치경찰협력과

최 귀 호 팀장

자치경찰행정과 인사팀

윤 치 원 팀장

자치경찰협력과 치안협력팀

강 성 만 팀장

자치경찰협력과 자치협력팀

□ 주관부서

백 은 숙 팀장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

유 상 근 주무관

자치경찰행정과 총무팀